

제60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10회 한국아동보호학회 / 제9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

## 아동학대 예방사업 30년의 회고와 전망



---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13:00 ~ 18: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한국아동보호학회 • 진선미 국회의원

주관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무궁화복지월드

후원 :  한국로슈진단  Kwangdong  
광동제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The 행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

DB생명

화광신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보호학회 무궁화복지월드



## 학술세미나 일정

시간	내용		
<b>&lt;제1부&gt;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b> 사회 : 김 지 현 박사(연구교육국장)			
13:00 ~ 14:00	개회사	이 배 근 회장(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인 사	문 영 희 회장(한국아동보호학회)	
	축 사	진 선 미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격려사	시 경 술 이사장(무궁화복지월드) 박 명 윤 소장(한국청소년연구소)	
	유공자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아동보호 대상 시상	
<b>&lt;제2부&gt;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60회 학술세미나</b> 사회 : 전 광 현 명예교수(서울신학대학교) / 통역 : 이 은 교(한국외국어대학교)			
14:00 ~ 14:40	주제발표 1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30년 회고와 전망	이 배 근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4:40 ~ 16:00	주제발표 2	대만의 아동학대 현황과 법적·제도적 대응	Dr. Max Lin (대만아동가족부조기금회)
16:00 ~ 16:10	휴식		
16:10 ~ 16:40	주제발표 3	한국에서의 아동학대예방과 민간단체의 역할	문 영 희 회장 (한국아동보호학회)
16:40 ~ 17:10	주제발표 4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60회 학술세미나 분석과 전망	박 은 미 교수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17:10 ~ 17:40	주제발표 5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법적·제도적 대응	강 동 욱 원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17:40 ~ 18:00	광고 및 폐회		



# 목 차

## 제 1 주제

[발표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30년 회고와 전망 - .....	1
-------------------------------------	---

## 제 2 주제

[발표문] Ecological Transition Model (ETM) of Child Protection in Taiwan.....	47
[번역문] 대만 아동 보호의 생태학적 전환 모델(ETM).....	62

## 제 3 주제

[발표문]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현황 및 역할과 기능 .....	79
--------------------------------------	----

## 제 4 주제

[발표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아동학대 연구동향 분석 .....	107
--------------------------------------	-----

## 제 5 주제

[발표문]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과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	127
--	-----



## 제 1 주제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30년 회고와 전망

이 배 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30년 회고와 전망

이배근(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 I. 아동학대예방 사업 30년의 회고

이병주는 ‘산하’에서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역사를 이루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신화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한 개인도 그렇지만 어떤 단체나 조직도 생명력이 있어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있으며 따라서 역사는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풀이 바람에 눕되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질긴 생명력으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30년 긴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출발이고 역사이며 또한 방향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30년의 회고와 전망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각 시대별로 협회에 맡겨진 사명과 풀어야 했던 과제가 있었다. 한국어린이재단 복지부장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서비스와 미아찾아주기종합센터 업무를 담당하던 필자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개정사업 간사장 업무 완수로 1988년 2월 7-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지역아동학대예방 컨퍼런스(Second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한국대표로 참석하게 되었고, 당시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ISPCAN: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부회장이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법학교수 듀크(Jaap E. Doek) 박사를 만나게 되어, 그해 11월 한국어린이재단(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듀크 박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아동학대 개입과 치료”를 주제로 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순회세미나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키는 전국적인 첫 시도가 되었으며, 1989년 3월 24일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유니세프와 한국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개설하였으나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하며, 1983년 한국어린이보호회(현 세이브더칠드런)가 어린이상담전화선을 개설하면서 일부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주로 어린이 고민 문제를 다루었다. 이어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가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한 바 있었으나 홍보활동의 미흡 등으로 연간 신고건수가 10여 사례에 불과하여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전개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30년의 활동을 시대적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2004년 협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초대 및 2대 회장을 역임

한 홍강의 전 서울대 교수님은 협회 15년사를 4기로 구분하여 1989년 창립부터 1994년을 정립기, 1994년부터 1998년을 확장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시민운동전개기, 2002년부터 2004년 까지를 협회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활동의 모색기로 정리하였다(홍강의, 협회 15주년 발전사 소고, 2004).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현황 및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회원 교육과 지부 창설을 하는 등의 초창기 활동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우리 사회에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를 사회문제화 하여 마침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예에 협회가 한 구석을 담당하였으며, 이로써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협회 15년사 기념 기획포럼 ‘한국의 아동보호 회고와 전망’에서 서울장신대 박은미 교수님(현 협회 부회장)은 홍강의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한국의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하여 협회가 기여한 바를 그 구체적인 활동에 기초하여 적시하였으며,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아동보호사업(Child Protective Service)이 제도적으로 시작되기까지 민간단체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시사해 주었다고 논평하였다. 이어서 2002년 이후의 활동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앞으로의 협회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사례판정위원회의 활성화나 사례발표회, 예방센터의 평가 및 모니터링 개발이나 예비신고자 교육, 지역사회복지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그 중심 되는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15년 동안의 활동이지만 이 기간 동안을 의미 있는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리하는 틀이 필요했던 바, 아마도 역대 회장의 임기를 기준으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데, 물론 이와 같은 기준은 널리 공감되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아동보호서비스(CPS) 전달체계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된 시점과 더불어 아동학대예방협회의 기능과 역할에는 큰 변화(예를 들면 신고상담과 예방교육과 같은 협회 지부의 활동)가 있었고, 앞으로의 협회 활동의 방향 제시에도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역할 분담이나 관계 설정에 비중을 두게 된다면, 센터 설립 전후를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박은미, 한국의 아동보호 : 회고와 전망‘ 종합토론)

이를 참고로 발표자는 협회 30년사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홍보와 교육 사업을 전개해온 협회가 창립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을 정착기(1989년 - 1999년)로, 정부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과 가해자 처벌 조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전국 16개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를 성장기(2000년-2009년), 그리고 협회가 자체 사무실을 설치하고 서울시에 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및 민간단체 기금개발을 통한 아동학대 상담 치료 사업을 활성화하며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지원과 부모교육 및 아동보호사와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10년간을 확장기(2010년 - 현재)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 I. 정착기(1989년 - 1999년)

## 1. 협회 창립과 지부 설립

1988년에 개최된 서울 올림픽은 5천년 역사를 통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온 나라가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급성장에 어울리지 않게 아동 분야에 있어서는 전쟁과 빈곤에 시달리던 1957년에 제정된 어린이헌장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요청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복지재단은 어린이헌장 개정 기초위원회, 전문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정부는 1988년 5월 5일 개정어린이헌장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빌딩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그 드리우는 그림자는 길어지듯이 아동복지에 있어서는 빈곤과 가정폭력으로 가족해체가 늘어가고 부모를 잃거나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과 기아, 미아, 아동유괴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11월 한국어린이재단은 보건복지부와 유니세프의 후원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이자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이던 듀크 박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11월 29일 여성개발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예방 - 확인, 치료 및 예방 그리고 아동의 권리’(Child Abuse and Neglect - Identification, Treatment and Prevention, and the Rights of the Children)를 주제로 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차윤근 한국어린이재단 회장의 인사와 박연수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 국장의 축사, 랄프 디아즈(Ralph Diaz) 유니세프 한국 대표의 격려사로 개최된 세미나는 박연수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장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정책’ 특강에 이어 홍강의 초대 회장의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 여성개발원 변화순 박사의 ‘아동방임의 현황과 대책’, 한국어린이재단 복지부장(협회 초대 사무국장) 이배근의 “아동유괴의 현황과 대책”, 충북대학교 허석렬 교수의 “근로아동의 현황과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세미나에 17명의 전국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공무원, 14명의 지역 아동상담소 소장, 관련 대학 교수 10명, 44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하였다.

이어 1988년 11월 30일부터 1주간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한 지방 순회 세미나가 듀크 박사의 강연과 이배근 복지부장(한국어린이재단)의 통역으로 부산(150명 참석), 대구(250명 참석), 광주(80명 참석), 대전(120명 참석) 등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시민사회에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대책 수립의 시급성이 부각되자 1989년 1월 9일 한국어린이재단은 기존의 아동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영양, 환경을 포함한 아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어린이 헌장 개정 기초위원들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협회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니세프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1989년 3월 24일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립하였다.

1989년 3월 24일 오후 4시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홍강의, 박명운, 김석산, 이배근, 성민선, 이영희, 손종세, 이재연, 임종운, 차원재, 윤종구, 임광진, 김재현, 변화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린이재단 차윤근 회장의 개회사, 보건복지부 변희남 가정복지국장 및 유니세프 랄프 디아즈 대표의 격려사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배근의 준비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임시의장 홍강의를 포함한 박명운, 김석산, 이배근, 이재연, 이영희, 성민선 등

7명이 발기인으로 등록하고 통과된 정관에 따라 초대 회장에 홍강익, 부회장에 박명윤, 사무국장에 이배근이 선임되었다.

창립 당시 협회의 사업은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에 관한 제반사업,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학술 활동, 홍보 및 출판 사업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센터 및 상담전화 운영, 부모교육, 사례연구 및 사례연구집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등이었다.

처음에는 '국제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라는 명칭을 본받아 '한국아동학대 및 방임예방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창립 당일 유사한 의미의 학대와 방임이 중복되고 단체명으로는 너무 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명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한국어린이재단 전국 14개 시·도 지부를 중심으로 협회 지부(지역별 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아동학대 사례 신고, 상담 치료 및 예방 캠페인 전개와 아울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도별 협회 지부 설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협회 지부 및 아동학대 신고센터 설립(1989년 - 1999년).

	설립 연월일	지부 및 센터 명	지부 및 센터장
1	1989년 5월 16일	광주지부 광주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서광우
2	1990년 4월 6일	부산지부 부산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김상도
3	1990년 4월 7일	경남지부 마산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정관용
4	1990년 5월 18일	경기지부 수원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강준렬
5	1990년 6월 23일	경북지부 포항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오현태
6	1990년 8월 8일	대전지부 대전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이재현
7	1991년 1월 24일	전북지부 전주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윤희병
8	1991년 6월 28일	대구지부 대구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백유영
9	1992년 5월 15일	충남지부 천안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정관용
10	1996년 10월 22일	인천지부 인천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박병만
11	1996년 12월 4일	충북지부 청주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박락규
12	1996년 12월 12일	전남지부 나주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이상호
13	1996년 12월 19일	강원지부 춘천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최윤선
14	1997년 2월 27일	제주지부 제주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김정현
15	1999년 5월 30일	부천시회 부천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16	1999년 11월 23일	동해지회 동해아동학대 상담신고센터	

##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술 세미나 및 사례발표회 개최

이 시기에 협회는 한국어린이재단 본부와 16개 시·도 아동학대예방 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및 세미나와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한국어린이재단은 본부 및 16개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직원세미나(in service training)를 10회 개최하고, 자체 워크숍을 1회 실시함으로써 한국어린이재단은 협회와 함께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전국 16개 시·도를 경

인지역, 중부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등 4개 지역권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례회를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와 홍보에 기여하였다.

## 1) 학술세미나 개최

이시기에 협회는 22회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로 시대적 욕구와 아동학대 예방 및 법적 제도적 대처방안 모색 및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제고를 다루었다. 또한 학부모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양육, 학대피해아동 상담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 연도별 학술세미나 개최, 자체 교육, 워크숍 및 예방 캠페인(1988년 - 1999년)

구분	일자	내용(회수 및 주제)
학 술 세 미 나	1988. 11. 02	제1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
	1989. 11. 16	제2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의 치료와 개입”
	1990. 03. 19	제3회 학술세미나 “교육 상황에 있어서의 체벌”
	1990. 11. 23	제4회 학술세미나 “아동 성폭행 실태와 과제”
	1991. 03. 30	제5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1991. 11. 23	제6회 학술세미나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1992. 03. 19	제7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전문적인 상담치료기술개발”
	1992. 11. 27	제8회 학술세미나 “현행법 체계와 아동학대”
	1993. 04. 02	제9회 학술세미나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
	1993. 11. 10	제10회 학술세미나 “공포 없는 아동 훈육”
	1994. 03. 24	제11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가정의 역기능”
	1994. 12. 02	제12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 예방대책 방안”
	1995. 04. 18	제13회 학술세미나 “한국 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5. 12. 19	제14회 학술세미나 “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1996. 05. 07	제15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1996. 12. 03	제16회 학술세미나 “아동의 권리와 법”
	1997. 05. 13	제17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치료와 사회사업적 개입”
	1997. 12. 02	제18회 학술세미나 “각국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과 정책”
	1998. 05. 12	제19회 학술세미나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1998. 11. 27	제20회 학술세미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아동학대”
	1999. 05. 08	제21회 학술세미나 “한국아동학대예방 치료활동의 현황과 과제”
	1999. 11. 25	제22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기 타	1999. 09. 15	아동·부모 교육 강좌 : “아동 양육 위기와 바람직한 아동 양육”
	1999. 10. 25	아동학대·가정위탁 실무자 교육 “피학대아동을 위한 효과적 상담기술”

자료: 홍강의, 한국의 아동학대예방과 권리보호 활동에 있어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역할, 2004

## 2) 사례발표회 개최

아동학대의 개입과 치료를 위한 실무자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전문적 기술 개발을 위해 1992년 7월부터 1999년 10월 25일까지 48회의 사례발표회가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병원, 대학 등에서 <표 3>과 같이 개최되었다

아동학대예방과 치료 관련 기관 실무자 및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학계 및 현장의 사례연구 발표를 통한 정부의 정책 마련과 학부모, 교사 등의 학대피해아동 치료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표 3> 사례발표회

회 수	개최일시	발표자	발표제목
1	1992.07.07	박정희(본 협회 사무국)	학대아동의 보호방안 연구
2	1992.08.05	김영숙(서울시립아동상담소)	알코홀리즘과 가학대증상이 있는 아버지의 아동 및 부인 학대사례
3	1992.09.29	박혜영(서울대병원사회사업가)	모-자 근친상간
4	1993.02.23	문향(대전종합사회복지관)	결손, 빈곤가정의 아동방임
5	1993.03.23	윤인채(서울시립아동상담소)	부모의 권위를 손상시킨 차단한 모정부정
6	1993.04.20	김연미(이대병원사회사업가)	병원 내에서의 아동유기의 문제
8	1993.09.21	이영희, 박혜영(서울대병원)	경련 및 행동문제를 보이는 환아의 아동 구타와 학대에 관한 Family Study
9	1994.04.26	권혜정(서울○○학교양호교사)	방임된 아동에 대한 양호교사의 상담사례
10	1994.05.31	남정아(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가정에서 방임된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수행 사례
11	1994.06.28	장화정(숙명여대 아동복지)	부자가정에서의 아동학대 (94.05.21 조선일보 개재)
12	1994.08.30	남민(인제의대상계백병원)	결손가정의 근친상간 및 문제행동에 대한 사례
13	1994.09.27	박혜영(서울대병원사회사업가)	근친상간(부-녀)사례
14	1994.10.25	이영주(사회복지사)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15	1994.11.29	한명아(대한사회복지사)	지속적 성폭행으로 미혼모된 사례
16	1994.12.27	이희숙(춘의사회복지관)	무속신앙을 가진 부에 의한 아동방임
17	1995.02.28	장영복(성폭력상담소자문의원)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례유형연구
18	1995.03.28	이동언(한양대 정신과)	아동방임 사례
19	1995.06.20	한영희(대한사회복지회)	아동방임 사례
20	1995.08.21	신현덕(서울시립아동상담소)	계부에 의한 성폭행사례
21	1995.09.26	최재옥(성남시아동복지지도원)	행정기관 아동학대사례개입
22	1995.10.31	남궁숙(서울경찰청민원실)	정신질환부에 살해된 아동사례
23	1996.02.27	남상진(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가정 내 학대부터 아동 분리보호
24	1996.06.25	안정자(서울시립아동상담소)	자녀에게 껌팔이 강요한 사례
25	1996.08.26	김지영(수서종합사회복지관)	부탄가스 흡입 청소년 사례
26	1996.09.24	장화정(성남아동학대상담센터)	결손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27	1996.10.29	정은(보라매청소년회관상담실장)	친가족에 의한 상습적 성학대
28	1996.11.26	박광만(서울시동부아동상담소)	사회부적응 가출아동의 사례연구
29	1996.12.24	신윤오(충남대의대)	아동학대가 동반된 소아정신과 환아의 임상적 특성

30	1997.01.28	이희숙(한라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	성학대받은 초등학교 여학생에 대한 놀이치료
31	1997.03.25	안동현(한양대의대교수)	유아에 대한 집단 성학대 사례
32	1997.04.29	이소영(부천시중4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소년소녀가장이 된 학대 아동 개입 사례
33	1997.05.27	손수영(춘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방임위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 사례
34	1997.06.24	이경진(강동성심병원사회사업가)	이유 없이 반복되는 아버지와 딸의 폭력
35	1997.08.23	손현미(한라아동학대상담센터 사회복지사)	방임된 청소년 사례
36	1997.09.30	고주애(한국복지재단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친부에 의한 성폭행
37	1997.10.28	홍성옥(인천세화복지관사회복지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의 자녀학대
38	1997.11.25	유기철(살레시오나눔의집 사회복지사)	부의 학대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사례
39	1997.12.30	전인혜(가톨릭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유아기 학대와 방임
40	1998.02.24	이화우(가톨릭대 강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41	1998.04.28	한전복(인천지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알코올 중독인 부의 자녀학대와 아동의 문제행동
42	1998.06.30	고주애(춘천종합사회복지관)	교사체벌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43	1998.08.25	박혜영(서울대병원 의료사회사업가)	엄마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6개월 여아사례
44	1998.10.27	유재령(한라어린이집 원장)	저소득지역의 방임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45	1999.03.30	남상진(인천연수종합사회복지관 대리)	아동학대로 인하여 장애아가 된 15개월 여아
46	1999.05.25	이은주(한국어린이보호재단)	부모의 신체적 학대로 인하여 꿈이 뒤바뀐 8세 여아
47	1999.08.31	고주애(춘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모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에 의한 행동장애
48	1999.10.25		위탁보호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 체계간의 협력을 통한 위기 개입 사례 연구, 친부에 의한 성적학대 개입 사례

자료: 홍강의, 한국의 아동학대예방과 권리보호 활동에 있어서의 역할, 2004.

### 3) 실무자 교육

협회는 1998년 2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2년간 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회의 교육

강좌를 <표 4>와 같이 실시하였다. 교육 강좌는 주로 아동학대 후유증, 개입방법, 아동권리 등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었다. 발표자는 법조인, 의료인, 사회복지학 교수 및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표 4> 교육 강좌(1998년 - 1999년)

순번	개최 연도	발표자	내용
1	1998. 02. 24	이명숙 변호사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
2	1998. 06. 30	이양희 교수 성균관대 아동학과	아동학대예방의 첫 단계 - 아동보호
3	1998. 08. 25	안동현 교수 한양대 정신과	아동학대 및 방임의 후유증
4	1998. 10. 27	김인숙 관장 수서종합사회복지관	IMF와 아동학대
5	1999. 02. 04	안동현 교수 한양대 정신과	아동학대의 후유증
6	1999. 03. 03	김인숙 관장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실현의 현주소
7	1999. 08. 31	공계순 강사 한림대	학대부모의 개입방법
8	1999. 10.25	허남순 교수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피학대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기술

자료: 홍강의, 한국의 아동학대예방과 권리보호 활동에 있어서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역할, 2004.

### 3. 사단법인 등록

초대 및 2대 홍강의 회장에 이어 1994년 3월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명운 회장은 1995년 6월 22일 창립총회 회의록을 포함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복지부에 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년 5월 제4대 성민선 회장이 취임한 후 1996년 10월 8일자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보건복지부 제206호)를 받게 되었다. 사단법인 등록 당시 등재된 임원은 회장 성민선, 부회장 김석산, 이배근, 이영희, 이재연, 이사 이양희, 노혜련, 김인숙, 안동현, 윤혜미, 이일하, 김수정 그리고 감사 손종세, 변화순 등이었다.

### 4.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개정 등 아동학대 관련법 제정을 위한 협회 활동

우리나라는 1961년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대피해아동의 문제와 학대가해자 처벌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4년 국회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황우여 의원) 요청으로 ‘캘리포니아 아동학대신고법(California Child Abuse Reporting Law)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방지법 시안’(이배근, 제12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1994)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어 1995년 가정폭력방지법 입법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아동학대의 발견·개입·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



치'(이배근, 한국여성의 전화, 1995)가 발표되었다. 서울 여성의 전화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소위원회(협회 이배근 부회장, 서울대 한인섭 교수,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사무국장)의 시안 작성 후 공청회를 거쳐 1998년 7월 1일을 기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1997년 9월 3일 아동학대방지법안 공청회가 개최되고, 아동학대 관련법 입법화를 위한 '대만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가 발표되었으며(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7. 12), 개정을 위한 4차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1998년 12월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 등에 의해 아동복지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1999년 2월 보건복지부가 4명의 전문위원을 위촉(이배근, 안동현, 이호균, 장화정)하여 경찰, 공무원, 교사 및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지침서를 제작 보급하면서 정부차원의 아동학대예방 개입이 전개되었고, 1999년 11월 당정합의를 통한 개정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우리 협회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아동학대 관련법의 입법화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 등을 앞장서서 전개하였다.

## 5.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홍보 출판, 상담, 기타 사업

협회가 창립되고 뿌리를 내리던 시기인 협회 정착기(1989년 - 1999년)에 협회는 사업목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 치료 사업에 더하여 협회를 시민사회에 각인시키고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전국적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캠페인,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으며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출판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주요 캠페인으로 서울, 춘천, 인천, 수원, 청주, 울산에서 사진전을 포함한 아동학대 추방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아내구타, 아동학대 추방을 위한 '가정폭력추방주간 캠페인'(1994. 5. 6 - 13), 해체된 가족 공동체를 위한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캠페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지원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등이 실시되었다.

주요 홍보활동을 요약해보면 서영훈 사건을 조명한 SBS TV '뉴스추적 사건과 사람들 - 아물지 않은 영혼의 상처'(1998. 4. 27), iTV의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1998. 9. 22), SBS TV의 '아빠를 감옥에 보내주세요'(1998. 9. 29), 신애야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 빛나간 믿음,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1998. 8. 21), SBS TV 특별생방송 '신애를 살립니다.'(1999. 8. 29) 등이 있다.

협회 정착기인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상담활동으로 아동학대 문의 및 안내(4,209건), 아동학대 상담치료(3,220건), 아동학대 긴급 상담(122건), 신고접수 및 사실 확인(3,090건) 등이 실시되었다. 부모교육은 8회(2,121명), 아동교육 10회(3,487명), 교사교육 3회(124명), 아동지킴이 교육 27회(1,479명), 실무자 교육 5회(983명), 대 시민 강좌 12회(2,740명), 지역아동학대예방교육 7회(752명) 등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서울대학교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홍강의 팀장, 박혜영 간사)이 창설되었으며(1998. 11), 안동현 교수 등의 노력으로 대한의사협회 내 연수가 활성화되고, 논문이 게재되었다(홍강의, 아동학대예방과 권리보호 활동에 있어서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역할, 2004)

출판 사업으로는 관련책자 및 사례집 발간이 37건이었다. ‘아동학대 : 한국의 현황과 치료개입(1989), 아동학대 관련 문헌록(1993), 아동학대 사례연구집(1994, 1998), 세미나 자료집(22건), 협회 사업안내서 제작(1990, 1998), 학술세미나 및 연구집 발간(33건),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1998-1999,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 6. 대외활동과 협력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 추진

협회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 가입하고(1994년 4월) 협회 임원들이 초대 사무국장(이배근), 이사 및 전문위원회위원장(홍강의, 이배근)으로 적극 참여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학교사회사업학회, 가족치료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관련단체와의 공동개최를 비롯한 연대 및 협력 사업에 참여하였다.

## 7. 최초의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설립 운영

우리나라 최초로 1999년 2월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 협회와 공동으로 마포구 합정동에 최초로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인 그룹홈을 설립하였다. 당시 한국어린이보호재단(현 세이브더칠드런) 합정동 1층 사무실을 아동숙사로 개조하여 시작한 ‘신나는 그룹홈’은 마포구의 일시보호시설 설립 허가를 받아 처음 7명의 학대피해아동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수가 증가되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 개입을 위해 마포구 서강동 단독 주택으로 이전하였다

## 8. 정부, 민간단체 및 개인 지원

정착기 10년간 협회 사업 및 운영은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 국내 아동복지기관의 지원과 임원들을 포함한 개인후원 및 서울시 등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정부, 민간단체 및 개인 지원

연도	단체·기관 명	지원액	내용
1997	시민운동지원기금	5,000,000원	아동학대 상담치료 시범사업 시행
1998	서울특별시	12,000,000원	학대 없는 세상으로 건전한 서울 만들기
1999	청소년보호위원회	12,000,000원	아동학대 추방으로 밝은 미래 만들기
총 계		29,000,000원	

## II. 성장기

협회의 염원이었던 아동학대예방과 가해자 처벌 조항이 법적으로 규정된 개정 아동복지법이 발효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간은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종래의 기관 단체 의존에서 벗어나 개인 후원자 모집을 통한 재정적 자립을 시도한 시기였다. 협회는 사무실을 1989년 창립부터 중구 무교동 한국어린이재단에 설치하였고, 2002년 말 마포구 서강동 세이브더칠드런으로, 2005년 9월 중구 신당동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다시 2009년 마포구 서강동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개입은 1999년 2월 보건복지부가 안동현, 이배근, 이호균, 장화정 등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여 경찰, 공무원, 교사 및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지침서를 제작 보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처벌,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등을 포함한 개정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중앙 및 16개 시도에 정부의 위탁을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국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경남 인애복지법인 등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다.

이에 협회는 시·도 지부의 아동학대 신고센터 업무를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제고와 교육 및 홍보 업무로 전환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노란리본달기 전국 캠페인, 부모교육,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동지킴이 교육, 사진전, 그림 공모전과 같은 홍보활동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 및 아동 대상 상담, 학대피해 아동 지원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 1.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적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시민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극히 미미 하였고 부모의 훈육과 체벌이 구별되지 않았으며 가정 내에서는 폐되어 자행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식이 미약하여 심각한 아동학대가 반복되어도 발견 및 치료가 쉽지 않았다. 협회는 우선 부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사진전시회, 그림 및 표어, 포스터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IPSCAN)의 노란리본(Yellow ribbon)을 한국 SGI의 후원으로 10만개를 제작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는 한국 SGI와 공동으로 아동학대가 없는 “어린이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100만인 서명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달기 전국 캠페인은 사진전을 포함한 길거리 홍보, 교사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와 부모,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으로 전개해나갔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아동청소년보호감시단 운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캠페인 참여 학생에게는 아동학대의 이해와 신고 요령을 포함한 활동지침을 교육하며 자원봉사활동 인증, 봉사활동 참여확인서 교부, 노란 리본 배지를 증정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지킴이단을 2002년 3월 5일에 발족시키고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전문서적을 통한 실무자 활용 교육 활동과 아동복지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등 아동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

년간 협회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총 35회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7,435명이 참여하였다.

<표 6>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연도	일시	장소	내용	비고
2002	04. 19	6호선 합정역사	사진 전시회 및 캠페인	1,300명
	06. 06	남산 백범광장	사진 전시회 및 캠페인	1,250명
	06. 18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실무자 교육 캠페인	30명
	07. 25	서울역 문화광장	사진 전시회 및 캠페인	1,150명
	08. 24	남대문 메사팝콘 홀	사진 전시회 및 캠페인	612명
	10. 19	서대문구 아현어린이집	아동, 부모, 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40명
	10. 25	서대문구 은화어린이집	아동, 부모, 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50명
	11. 09	마포구 한서초등학교	아동, 부모, 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160명
	12. 20	서울역 문화광장	사진 전시회 및 캠페인	900명
2003	03. 29	주민센터, 학교,	아동교육 4회	160명
	-12. 24	세이브더칠드런	부모교육 4회	
			실무자 교육 2회	
	09. 30	명지대 서울 캠퍼스	아동지킴이 교육 및 캠페인	430명
	10. 27	명지대 서울 캠퍼스	아동지킴이 교육 및 신고 안내	24명
2004	11. 11	명지대 서울 캠퍼스	아동지킴이 교육 및 캠페인	107명
	01. 25	서울역 신역사	아동학대 추방 사진전	
	03. 19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지킴이 교육 및 캠페인	54명
	05. 12	삼육보건대	예비신고의무자 교육 및 캠페인	65명
	05. 19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지킴이 교육 및 캠페인	55명
	07. 14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지킴이 교육 및 캠페인	54명
	07. 15	송실중학교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71명
	07. 16	소의초등학교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70명
	07. 19	서강초등학교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101명
	07. 28	6호선 삼각지역사	아동학대 추방 사진전	
	07. 28	6호선 합정역사	아동학대 추방 사진전	
	10.13-29	서울 여성 프라자	아동학대 추방 그림, 표어 공모전	
	11. 09	홍은2동주민자치센터	아동, 부모, 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40명
	11. 16	서울 여성프라자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및 표어공모전	
	11. 22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지킴이 교육 및 캠페인	55명
	11. 23	한양대 의대 강당	예비신고의무자 교육	36명
2009	11. 25	고창종합사회복지관	예방근절 서명 캠페인과 예방교육	300명
	12. 22	은평문화회관	예방 교육과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200명
계				7,434명

##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술 세미나

협회는 창립 첫 년도부터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23회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확인된 세미나 참가자수고 2,645명에 이르렀다. 학술

세미나는 매해 아동학대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이슈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학술세미나는 한양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세종문화회관, 백범기념관, 국회도서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개최되었다.

<표 7>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회 수	일자	장소	주제	참가 자수
23	2000. 06. 09	한양대학교동문회관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24	2000. 12. 14	한양대학교동문회관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25	2001. 07. 1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예방 교 육 프로그램	
26	2001. 11. 06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	
27	2002. 06. 04	명지대 행정동 강당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예방센터 1년 의 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306명
28	2002. 11. 19	명지대 본관 강당	청소년보호를 위한 또래 청소년상담 및 부모교육	100명
29	2003. 05. 21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 제도적 보 완을 위한 대토론회	150명
30	2003. 11. 19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아동성학대의 개입을 위한 효과적 방 안	150명
31	2004. 05. 06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한국의 아동보호 : 회고와 전망	154명
32	2004. 11. 16	여성프라자 대회의실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안	154명
33	2005. 05. 06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	지역사회변화와 아동학대예방	135명
34	2005. 11. 10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의 아동방임 : 부모의 방임인가? 사회의 방임인가?	150명
35	2006. 05. 25	한국청소년상담원	아동성학대 대응방안으로서의 법체계 와 전문기관의 역할	160명
36	2006. 11. 24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방안 그 룹홈·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150명
37	2007. 06. 15	한국청소년상담원	유괴, 실종아동과 아동보호대책	160명
38	2007. 11. 02	한국청소년상담원	동반자살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150명
39	2008. 06. 05	한국청소년상담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	270명
40	2008. 10. 24	국회도서관 대강당	한·일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및 제도 비교	256명
41	2009. 06. 0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100명
42	2009. 12. 22	은평 문화예술회관	아동학대의 이해와 제도적 개선	100명
계				2,645명

### 3. 사례발표회

1992년부터 협회 전국 지부를 통해 실시해오던 사례발표회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 16개 시도에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기관 자체 사례연구 활동을 활성화함에 따라 협회의 사례연구 발표회는 점차 감소하게 되었으나 협회는 사무실을 설치한 세이브더칠드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7회에 걸친 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표 8> 사례발표회

회수	개최일시	발표자	발표제목
1	2000.04.25	신승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부의 반복적 구타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이는 7세 남아
2	2000.09.05	김숙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방임으로 인한 정서부적응 아동
3	2000.09.05	최삼영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의료적 방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
4	2000.10.27	김윤주	청소년기 편부가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5	2000.12.05	박응철	방임된 아동에 대한 개입과 사후관리
6	2003.05.13	박영심 (인천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	정신질환이 있는 母와 알코올중독 父에 의한 정서학대 사례
7	2003.11.11	고성훈 (경기북부 아동학대예방 센터 상담원)	정신지체 친모의 구타로 인한 장기 파열 아동의 사례

### 4. 아동, 부모 교사 및 실무자 교육용 자료집 발간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후유증, 신고방법 및 보호체계 등 부모 교육, 현장 실무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 5. 상담 및 치료 사업

상담은 학대피해 가족, 학대피해 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중 120건이 실시되었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 연계,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치료 및 긴급구호, 학대피해아동 15명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제주도 자연탐방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 6. 지부 지회 및 후원회

2000년부터 정부가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16개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를 설치하고 한국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에 운영을 위탁 하면서 협회는 각 지역 지부 또는 지회를 활성화하고 2006년부터 지역별 또는 직능별 후원회를 결성하기 시작하여 2006년 19개, 2007년 20개 2008년 35개 후원회가 설립되었다.

<표 9> 연별 지부, 지회 및 후원회 운영현황

연도	운영 구분	내용
2002-2004	지부/지회	전국 18개 지부 및 지회 운영
2005	지부/지회	지부 지회 중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부와 신규 강원 동해 지회를 운영하고 부산, 경남, 경북 지부 및 부천 지회 폐쇄
2007	지회	충북 음성지회(11.01 우성수 지회장), 송파지회(12.13 윤영자 지회장)
	후원회	한국특수가족협회(남시원 회장), 종이공예마을(김은숙 회장), 경기 구리(김익기 회장), 경기 광주(성용 회장), 서울 성동(이강찬 회장), 무형문화재(배금용 회장), 충북 진천(이장수 회장), 명장(임충휴 회장), 인천 서구(양영모 회장), 예술인(최성기 회장), 서울 강북(김백용 회장), 전남 화순(정한오 회장), 서울 강서(김두겸 회장), 수원 영통(강완엽 회장), 전남 순천(김달호 회장), 전남 보성 벌교(전영주 회장), 광주 남구(이애심 회장), 광주 북구(김춘해 회장), 광주 광산(곽정숙 회장), 용천정사(구석고 회장), 한국기능산업문화개발협의회(강춘식 회장)
2008	지부/지회	양주 지회(01.23 곽광희 지회장), 충남 보령 지회(08.22 구종희 지회장)
	후원회	경기 평택(11.06 박찬구 회장)
2009	후원회	경기 남부(권영순 회장), 경기 북부(권두안 회장), 대구 북부(안상민 회장), 충남(한상기 회장), 제주(오정덕 회장), 경북(김정락 회장)

## 7. 홍보 출판, 기타

아동학대예방 리플렛 10,000부를 제작하여(2002.10.16) 경찰서, 초등학교 등 248개소 배포하고,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10,000부를 제작하여(2002.11.20) 서울시 소재 초·중·고 등 547개소 배포에 배포하였다. 리플렛과 포스터 외에 아동학대예방 지침서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을 25회 제작 하였으며, 협회 활동을 알리기 위해 분기별 'Newsletter(소식지)'를 발간하였다.

이 시기에 시·뉴스, 방송, TV 등 언론보도는 3,610건이었으며 인터넷 사이트 홍보가 8,600건이었다. 대표적으로 홍보활동이 활발했던 2004년 한 해 조선일보, 대한매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일보, 중앙일보, 사회복지신문, 연합뉴스, 여성동아(4월호), 코리아타임즈(5월호), 교육마당21(5월호), 사회복지신문(6월호), 시사매거진(5월호), 유아교육(7월호)신문, 잡지 등에 아동학대 예방과 협회활동이 홍보되었다.

2004년 협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현장 및 학계 인사 11명이 아동보호대상을 수상하였다. 김근용(대구), 김완진(전북), 김은영(광주), 김정미(경기), 류경희(충북), 오만록(동신대 교수), 이국재(대전), 이정희(서울), 장화정(중앙), 정동환(강원), 홍만기(제주) . 또한 정부로부터 개인 3명(홍강의, 이호균, 이광문) 및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 8. 정부, 민간단체 및 개인 지원

2000년부터 정부로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받은 한국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이 우리 협회에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예산 지원과 자체 자원개발을 통해 협회가 운영되었다.

<표 10> 정부, 민간단체 및 개인 지원

연도	단체·기관 명	지원액	내용
2000	서울시	15,000,000원	피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세이브더칠드런	64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한국어린이재단	5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기아대책기구	5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한국복지인력뱅크	24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2001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0,040,000원	Our-reach 프로그램과 Cyber space를 활용한 아동학대예방 사업
	서울시	8,000,000원	민간협력체계구축으로 피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안전망 확보
	세이브더칠드런	5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한국어린이재단	5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굿네이버스	52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2002	서울시	12,000,000원	교육체계구축(아동, 부모, 실무자 증심을



			통한 아동의 권리옹호 프로그램
	세이브더칠드런	5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한국어린이재단	2,1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굿네이버스	1,3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2003	한국아동단체협의회	4,000,000원	한국의 아동보호: 회고와 전망 기획포럼`
	세이브더칠드런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한국어린이재단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굿네이버스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693,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월계1동어린이집	265,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2004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950,000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 신고의무자 및 사례판정위원 교육
	서울시	10,000,000원	피학대아동을 위한 Keeper 네트워크 구축 사업
	세이브더칠드런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한국어린이재단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굿네이버스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기아대책기구	5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징코라이프	1,076,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2005	세이브더칠드런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서울시	17,300,000원	가족해체위기,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위기 개입
	한국어린이재단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굿네이버스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기아대책기구	5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징코라이프	1,076,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2006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8,700,000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 기획 사업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9,200,000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 기획 사업
2008	대영 EEC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여의도감리교회	443,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2009	한국SGI	36,300,000원	노란리본달기 전국캠페인 (리본 제작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3,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대영 EEC	1,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앙스모드	3,000,000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운영비
계		173,343,000원	

### 3. 확장기(2010 - 2019)

정부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지 10년이 경과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10년간은 아동복지법 처벌과 신고의무자 범위

학대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 2014년에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정부의 위탁 시설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인 그룹홈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다.

협회는 마포구 창전동(현 서강동)에 자체 사무실을 설치하고 서울시에 민간단체 등록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및 민간단체 기금개발을 통한 아동학대 상담 치료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16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을 지원하며, 부모교육 및 아동보호사와 아동권리전문지도사 양성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협회는 전국 시·도지부를 설립해나가면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협회사업을 시민사회에 홍보하며 매월 정기후원자 모집을 통한 자원개발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 1.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정부가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촉구하였으나 아동학대 신고율은 매우 낮았으며,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은 저조하였다. 이에 협회는 시민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갔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한국 SGI와 2014년 이후 무궁화복지월드는 우리 협회의 후원으로 전국 300여 문화회관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좋은 부모 튼튼한 어린이’ 노란리본달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협회 전국 지부 및 지회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이 학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개되어 120회 21,279명이 참여하였다.

<표 11> 아동학대 예방 노란리본달기 전국 캠페인과 부모 및 교사 교육

연도	일시	장소	내용 또는 대상	비고
2010	1월-12월	전국 문화회관	한국SGI 아동학대 예방 노란 리본 달기 100만인 서명운동	800명
	10.25	평택대학교	아동학대 예방 강의 및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	70명
2012	02.06-02.17	울산 지역	에듀 빅토리 울산 지역 보육 교사 대상 사이버 강의	350명
	08.14	오산 이림유치원	오산 이림유치원 교사 대상 예방 교육	19명
	10.08	협회 회의실	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 교육	27명
	11.02	협회 회의실	서경대학교 보육학과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 교육	18명
	11.16	협회 회의실	명지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 교육	15명
	12.6	협회 회의실	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대상	37명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 교육	
2013	04.24	강동구민회관	서울 강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교육	300명
	05.07	성남시 늘사랑어린이집	경기 성남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70명
	05.31	성남 시청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성남지회 교사 및 학부모 교육	800명
	06.13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회 원장 및 교사 교육	1,200명
	06.20	허준 박물관	강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원장 및 교사 교육	300명
	08.26	새마을 연수원	경기 성남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80명
	10.17	서울시 동작구 시온원	서울 시온원 교사 교육	35명
	10.19	협회 사무실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캠페인	5명
	10.26	협회 사무실	백석예술대 아동복지학과 캠페인	2명
	11.22	평택대학교	평택대 청소년복지학과 캠페인	40명
	11.25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기독교대 사회복지학과 캠페인	33명
	12.09	강남구 대치동 단대부중	단국대학교 부속중학교 교사 교육	80명
	12.16	고양시 일산 장성중학교	일산 장성중학교 교사 교육	70명
2014	12.18	평택시 복창 초등학교	복창초등학교 교사 교육	35명
	03.27	평택간호학원 강당	아동학대 예방 교육	50명
	03.28	성남시청 대회의실	민간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예방교육	650명
	03.28	오산간호학원 강당	아동학대 예방 교육	47명
	04.03	강북소방서	강북수유지회 및 강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100명
	04.04	김포시민회관	김포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550명
	04.07	협회 회의실	동덕여대사회복지과 학생 예방 교육	5명
	04.11	구로구 선한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교육	40명
	04.19	구로구청 대강당	구로구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550명
	04.21	춘천 e-스쿨 영재학원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예방교육	50명
	04.23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제4기동단 강당	경찰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200명
	04.23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은평, 마포, 서대문구 서울일반어린이집 교사	605명
	04.24	국립과학수사4기동단	경찰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200명
	05.02	에브리데이리테일본사	에브리데이리테일 MOU 체결, 캠페인	50명
	05.02	협회 회의실	서울신학대보육학과 학생 기관 방문	3명
	05.07	아세아보육교사 교육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원	75명
	05.07	성남시청 대회의실	성남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650명

	05.08	한국구화학교	교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70명
	05.09	광문초등학교	아동학대 예방 교육	46명
	05.12	역삼초등학교	아동학대 예방 교육	40명
	05.14	허준박물관 대강당	강서가정어린이집 연합회	145명
	05.19	원당초등학교 도서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	26명
	05.23	이대 서남병원 강당	양천구 민간일반형 어린이집연합회	75명
	05.27	용산구청 강당	용산구 민간일반형 어린이집연합회	170명
	06.02	발산1동 주민 센터	강서구 민간일반형 어린이집연합회	97명
	06.18	백범기념관 대강당	서울시가정어린이집 연합회	200명
	06.30	용문중학교 교사회의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38명
	07.02	부천 새소망의 집 강당	아동학대 예방 교육	27명
	09.18	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교원대학교 유치원 원장자격연수	450명
	09.26	협회 회의실	한국체육대 학생 아동학대예방 교육	3명
	10.10	선한 어린이집	선한어린이집, 성민어린이집교사 교육	23명
	10.14	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교원대학교 교장자격연수	310명
	10.24	강서구청 강당	강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298명
	10.25	협회 회의실	고려대 경영학부 동아리 대표	2명
2015	03.07	강서구 구민회관	강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교사교육	220명
	03.26	송파구 구민회관	송파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사교육	350명
	04.14	마포구청 대강당	마포구, 서대문구 어린이집 원장, 교사 교육	180명
	04.16	보령평생교육원	대전, 홍성, 예산 아동관련 전문가 교육	50명
	04.18	한라대 부속유치원 강당	제주도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교육	450명
	06.03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전북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교육	300명
	08.12	전북유아교육진흥원	공립유치원 교사 예방 교육	330명
	09.08	교원대 천안연수원	전국 공립 유치원 원감 예방 교육	370명
	11.14	용산 문화회관	좋은 부모 튼튼한 어린이 부모교육	170명
2016	03.15	종로구청강당	종로구아동위원 예방교육	70명
	04.23	강릉여성회관	강릉 속초지역 부모예방교육	300명
	04.29	교원대종합연수원	초등교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310명
	06.07	교원대종합연수원	초등교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273명
	06.11	영등포신길복지관	영등포아동도우미 예방교육	50명
	06.17	한국로슈진단	100만인 서명운동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120명
	06.18	관악문화회관	관악지역보호예방교육	320명

	07.12	교원대종합연수원	초등교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313명
	07.13	교원대종합연수원	중등교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276명
	08.16	교원대종합연수원	중등교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276명
	08.20	청주교육지청	부모교육	320명
	08.27	충주문화회관	부모교육	170명
	09.26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보건협회회원 교육	70명
	10.12	행복유치원	행복유치원 유아교육교사	100명
	10.21	대학로 옷찾사극장	아동위원, 보육교직원 교육	150명
2017	04.12	행복유치원	"좋은 부모 튼튼한 어린이"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및 캠페인	83명
	04.25	아주복지문화평생교육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시범교육	8명
	05.12	협회	아동학대 예방 대책과 방안	3명
	06.03	춘천문화회관	부모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98명
	06.07	아산시청	아동안전보호와 아동학대 대처방안	350명
	09.14	교원대학교	장애아 학대 예방대처방안 교사교육	270명
	09.26	협회 회의실	동덕여대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2명
	10.18	전북 과학대학교	아동학대 예방교육	70명
	10.26	협회 회의실	배화여자대학교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6명
	11.15	아산청소년문화회관	아도학대예방 교육 및 캠페인	190명
	12.06	협회	국민대학교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7명
2018	02.24	세종시 지부	아동학대 대응방안 및 캠페인	80명
	04.18	태안 원이중, 방포초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캠페인	245명
	05.02	서산교육지원청	아동학대예방 대책과 방안	87명
	05.02	태안송암초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26명
	05.11	관악구건강가정센터	아동학대 및 장애아학대 예방 및 대책방안	28명
	05.30	용인구성중학교	아동학대의 이해와 아동학대예방 교육	1,110명
	07.11	충남교육청	교육복지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92명
	07.12	서문교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 교육	89명
	07.19	의정부 청소년 센터	아동학대예방교육	23명
	08.01	의정부노인복지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안전 교육	44명
	08.10	파주올곡연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87명
	08.30	송죽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82명
	09.20	청주교원대	아동학대 이해와 대처방안	292명
	11.02	한강중학교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1,187명
	11.29	시흥 신천 중학교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27명
	12.15	송죽원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57명
	12.21	서산문화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차 교육	140명

	12.27	서산문화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차 교육	179명
2019	04.24	인천연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아동돌보미, 부모, 신고의무자 교육	74명
	04.26	인천연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아동돌보미, 부모, 신고의무자 교육	46명
	05.25	충남태안 만리포고교	교사 및 학부모 예비교육	45명
	05.29	충남태안 방포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예비교육	24명
	06.27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복지시설 돌보미 예비교육	29명
	10.28	경기가평장애인복지관	시설 종사자 예비 교육	24명
	11.08	충남아산제일호텔	충남지부교사 학부모 교육 및 캠페인	256명
	11.30	참사랑어머니회	신생아 건강관리사 예방교육 및 캠페인	50명
계				21,279명

## 2. 지부 및 지회, 후원회 설치 운영

확장기에 해당하는 2010년부터 2협회는 기존의 후원회조직을 16개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로 개편하면서 그간 소멸 또는 재 설립 등의 과정을 통해 2019년 현재 10개 지부, 52개 지회를 결성하였다.

<표 12> 연도별 협회 지부 및 지회, 후원회 설립 및 임명 (2010년 - 2019년)

연도	구분	지부, 지회 및 후원회
2010	후원회	평택후원회(11.06 박찬구 회장), 우정인후원회(11.12 구자현 회장),
2011	후원회	광주 서구 후원회(11.04), 강원도 동해시 후원회(11.04박남순 회장)
2012	지부	울산지부(01.13 윤길숙 지부장), 경기지부(03.16 구종회 지부장), 용인 지회(04.05 이춘근 지회장), 인천지부(06.01 김성신 지부장), 용인시 처인구지회(10.30 구은미 지회장), 경기도 수원지회(08.13 방영숙 지회장)
	후원회	군포 후원회(이석근 회장), 태극사 후원회(08.09 한기순 회장), 정선 후원회(09.24 진길우 회장), 삼척 후원회(04.30 임명순 회장),
2013	지부	서울(16개 지회): 구로(김지현 지회장, 양천(김실옥 지회장), 강북 삼각산, 강북 수유, 동작, 동작남부, 관악, 송파, 금천(김정애 지회장), 서대문, 금천 시흥, 금천 독산, 영등포, 동대문, 용산, 은평지회 경기도(6개소): 평택, 오산, 안성, 수원팔달, 고양, 파주지회 강원(1개소): 원주 지회, 경남(2개소): 진주, 김해 지회
2014	지부	충남지부(전해철 회장), 보령지회(04.16 전말숙 지회장)
2015	지회	홍성지회(04.16 김미영 지회장), 예산지회(04.16 박영란 지회장)

	후원회	인천시 계양구 후원회(05.29 조관순 회장)
2016	지회	경상남도 함안 지회(03.18 김동을 지회장), 경기도 이천시 지회(03.31 이현근 지회장) 서울시 9개 지회(04.26) : 강서구 지회(04.26), 노원구 지회, 동대문구 이문지회(이소정 지회장), 동대문구 지회, 동작구 상도 지회, 서초구 지회(03.25 유인애 지회장), 성북구 지회, 성동구 지회, 중랑구 지회, 경기도 경기지부 및 11개 지회 : 경기지부(03.03 황성식 지부장), 고양시 지회, 광명시 지회, 일산시 서구 지회, 안양시 지회, 안산시 지회, 용인시 기흥구 지회, 수원시 권선구 지회(03.08 이형진 지회장), 수원시 장안구 지회, 오산시 지회, 부천시 지회, 평택시 비전 지회 강원도 지부(04.26), 경상북도 지부(03.03 이진우 지부장), 울산광역시 울주군(03.18 정진우 지회장), 광주광역시 지부(11.10 권경희 지부장)
2017	지회	경기도 화성시 지회(임정빈 회장), 화성시 남부 지회(김정숙 회장), 화성시 서부 지회(강인선 회장), 화성시 동부 지회(최미화 회장), 성남시 분당구 지회(민경숙 회장), 충남 태안군 지회(한기섭 회장)
2018	지부	서울시 구로구 지회(02.20 김지현 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지부(박영찬 지부장) 경기도 화성 영통 지회(장미애 회장), 경기도 고양시 지회(08.21 송주희 회장), 광주 남구 지회(09.11 홍유미 회장), 경기도 파주시 지회(11.17 이윤경 회장), 인천 서구 지회(김중표 회장), 경기도 부천시 지회(12.17 황민아 회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 지회(12.11 이민정 회장), 경기도 화성시 병점 지회(12.11 엄정희 회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회(12.18 유희정 회장)
2019	지부	울산 중구 지회(01.18 김은아 회장), 포항시 남구 지회(01.18 권선미 회장), 서울시 도봉구 지회(01.31 윤금희 회장), 경북 경주시 지회(01.31 이인선 회장), 울산시 울주군 범서 지회(02.19 김선아 회장), 서울시 동작구 흑석 지회(02.19 송현옥 회장), 서울시 성북구 지회(10.02 박효정 회장), 충청남도 서산시 지회(10.29 김완식 회장)

### 3. 학술 세미나

이 시기 10년간 학술세미나는 22회 개최되었으며 주로 진선미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를 통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할 수 있었다. 2015년부터 우리 협회가 아동학대예방의 보다 전문적인 개입과 치료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기 위한 한국아동보호학회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새로 출발한 아동보호학회에서 전담하면서 주제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한국아동보호학회는 우리 협회와 공조하여 매년 2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

련 학계와 현장 실무자들의 연구논문을 통한 협회의 학술분야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13> 연도별 학술세미나

일자	내용
2010-12-10	제43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CYS-Net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체제 구축”
2011-05-27	제44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입”
2011-12-02	제45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의 영향과 피해자 보호”
2012-05-25	제46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 대처 방안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중심으로”
2013-05-22	제47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2013-12-20	제48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2014-05-30	제49회 학술세미나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2014-12-12	제50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보호방안”
2015-05-29	제51회 학술세미나 “양육자와 신고의무자로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태도”
2015-11-30	제52회 학술세미나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2016-03-18	제53회 학술세미나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2016-11-04	제54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2017-04-14	제55회 학술세미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2017-11-10	제56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2018-04-20	제57회 학술세미나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2018-11-16	제58회 학술세미나 “아동보호와 아동안전”
2019-05-17	제59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2015-11-29	제60회 학술세미나 “창립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4. 아동보호사 교육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증가하자 정부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발표하였고 아동관련 24개 직종 종사자들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다.

법으로 규정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부모 교육 및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15년 21명, 2016년 33명의 아동보호사 교육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표 14> 아동보호사 교육

구분	교육 일자	교육 장소	수료자
제1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5년 7월 11, 18, 25일	협회	13명
제2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5년 10월 17, 24, 31일	효상조 교육관	8명
제3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6년 1월 16, 23, 30일	협회	5명
제4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6년 4월 26, 27, 28일	효상조 교육관	18명
제5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6년 6월 16, 17, 18일	효상조 교육관	10명
계			54명

## 5.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

협회는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간 실시해온 아동보호사 교육을 2017년 8월 14일자로 국가가 인정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제2017-004179호)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과정 교육으로 전환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차에 걸쳐 34명의 아동권리전문지도사를 배출하였다.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과정이란 부모, 보육교직원, 교사,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사들로 하여금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부모교육, 상담, 지도를 통해 가정과 아동보육 및 보호, 교육 현장에서 아동권리 옹호와 증진 활동을 하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과정으로, 활동분야는 부모상담 지도, 아동 보육 및 교육 시설 대상 상담, 지도,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예방 교육지도, 아동권리, 아동권리교육 지도, 아동복지, 아동안전보호, 아동상담, 아동심리, 아동발달, 부모교육, 부모상담, 아동 관련법, 가족 관련법, 현장실습 I, II, 등 15과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15>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

구분	교육 일자	교육 장소	수료자
제1기 아동권리전문지도사	2018년 4월 21 - 5월 12일	협회	6명
제2기 아동권리전문지도사	2018년 7월 7일 - 21일	태안청소년수련원	7명
제3기 아동권리전문지도사	2018년 7월 13일 - 27일	협회	4명
제4기 아동권리전문지도사	2019년 9월 16일 - 11월 18일	무궁화복지월드	4명
제5기 아동권리전문지도사	2019년 9월 24일 - 11월 25일		13명
계			34명

## 6.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지원

협회는 2014년부터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으로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가해자인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상처받은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와 상담 치료, 교육 및 의료 지원, 학습 및 의류 구입 등을 위한 학대피해 아동 그룹홈을 지원하고 있다.

사내 사랑의 걷기 대회를 통해 지정기탁금을 전달한 한국로슈진단과 함께 서울, 경기, 울산, 마산 지역에서 선정된 그룹홈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회 인천 서구지회 김종표 회장(세우건설 대표)과 우리협회 협력기관 무궁화복지월드, 그리고와 국제위러브유에의 지원으로 2019년 현재 전국 16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을 <표 16>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 16> 지원 그룹홈 현황

	지원 그룹홈	지원 총액	아동수연 (연인원)	사용내역
2014-2015	경기 안산 신나는 그룹홈	3,000,000원	58명	생활환경 개선, 피복 구입, 문화 체험, 도서 구 입 및 정서지원
	마산다솜그룹홈	2,000,000원	5명	피복비, 생활필수품비, 주 식비, 학용품비, 프로그램비, 간식비
	서울시동남권아동보 호전문기관	3,000,000원	21명	전문상담사업 및 보 호지원 사업,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사업, 아동 학대예방교육사업
	경기 화성 그룹홈	900,000원	9명	학대피해아동 간식비 지 원
	피학대 아동 및 부모 상담	280,000원	21명	피학대아동부모협회, 집 단수용보호 피학대아동 구출, 기타
소 계		9,180,000원	399명(아 동 93명)	
2015-2016	경기 안산 신나는 그룹홈	2,500,000원	40명	생활환경 개선, 피복비, 구 입, 문화 체험, 도서 구입 및 정서지원
	마산 다솜 그룹홈	2,500,000원	45명	피복비, 생활지도실 비품 구입
	경기 평택시 아동보 호전문기관	2,500,000원	40명	전문상담사업 및 보호지 원 사업, 아동학대예방 부모 교육 자료집 개발

	학대피해아동 및 부모 모임	524,500원	1,423명	학대피해 아동 및 부모 상담
<b>소계</b>		8,024,500원	1,873명	
2016-2017	마산다솜그룹홈	2,500,000원	14명	피복,신발,생활가구 구입비,공예활동비,주말체험비
	경기안산 신나는 그룹홈	2,500,000원	36명	교복 및 체육복 등 피복 구입비, 원예치료활동비, 활동지원비
	경기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000,000원	16명	전문상담사업 및 보호지원 사업,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사업
	울산 신나는 아동쉼터	1,200,000원	31명	문화체험, 야외활동, 놀이기구 체험
	요셉의집	1,200,000원	12명	학대피해아동 교육지원비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	1,200,000원	12명	피학대아동교육비 및 부모 상담
<b>소계</b>		10,600,000원	4,220명	학대피해 아동 그룹홈, 가정, 부모 및 아동관련 보호 지도사
2017-2018	경남 마산 다솜그룹홈	1,500,000원	180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선물 구입비, 외부 문화 체험비
	울산 신나는 아동쉼터	1,500,000원	72명	정서지도를 위한 문화체험비(항공, 급식, 숙박비 등)
	서울이룸그룹홈	1,500,000원	60명	책상, 침대, 원목그네, 유화액자, 열기구 원목시계 구입비
	경기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000,000원	15명	식품, 피복, 도서, 가구, 유아용품(기저귀),등 구입비
	피학대 아동 및 부모 상담	1,500,000원	1,410명	피학대아동부모 상담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상담, 기타
	<b>소계</b>	7,000,000원	2,091명	
2018-2019	경기 오산 예담사랑의집	940,000원	66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외부 문화 체험, 정서지도
	경기 고양 일산별사랑	1,700,000원	77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외부 문화 체험, 정서지도

	경기 의정부 좋은이웃쉼터	1,100,000원	55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인천 부평 엘피스	1,950,000원	77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경기 성남 도담치료그룹홈	1,100,000원	77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충북 옥천 남부공동 생활가정	2,000,000원	55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강원 동해 헤오름쉼터	1,200,000원	44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대전 서구 기쁜우리 아동쉼터	1,200,000원	77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인천 연수구 드림일 심보호쉼터	1,200,000원	77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경북 구미 문수의 집	1,200,000원	77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 외부 문화 체험비
	강원 속초 보현의 집	1,200,000원	66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인천 계양 홀트미추홀	1,200,000원	77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정서지도, 외부 문화 체험비
	울산 중구 신나는아동쉼터	1,500,000원	55명	문화체험, 야외활동, 놀이기구 체험비
	경남 창원 마신 다솜 그룹홈	1,500,000원	160명	아동 피복, 아동 급식, 간식, 선물 구입비, 외부 문화 체험비
	서울 중랑 이름아동쉼터	1,500,000원	66명	교육 기자재, 놀이기구, 정서지도 및 치료
	경기 평택아동보호전 문기관	1,000,000원	12명	전문상담사업 및 보호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 부모 교육 자료집 개발
소계		21,490,000원	1,118명	
총계		28,490,000원	3,209명	

## 7. 홍보 출판사업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활동으로 홍보물 제작, 매년 아동학대예방협회 소식지(1997. 5년 창간),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를 해왔으며 성장기에 들어오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협회 홍보활동은 활성화되었다.

홍보 내용도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 등에서 TV 방송, 기획 연재(육아방송, 월간유아, 화광신문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지역의 범위가 경인 지역 위주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매일 협회 소식지를 실리고, 아동학대 이슈와 관련 연구 자료를 게재하였다.

<표 17> 홍보 활동

연도	내 용	회수
2011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및 사업 홍보 신문(15회), 잡지(3회), TV · 라디오 방송(15회)	30회
2012	10.25 KBS TV 사회2부(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11.09 동아일보, 11.09 MBC TV 생방송 오늘의 아침(11.09), 신문 기타 (19회)	21회
2013	05.29 경찰대학보, 08.23 E-TV, 10.14 한국사회복지학회, 11.14 경향신문 레이디 경향, 11.19 MBC-TV, 11.26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 저널”, 11.27 KBS 라디오 “생방송 글로벌 대한민국”, 12.12 SBS-TV “현장 21”, 12.17 SBS-TV “전문가 토론”, 화광신문 외 15회	24회
2014	02.04 시사포커스, 04.11 MBC TV 5시 이브닝 뉴스, 04.11 YTN 10시 나 이트 뉴스, 04.11 TV조선 뉴스쇼, 04.18 MBN TV 현장르포 특종세상, 04.21 MBC TV, 04.21 중부일보, 04.25 전주 JTV 시사진단, 04.29 CTS, 07.10 MBC TV 오늘의 아침, 08.20 실버타임즈, 11.19 전주 KBS ‘아침방 송’, 11.24 SBS TV 모닝와이드, 유아교육(12회)	24회
2015	01.14 세계일보 사회부, 01.15 조선일보, 01.17 TV조선, 01.19 복지TV, 01.19 조선일보, 01.26 JTBC 뉴스룸, 01.30 CGNTV, 02.04 시사포커스, 02.09 육아방송(2회), 03.10 서울여자대학교 방송국 S.W.B.S NEWS, 04.11 MBC TV 5시 이브닝 뉴스, 04.11 YTN 5시 뉴스, 04.16 MBC TV 좋은 아침, 04.18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04.21 중부일보, 04.25 JTV 전주방송 JTV 시사진단, 04.29 CTS, 05.19 대한뉴스, 05.21 MBC TV MBC 뉴스투데이, 07.10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07.16 KBS TV, 08.20 실버타임즈, 11.19 전주 KBS 아침방송, 11.24 SBS TV 모닝와이 드, 12.22 SBS TV 모닝와이드	27회

2016	01.30 CGN TV 뉴스, 02.16연합뉴스 TV 뉴스현장, 02.16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999, 02.17 교통방송 아침방송, 02.19 SBS TV 모닝와이드, 02.19 교통방송 주말아침 박혜진입니다, 02.22 코리아타임스 article, 03.12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03.14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999, 03.14 문화일보, 3.16 KTV 국민방송 정책오늘, 03.21 YTN 시사뉴스, 03.22, 마포FM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03.23 연합뉴스TV 뉴스현장13, 03.23 EBS TV EBS 뉴스, 03.23 YTN NEWS, 05.05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999, 05.08 MBC 이슈를 말한다, 07.31 연합뉴스 TV, 09.02 일요서울, 09.02 일요신문, 09.05 헬스앤라이프, 09.11 KBS 2TV 뉴스 따라잡기, 10.05 일요서울, 10.05 일요신문, 10.13 브릿지 뉴스, 10.13 국민일보, 11.18 TBC, 11.18 KBS 광주 남도투데이, 11.19 KBS 전주 아침방송, 11.29 SBS TV 모닝와이드, 12.22 SBS TV 모닝와이드, 신문 기타(5회)	39회
2017	02.21 YTN 수도권 투데이, 02.21 헤럴드, 02.21 CBS, 02.23 연합뉴스, 03.01 경기일보, 03.06 동아일보, 04.25 KBS TV 저녁 9시 뉴스, 04.27 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아침, 04.29 중앙일보, 05.01 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아침, 05.02 연합뉴스, 05.02 중앙일보, 05.04 KTV 집중분석, 07.28 천지일보 물망초, 08.22 미디어펜, 09.04 베이비뉴스 특별기고, 09.11, 베이비뉴스 특별기고, 09.22 베이비뉴스 특별기고, 10.19 EBS TV 저녁 뉴스, 11.07 동아일보, 11.16 KTV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16 인천신문, 12.01 TBS TV 김성수의 시사각각, 12.15 연합뉴스TV 연합뉴스	24회
2018	01.01 연합뉴스TV 연합뉴스, 01.02 CBS, 01.02 일요신문, 01.09 교통방송 아침뉴스, 01.09 JTBC 뉴스, 01.10, 경남일보, 01.17 연합뉴스TV 사회뉴스, 01.19 CBS, 02.21 YTN RADIO 수도권 투데이, 02.21 헤럴드, 02.21 CBS, 04.28 파이낸셜신문, 05.03 대구일보, 05.04 KBS 울산, 07.11 연합뉴스TV 저녁뉴스, 07.20 조선일보 사회면 A1, 07.20 합뉴스 TV 저녁뉴스, 07.22 SBS TV 모닝와이드, 08.22 문화일보, 09.28 뉴스시스, 11.21 KTV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26 YTN RADIO 수도권 투데이, 12 03 경기일보, 12.05 MBC RADIO 뉴스투데이, 12.09 MBC 시사	24회
2019	01.02 연합뉴스 아침 뉴스, 01.30 CGN TV 시사뉴스, 02.11 KBS 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04.23 국민일보, 04. 23 미디어투데이, 04. 26 뉴스핌, 05.07 서울신학대학보, 05.07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05.09 JTBC 시사뉴스, 05.23일 중앙일보 뉴스, 06.12 YTN 뉴스, KBS TV 06.15 아침방송, 06.21 세계일보, 07.12 KBS 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07.25 토마토 TV, 08.07 연합뉴스, 08.07 다큐작가, 08.20 법률방송, 0.29 MBCTV 실화탐사대, 신문 잡지 등(6회)	25회
계		238회

## 10. 민간단체 및 개인지원 현황(2010년 - 2019년 11월)

2010년부터 개인 후원자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고 CMS를 통한 전국 지회장들 중심의 신규 후원자 개발이 매월 증가하였다. 이 시기 자원개발에 특기할 사항은 2014년부터 한국로슈진단이 학대피해아동 그룹홈과 학대피해 예방 및 교육 캠페인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와 대학생 동아리 중심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 행사가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무궁화복지월드가 우리협회와 매년 2회 학술세미나를 공동주관하면서 세미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지원에 한국로슈진단 외에 무궁화복지월드 세우건설, 국제위러브유가 동참하고 있으며 광동제약의 정기적인 지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표 18> 정부, 민간단체 및 개인 지원 ( 2010년 ~ 2019년 9월 25일 )

연도	단체·기관 및 지원액
2010	한국SGI(3,000,000원)
2011	한국SGI(13,000,000원), 여의도 감리교회(200,000원)
2012	여의도감리교회(1,000,000원), 한국SGI(20,000,000원), 광동제약(2,000,000원)
2013	광동제약(2,000,000원), 한국SGI(20,000,000원) 여의도감리교회(1,141,000원)
2014	한국로슈진단(11,000,000원), 한국SGI(10,000,000원), 광동제약(2,000,000원), 에브리데이 리테일(6,400,000원), 여의도 감리교회(800,000원), 선한어린이집(224,900원)
2015	한국로슈진단(11,000,000원), 광동제약(5,000,000원), 에브리데이 리테일(6,000,000원), 여의도감리교회(600,000원), 나쁜 자석 메모리북 구매자 일동(765,429원),
2016	한국로슈진단(22,000,000원), 에브리데이 리테일(3,000,000원), 광동제약(5,000,000원), 여의도 감리교회(600,000원), YWCA(870,000원), 서광어린이집(300,000원)
2017	한국로슈진단(12,000,000원), 물망초 프로젝트(3,700,000원), 복수초 프로젝트(2,200,000원), 이마트 에브리데이(3,000,000원), 여의도 감리교회(607,000원)
2018	한국로슈진단(15,000,000원), 광동제약 (10,000,000원), 무궁화복지월드(1,000,000원), 고)이경원·박병호(3,000,000원), LUNA프로젝트(1,000,000원), 여의도 감리교회(410,000원), 보라프로젝트(322,000원), yana프로젝트(85,730원), 지부 후원회(임해환 300,000원),
2019	한국로슈진단(15,000,000원), 무궁화복지월드(8,400,000원), 세우건설(6,990,000원), 위러브유운동본부(6,000,000원), 여의도 감리교회(550,000원), 남서울실용전문학교 사회복지과(100,000원), 부산 경성대 동아리 S2YH(116,000원), 오창윤(1,000,000원), DB 생명(2,000,000 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00,000원), 한국사회복지사공제회(1,000,000원)

## II. 향후 30년의 전망

지난 30년을 회고해보면 앞으로 30년은 사회적 변동의 속도와 범위가 매우 빠르고 넓을 것이며 아동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는 아동 분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할 것이다.

정부가 아동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동보호기관의 전국적 확대 설치와 학대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회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 개입과 치료, 그리고 예방적 차원의 부모 및 관련 실무자 교육을 활성화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 시민운동인 ‘노란리본 전국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아동권리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을 적극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며,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구축하고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협회가 창립된 1989년은 21세기를 향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들의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Child Right)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해였다. 이후 지금까지 지구촌은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전해온 시기였으며, 향후 30년은 아동의 권리가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높은 수준으로 증진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예방과 치료를 넘어 학대피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보다 넓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1. ‘좋은 부모 튼튼한 어린이’ 아동학대예방 전국 캠페인 활성화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발생되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78%가 부모라는 사실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는 아동학대 발생을 근절시킬 수 없으며,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향후 핵가족화의 심화로 인해 상당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양육 기술 미숙이나 자녀에 대한 잘못된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가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부모가 변해야 자녀 학대가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부모 튼튼한 어린이’를 주제로 한 아동학대 예방 전국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협회는 전국 시도 지부와 시·군·구 지회 결성을 통한 학교, 학부모, 아동관련 시설,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원 설치와 아동학대예방 교육 강화



아동학대는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더 요구된다. 미래사회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유형이 보다 다양화 될 것이며, 그 정도가 보다 심화될 것이다 아동권리전문지도사 양성의 필요성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서 부모의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훈육 및 체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좋은 부모 튼튼한 어린이를 위한 부모의 아동양육과 태도, 부모기술과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보호, 보호, 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구체적 대처방안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아동 스스로 아동 권리를 학습하고 주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있다.

협회는 2018년부터 실시해온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아동권리교육원으로 재편하고 교육과정을 보다 심화하며,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을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의 활동분야를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및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부모나 교사뿐만 아니라 예비부모, 다문화가정, 취약 계층 및 위기의 부모 등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 3. 전국 시군구 지회 설치와 지부 지회 활성화

정부가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대를 통한 아동포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협회도 현재 일부 지역의 중복되는 지역 지회와 후원회를 단일화하고 미 결성 시·도 지부와 시·군·구를 조속히 결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앞으로 지부와 지회가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단위의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이나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 상담 치료시설의 운영은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4. 학술 연구 활동 강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과 치료 개입을 위한 전문적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 협회에서 출발한 한국아동보호학회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며, 매년 춘계 및 추계에 개최하는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의 학술적 깊이와 참여 연구자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5. 관련 기관과의 연대 강화와 협의 위상의 제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구축하고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우리 협회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6. 재정 자립과 자원 개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후원자 개발을 위한 자원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자립을 통해 협회가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과 학대피해 아동 및 가정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연구발표 논문

- 이배근(1988). Prospects and Counterplan on the Child Finding Center Program, 2<sup>nd</sup>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PSCAN, Bangkok, Thailand.
- 이배근(1988). 미아발생의 원인과 대책, 한국어린이재단.
- 이배근(1988). 아동유기의 현황과 대책, 한국어린이재단.
- 이배근(198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동광 통권 제16호, 한국어린이재단.
- 이배근.(1991). Child Welfare Institutions in Korea: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Report of Shiseido Asians Pacific Welfare Exchange Study Program on 1991 Study, Shiseido Social Welfare Foundation Cooperated by Japan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 이배근(1991). 아동학대에서의 감별진단과 치료 : 제6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 이배근(1992.).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 이배근(1993). 한국아동에 대한 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배근(1993). 학대피해아동 발견과 학대가정 평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 이배근(1993)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광 통권 제90호, 한국어린이재단. .
- 이배근(1994).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사업, 제5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세미나.
- 이배근(1994), 兒童虐待防止法 시안에 관한 연구, 제12회 한국아동예방협회 세미나.
- 이배근(1995). 아동학대의 발견·개입·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 이배근(1996). 아동학대의 사회사업적 개입, 한국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 96 추계 학술대회.
- 이배근(1996) 외국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 대전 세미나.
- 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문제와 대책방안. 통권 제8호, 한국사회복지연구원.
- 이배근( 1997). 臺灣의 兒童虐待 關聯法과 制度.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 이배근(1998). 국제협력을 위한 NGO의 역할과 전문 인력의 양성, 새시대정론 21.
- 이배근(1998). 아동의 권리와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고찰, 국회인권포럼 제1회 정책심포지엄, 국회보.
- 이배근(1998). 兒童虐待防止法 제정과 아동학대예방 대책, 제9회 한국아동복지학회 세미나.
- 이배근(1999). 가정폭력 유형별 상담, 제29기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서울여성의 전화.
- 이배근(1999). Family Issues and Empowerment of Parents in Korea, IPSCAN 5<sup>th</sup> Asian Conference on Child Protection.
- 이배근(1999).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와 후유증, 靑少年性保護 立法에 관한 公聽會, 국회정무위원회.
- 이배근(1999). 청소년학대의 실태 및 대처방식 연구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배근(2000). 해체가정과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배근(2000). 국제화 시대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 전문지 '복지사회 2000.
- 이배근(2000) 改正 兒童福祉法과 아동복지단체로서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역할, 한국아동단

체협의회.

- 이배근(2000).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행정기관의 협력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 이배근(2002). 아동청소년관련법·부처의 문제점과 미인가 시설, 2002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 정책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배근(2003). 미아 및 유괴사고, 학대로부터의 아동안전보호.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배근(2005).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가족보존의 원칙과 대리보호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 이배근(2006). 아동 권리와 부모 권리, 한국부모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부모교육학회.
- 이배근(2006).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공동체의 전략과 전망, 한국기독교정보학회,
- 이배근(2007). 미래사회 변화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배근(2007).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 및 치료, 가톨릭 사회복지회,
- 이배근(2008.06.18.). 아동청소년정책의 관제와 방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이배근(2009). 중앙입양지원기관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이배근(2012.07.17).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용인시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 이배근(2013).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방안,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 이배근(2014).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 성남시청.
- 이배근(2014). 아동학대와 경찰의 대응방안, 제4기동경찰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이배근(201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한국교원대학교.
- 이배근( 2014). 아동학대와 대처방안.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한국교원대학교.
- 이배근(2015). 아동학대의 이해와 관련법, 제주도 아동보육시설연합회.
- 이배근(2015).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제52회 학술세미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이배근(2016). 아동학대 예방과 상담전문요원의 역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배근(2016). 아동안전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춘천어린이집연합회.
- 이배근(2017)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방안, 중등학교 교장 자격 연수, 교원대학교.
- 이배근(20`18). 아동안전과 아동보호, 제5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학술세미나.
- 이배근(2019). 아동돌보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인천 연수건강가정지원센터.
- 이배근(2019). 학대피해아동 상담기법,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충남지부 세미나.
- 홍강익(2004.05.06). “아동학대예방과 권리보호활동에 있어서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역할”: 기획포럼 한국의 아동보호 회고와 전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부록 1 협회 연혁

- 1988.11.02 제1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개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
- 1989.01.09 한국어린이재단이 보건복지부와 유니세프의 지원 하에 협회창립위원회 구성
- 1989.03.24 국립중앙병원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 회장 홍강의,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초대 부회장 박명운 유니세프기획관 리관, 초대 사무국장 이배근 한국어린이재단 복지부장
- 1989.05.16 광주지부 설립
- 1989.11.16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의 치료와 개입”
- 1990.03.19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교육 상황에 있어서의 체벌”
- 1990.04.06 부산지부 설립
- 1990.04.07 경남지부 설립
- 1990.05.18 경기지부 설립
- 1990.06.23 경북지부 설립
- 1990.08.09 대전지부 설립
- 1990.11.23 제4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성폭행 실태와 과제”
- 1991.01.24 전북지부 설립
- 1991.03.30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 1991.06.28 대구지부 설립
- 1991.11.23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와 전문적인 상담치료 기술 개발”
- 1992.03.24 제2대 홍강의 회장 취임(서울대 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 1992.03.24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 1992.05.15 충남지부 설립
- 1992.11.27 제8회 학술세미나 개최 “현행법 체계와 아동학대”
- 1993.04.02 제9회 학술세미나 개최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
- 1993.05.13 아동학대방지법 시안 국회 제출
- 1993.11.10 제10회 학술세미나 개최 “공포 없는 아동 훈육”
- 1994.03.24 제3대 박명운 회장 취임(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 1994.03.24 제11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 1994.12.02 제12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방안”
- 1995.04.18 제13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
- 1995.12.19 제14회 학술세미나 개최 “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 1996.05.07 제4대 성민선 회장 취임(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96.05.07 제15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 1996.10.08 사단법인 설립허가(보건복지부 제206호)
- 1996.10.22 인천지부 설립
- 1996.12.03 제16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의 권리와 법”
- 1996.12.04 경북지부 설립
- 1996.12.12 전남지부 설립
- 1996.12.19 강원지부 설립
- 1997.02.27 제주지부 설립

1997.05.07 제3회 대한민국 5·5문화상 수상 (아동운동부문 단체)  
 1997.05.13 제17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 예방 치료와 사회사업 개입”  
 1997.05.30 부천시부 설립  
 1997.06 아동학대 상담치료시범사업 공모 당선 (지원 :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1997.12.02 제18회 학술세미나 개최 “각국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과 정책”  
 1998.02.24 제5대 김석산 회장 취임(한국복지재단 회장)  
 1998.04 서울시정참여사업공모 당선 (학대 없는 세상으로 건전한 서울 만들기)  
 1998.05.12 제19회 학술세미나 개최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1998.11.27 제20회 학술세미나 개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아동학대”  
 1999.04 서울시정참여사업공모 당선  
 (아동의 밝은 성장을 위한 아동학대 추방 범시민 운동)  
 1999.05 민중공동체 실천사업 공모 당선 (화합으로 폭력 없는 가정 및 사회 만들기)  
 1999.05.08.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1999.05.08. 제21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아동학대예방치료활동의 현황과 과제”  
 1999.05.20.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 오픈  
 1999.07.01. 청소년보호위원회 지원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전개  
 1999.09.15. 아동과 부모를 위한 교육 강좌 개최 “아동양육 위기와 바람직한 아동양육”  
 1999.10.25. 아동학대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실무자 교육 개최  
 “피학대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기술”  
 1999.11.23. 동해지회 창립  
 1999.11.25. 제22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2000.05 서울시정참여사업 공모당선(피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활용)  
 2000.05.25 학술심포지엄 개최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2000.06.09 제23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2000.09.27 아동학대 담당 실무자 교육 개최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및 전문 서비스 향상”  
 2000.12.14 제24회 학술세미나 개최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역할”  
 2001.01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공모당선  
 (out-reach program과 Cyber space 활용한 아동학대프로그램)  
 2001.03.06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아동·청소년 학대”  
 2001.04 서울시정참여사업 공모당선(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학대 아동을 위한 아동  
 보호 안전망 확보)  
 2001.07.13 제25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아동학대예방 교육프로그램”  
 2001.11.06 제26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  
 2002.04 서울시정참여사업 공모당선 - 교육체계 구축(아동-부모-실무자를 중심으로)을 통  
 한 아동의 권리보호 프로그램  
 2002.02.24~03.29 서울시 후원 아동지킴이 교육 및 활동  
 2002.06.18.~07.11 서울시 후원 실무자 교육 실시(총 4회)  
 2002.07.15 학대 아동 어린이 캠프(제주도 15명)

2002.07.25 02년 제1차 아동학대 추방캠페인 전개(서울역)  
 2002.08.24 2002년 제2차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전개(남대문 메사팝콘홀)  
 2002.10.16 서울시 후원 아동학대 추방을 위한 리플렛 제작 및 배포  
 2002.10.19~11.09 서울시 후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아현어린이집, 은화어린이집)  
 2002.10.30~31 서울시 후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하나서초등학교 5학년 4개반)  
 2002.11.19 제28회 학술세미나 개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또래 청소년 상담 및 부모 교육”  
 2002.11.20 서울시 후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2002.12.18 서울시 후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 지침서 제작  
 2002.12.20 2002년 제3차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전개(서울역)  
 2003.02.05 제6대 이배근 회장 취임(세이브더칠드런 회장)  
 2003.04.23 2003년 제1차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전개(합정역)  
 2003.05.21 제29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2003.06.27 2003년 제2차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전개(삼각지역)  
 2003.11.19 제30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성학대의 개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2004.01 서울시 공동모금회 공모 당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 신고의무자 및 사례판정위원 교육 사업)  
 2004.05 서울시정참여사업 공모당선(피학대 아동을 위한 Keeper 네트워크 구축사업)  
 2004.05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포럼 공모당선(한국의 아동보호 : 과제와 전망)  
 2004.05.06 제31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의 아동 보호 : 회고와 전망”  
 2004.11.16 제32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적 개입”  
 2005.05.06 제33회 학술세미나 개최 “지역사회변화와 아동학대 예방”  
 2005.07 법인 주소 중구 신당6동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이전  
 2005.11.10 제34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의 아동방임 : 부모의 방임인가? 사회의 방임인가?”  
 2006.05.25 제35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 대응방안으로서의 법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2006.11.24 제36회 학술세미나 개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방안 - 그룹홈과 가정 위탁보호를 중심으로”  
 2006.12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피학대아동그룹홈 모형개발” 수행  
 2007.06.15 제37회 학술세미나 개최 “유괴 및 실종아동과 아동보호대책”  
 2007.11.01 충북 음성지회 설립(우성수 회장)  
 2007.11.02 제38회 학술세미나 개최 “동반자살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2008.01.23 경기도 양주지회 설립(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효촌교회 광광희 회장)  
 2008.02.29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07 아동정책포럼결과 발표회(국가인권위원회 강당)  
 2008.06.05 제39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  
 2008.06.24 음성지회 사례발표회 개최(음성군청 대회의실)  
 2008.08.22 충남 보령지회 설립  
 (충남 보령시 죽정동 1-22 한국디아코니아 요양원 구종희 회장)  
 2008.10.24 제40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일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및 제도 비교”  
 2009.06.05 제41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2009.11.12 한국SGI 서대문 방면 아동학대예방 강연회 및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 개최  
(서대문 문화회관)

2009.11.25 전북고창 아동학대예방 노란 리본달기 캠페인 개최(고창종합사회복지관)

2009.12.10 빈곤가정 희귀병 아동 2명 의료비 지원  
(경기 수원 광영근 아동, 경남 창원 이창원 아동 각 150만원)

2009.12.22 제42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의 이해와 제도적 개선”

2010.04.22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 정미경 의원과 공동 주최

2010.10.25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실시(평택대학교 관련 학과 및 대학원)

2010.11.01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 공동 주최(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2010.12.10 제43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CYS-Net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공동체제 구축”

2011.05.27 제44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의 제도적 개입”

2012.01.30 2012 아동학대예방 워크숍 개최

2012.03.11 경기, 인천 수원, 용인 지부 및 지회 설립

2012.05.05 16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 대처방안  
-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중심으로

2012.07.04 충남 아산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SGI 공동주최]

2013.01. 09 경기 평택, 오산, 안성, 수원팔달, 성남, 용인처인, 강원 원주지회 설립

2013.01. 09 경기 평택, 오산, 안성, 수원팔달, 성남, 용인 처인 지회설립

2013.05. 22 제47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서울 강북 수유, 강북 삼각산,  
구로, 관악, 금천, 금천시흥, 금천독산, 동대문, 동작, 동작남부, 서대문, 송파, 양  
천, 영등포, 용산, 은평 지회 설립, 경기 고양, 파주, 경남 김해, 진주 지회 설립

2013.12.20 서울 지역 (강북, 강서, 구로, 관악, 금천, 동대문, 동작, 서대문, 송파, 양천, 영등  
포, 용산, 은평) 18개 지회설립 경기 고양, 경기 파주지회 설립 경남 진주 및 김  
해 지회 설립

2013.12.20 제48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와 인권” 전국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2014.01.04 서울 강서, 마포, 강동지회 설립

2014.03.01 경남 진주, 경남 김해지회 설립

2014.03.20 충남보령지회 설립

2014.03.27 성남어린이집연합회 MOU 체결

2014.04.18 강원지부 설립

2014.04.23 경기 화성 그룹홈 지원

2014.05.02 에브리데이 리테일 MOU 체결

2014.05.09 경기 수원 장안지회 설립

2014.05.30 제49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2014.05.30 수원 영통, 수원 장안지회 설립

2014.09.03 충남지부 설립

2014.09.11 서울 관악지회 설립

2014.09.25 경기 안산 신나는 그룹홈에 정기적으로 지원

2014.10.02 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2014.10.31 마산 공동생활가정 다솜에 정기적으로 지원  
 2014.12.12 한국아동보호학회 출범 기념 50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보호방안”  
     용인시 아동청소년보호단 출범  
 2015.04.16 보령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보호단 발대식 개최 및 홍성 내포아동학대예방  
     및 예산아동학대예방협회 설립  
 2015.05.29 제51회 학술세미나 개최 “양육자와 신고의무자로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태도”  
 2015.07.11 ~ 25 제1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5.10.17, 24, 31 제2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5.11.30 제52회 학술세미나 개최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2016.01.05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지원  
 2016.01.23 ~ 30 제3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6.04.26, 27, 28 제4기 아동보호사 교육  
 2016.11.04 제54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2017.01.03 울산 신나는아동쉼터에 정기적으로 지원, 요셉의집 지원  
 2017.03.18 제55회 학술세미나 개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2017.11.11 제56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2018.02.08 서울 이룸 그룹홈에 정기적으로 지원  
 2018.02.24 세종지부 설립  
 2018.04.20 제57회 학술세미나 개최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2018.04.21, 05.05, 05.12 제1기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  
 2018.07.07, 07.14, 07.21 제2기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  
 2018.07.14, 07.21, 07.27 제3기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  
 2018.08.21 경기 화성 영통지회 설립  
 2018.09.11 경기 고양지회 설립  
 2018.11.16 제58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보호와 아동안전”  
 2018.11.17 광주 남구, 경기 파주, 경기 부천, 인천 서구 지회 설립  
 2018.12.11 경기 화성 봉담, 경기 화성 병점 지회 설립  
 2019.01.18 울산 중구, 포항 남구 지회 설립  
 2019.01.31 서울 도봉구, 경북 경주시 지회 설립  
 2019.01.25 예담사랑의집에 정기적으로 지원, 일산별사랑에 정기적으로 지원  
     좋은이웃쉼터에 정기적으로 지원,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지원  
     엘피스에 정기적으로 지원, 도담치료그룹홈에 정기적으로 지원  
 2019.02.19 울산 울주군 범서, 서울 동작구 흑석 지회 설립  
 2019.02.26 남부공동생활가정에 정기적으로 지원  
 2019.05.14 해오름쉼터에 정기적으로 지원, 기쁜우리아동쉼터에 정기적으로 지원  
 2019.05.17 제59회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2019.06.26 드림일시보호쉼터에 정기적으로 지원, 문수의집에 정기적으로 지원  
     보현의집에 정기적으로 지원, 홀트미추홀에 정기적으로 지원  
 2019.10.02 서울시 성북구 지회 설립  
 2019.10.29 충청남도 서산시 지회 설립

## 부록 2 학술 세미나 연혁

일자	내용
1988-11-02	제1회 학술세미나 “兒童虐待 및 放任의 豫防과 對策에 관한 세미나報告書”
1989-11-16	제2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의 치료와 개입”
1990-03-19	제3회 학술세미나 “교육상황에 있어서의 체벌”
1990-11-23	제4회 학술세미나 “아동 성폭행 실태와 과제”
1991-03-30	제5회 학술세미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1991-11-23	제6회 학술세미나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1992-03-19	제7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전문적인 상담치료 기술개발”
1992-11-27	제8회 학술세미나 “현행법체계와 아동학대”
1993-04-02	제9회 학술세미나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
1993-11-10	제10회 학술세미나 “공포없는 아동훈육 -자녀훈육의 어제와 오늘-”
1994-03-24	제11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1994-12-02	제12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
1995-04-18	제13회 학술세미나 “한국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5-12-19	제14회 학술세미나 “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1996-05-07	제15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1996-12-03	제16회 학술세미나 “아동의 권리와 법”
1997-05-13	제17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와 사회사업 개입”
1997-12-02	제18회 학술세미나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1998-05-12	제19회 학술세미나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1998-11-27	제20회 학술세미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아동학대”
1999-05-08	제21회 학술세미나 “한국아동학대예방치료활동의 현황과 과제”
1999-11-25	제22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2000-06-09	제23회 학술세미나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2000-12-14	제24회 학술세미나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2001-07-13	제25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아동학대예방 교육프로그램”
2001-11-06	제26회 학술세미나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
2002-06-04	제27회 학술세미나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1년 사업평가 및 활성화 방안”
2002-11-19	제28회 학술세미나 “청소년보호를 위한 또래 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 행복한 가정, 행복지침”
2003-05-21	제29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2003-11-19	제30회 학술세미나 “아동성학대의 개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2004-05-06	제31회 학술세미나 “한국의 아동보호 회고와 전망”
2004-11-16	제32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안”
2005-05-06	제33회 학술세미나 “지역사회변화와 아동학대예방”
2005-11-10	제34회 학술세미나 “한국의 아동방임 : 부모의 방임인가? 사회의 방임인가?”
2006-05-25	제35회 학술세미나 “아동성학대 대응방안으로서의 법체계와 전문기관의 역할”
2006-11-24	제36회 학술세미나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방안 - 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2007-06-15	제37회 학술세미나 “유괴 및 실종아동과 아동보호대책”
2007-11-02	제38회 학술세미나 “동반자살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2008-06-05	제39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

2008-10-24	제40회 학술세미나 “한·일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및 제도 비교”
2009-06-05	제41회 학술세미나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2009-12-22	제42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의 이해와 제도적 개선”
2010-12-10	제43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CYS-Net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체제 구축”
2011-05-27	제44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입”
2011-12-02	제45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의 영향과 피해자 보호”
2012-05-25	제46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 대처 방안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중심으로”
2013-05-22	제47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2013-12-20	제48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2014-05-30	제49회 학술세미나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2014-12-12	제50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보호방안”
2015-05-29	제51회 학술세미나 “양육자와 신고의무자로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태도”
2015-11-30	제52회 학술세미나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2016-03-18	제53회 학술세미나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2016-11-04	제54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2017-04-14	제55회 학술세미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2017-11-10	제56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2018-04-20	제57회 학술세미나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2018-11-16	제58회 학술세미나 “아동보호와 아동안전”
2019-05-17	제59회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 제 2 주제

# Ecological Transition Model (ETM) of Child Protection in Taiwan

Dr. Max Lin (Directo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ivision Taiwan Fund for Children and  
Families(T.F.C.F))



주제 2 발표문

Ecological Transition Model (ETM) of Child Protection in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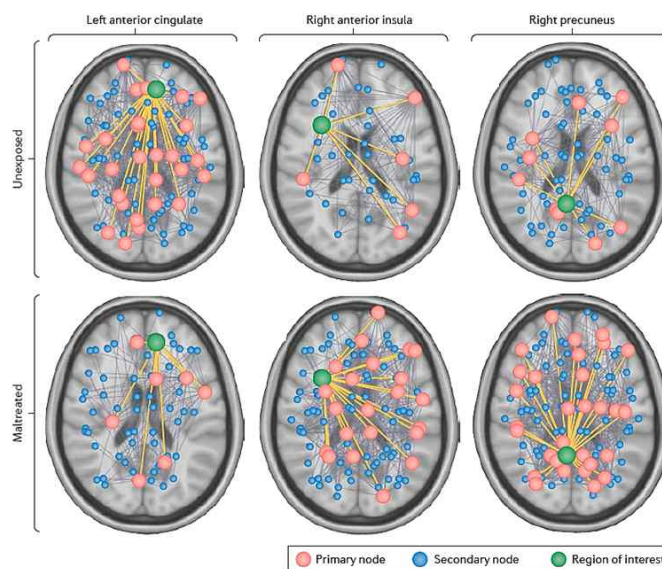
Dr. Max Lin<sup>1)</sup>



1) Directo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ivision  
Taiwan Fund for Children and Families(T.F.C.F)

Even in high-income countries, child maltreatment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child mortality and morbidity and has long-lasting effects on mental health, drug and alcohol misuse (especially in girls), risky sexual behaviour, obesity, and criminal behaviour, which persist into adulthood. The high burden and serious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warrant increased investment in preventive and therapeutic strategies from early childhood.

Gilbert, R., Widom, C. S., Browne, K., Fergusson, D., Webb, E., & Janson, S. (2009). Burden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igh-income countries. *The Lancet*, 373(9657), 6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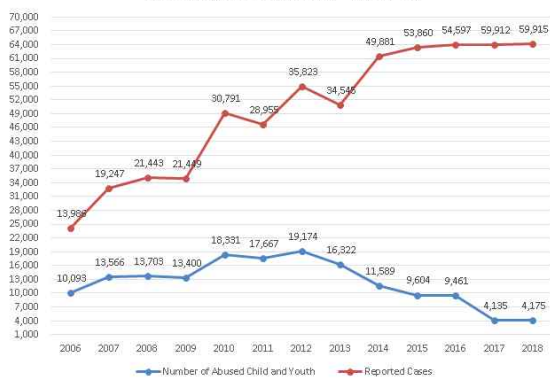
1. **Left anterior cingulate:** the regulation of emotions and impulses.
2. **Right anterior insula:**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awareness of internal feelings and urges, such as craving.
3. **Right precuneus:** a region associated with self-centered thinking.

Teicher, M. H., Samson, J. A., Anderson, C. M., & Ohashi, K. (2016). The effects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brain structure, function and connectivity.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7(10), 652-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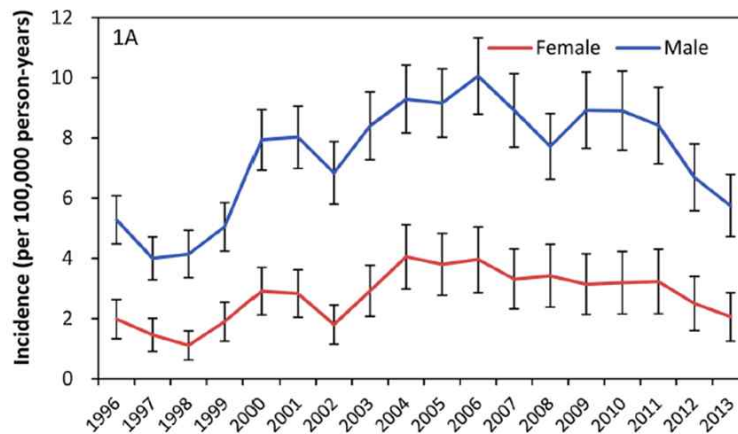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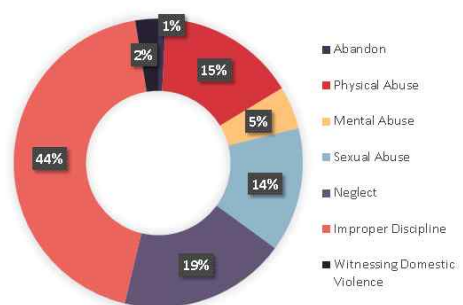


## Number of Abused Child and Youth 2006-2018

Statistics of General Health and Welfare 20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Intra-family Child and Youth Protection Cases - Type of Abused



The trend in the incidence of hospitalization of children due to physical-abuse-related injuries started to decline 2 years after implementation of the Child Protection Act(2003).

Chou, I.-Jun .et, al. (2019).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he child protection act on serious child physical abuse in Taiwan, *Child Abuse & Neglect*, 95, 104066.



## First national study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 Korea in 2011

...the prevalence of child maltreatment in Korea. In the total sample, **19.4%** of children had experienced “severe” child maltreatment(not including sexual abuse and neglect) during the past year...Child maltreatment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lower-grade (first to thi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23.7%) and least frequently in high school students (15.3%). **In all age groups, psychological abuse was more common than physical abuse.**

Ahn, J. and Yoo, J. P. (2019).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An investigation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3(3), 282-294.

7



##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4 KCYPS)

**11.5%** of children experienced physical abuse, **28.7%** experienced emotional abuse and about **35%** experienced neglect. After controlling for all socio-demographic factors, children who experienced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were more likely to develop internalised as well as externalised behaviour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ggression, underage smoking, underage drinking and engaging in cyber delinquency.

Cho, Y. J., Atteraya, M. S., & Joo, H. C. (2018).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childhood behaviour problems in South Korea: findings from the fifth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the 2014 KCYP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8(1), 39-55.

Your Date Here

Your Footer Here

8



## 사랑의 채찍 (the whip of love)

salang-ui chaejjig

...the caregiver's education leve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 maltreatment in the older age group, suggesting that **caregivers with a higher education level were more likely to maltreat their child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the analytic results from other countries that reporte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education and child maltreatment. **This finding may be unique to South Korea.**

Ahn, J. and Yoo, J. P. (2019).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An investigation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3(3), 282-294.

Your Date Here

Your Footer Here

9

## Your Children is NOT Your Children

1. *Black Mirror* in Taiwan version, and released in 2018.
2. Inspired by famous poetry *On Children* by Kahlil Gibran



你的孩子  
不是你的孩子

10




**Your children are not your children.**

They are the sons and daughters of Life's longing for itself.  
 They come through you but not from you,  
 And though they are with you, yet they belong not to you.  
 You may give them your love but not your thoughts,  
 For they have their own thoughts.  
 You may house their bodies but not their souls,  
 For their souls dwell in the house of tomorrow,  
 which you cannot visit, not even in your dreams.  
 You may strive to be like them, but seek not to make them like you.  
 For life goes not backward nor tarries with yesterday.

(On Children by Kahlil Gibran, 1923)





The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is complex, which requires **an ecological assessment** of the individual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individual is embedded...if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re to effectively address the issue of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they **must first examine cultural beliefs** and public attitudes that endorse the use of physical violence against children.

Hong, J. S., Lee, N. Y., Park, H. J., & Faller, K. C. (2011).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7), 1058-1066.

13



**Preventive interventions should be culturally tailo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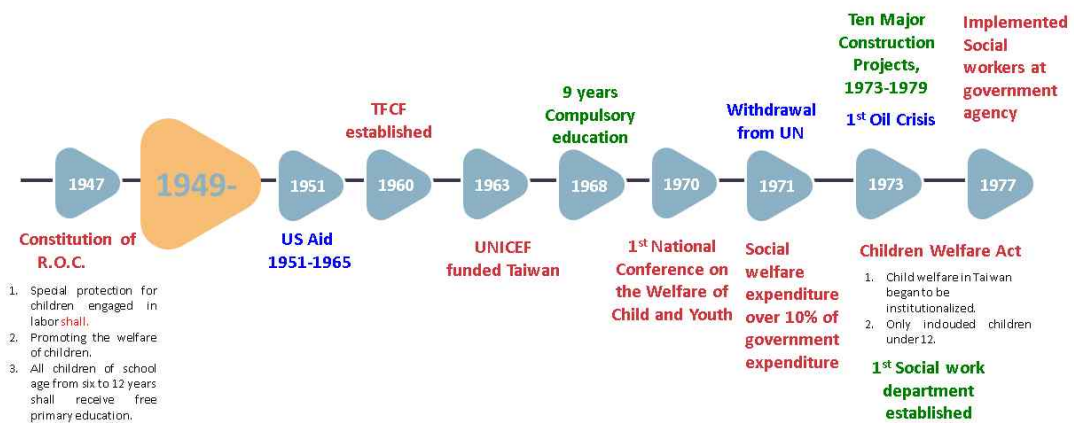
Cho, M. (2019). A prospective, longitudinal cohort study: The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on delinquency among South Korean youth in middle and high school. *Child Abuse & Neglect*, 88, 235-24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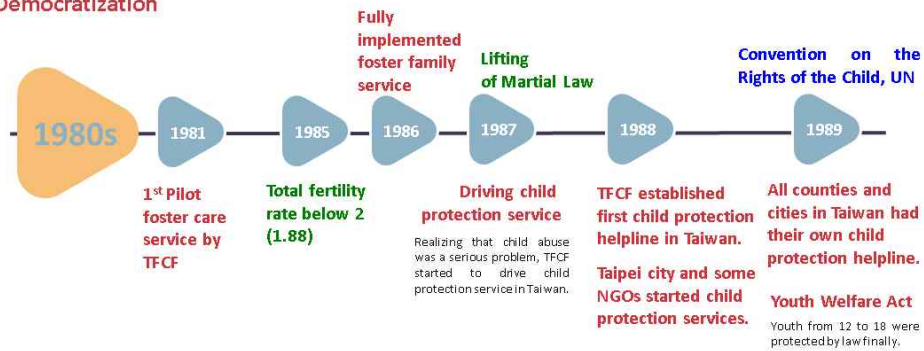
# TRAJECTORY

The ecological development of child protection in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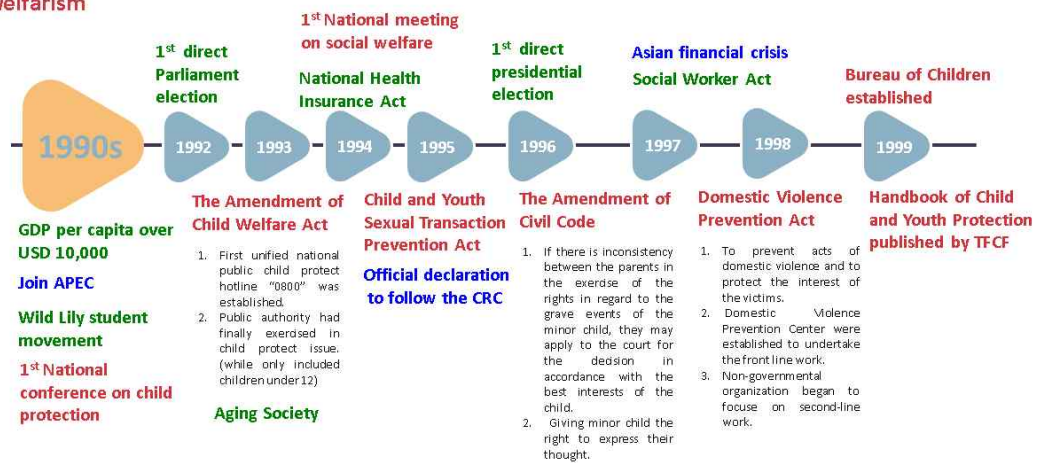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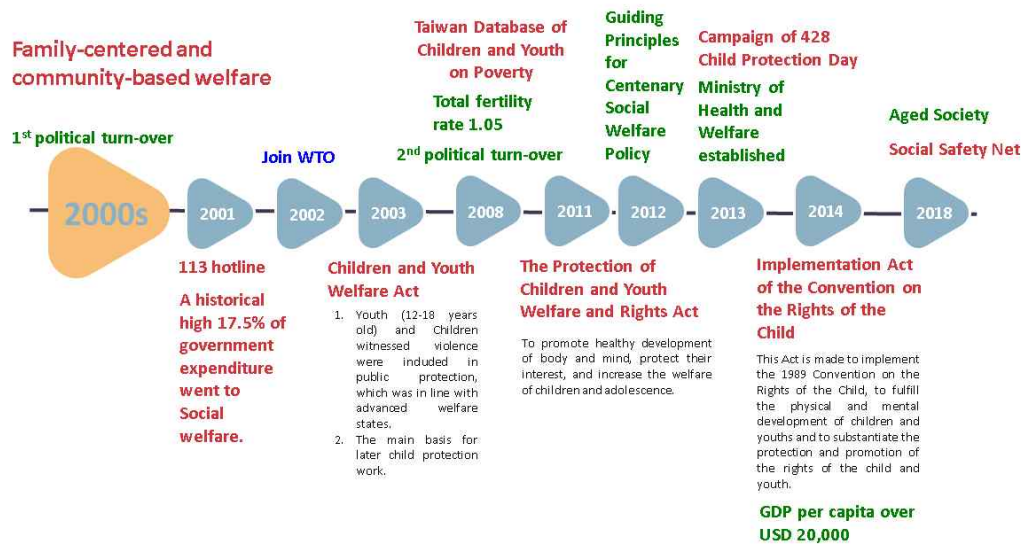


##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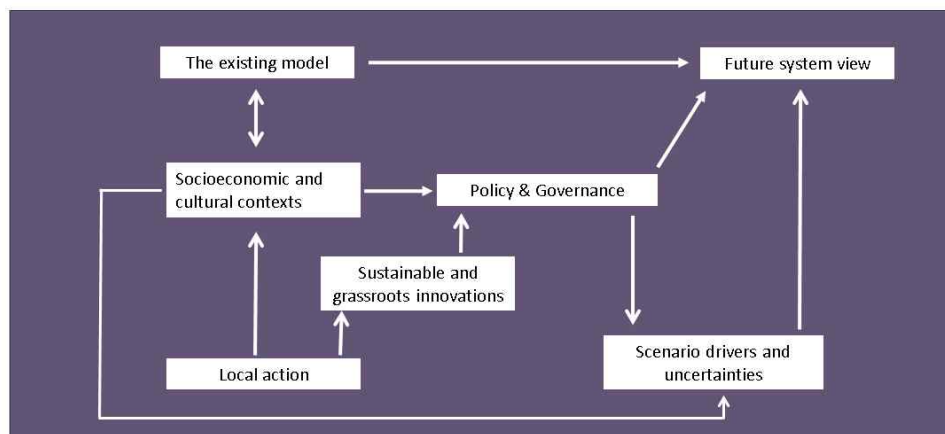
## Protectionism and Welfarism





19

## Ecological Transition Model (E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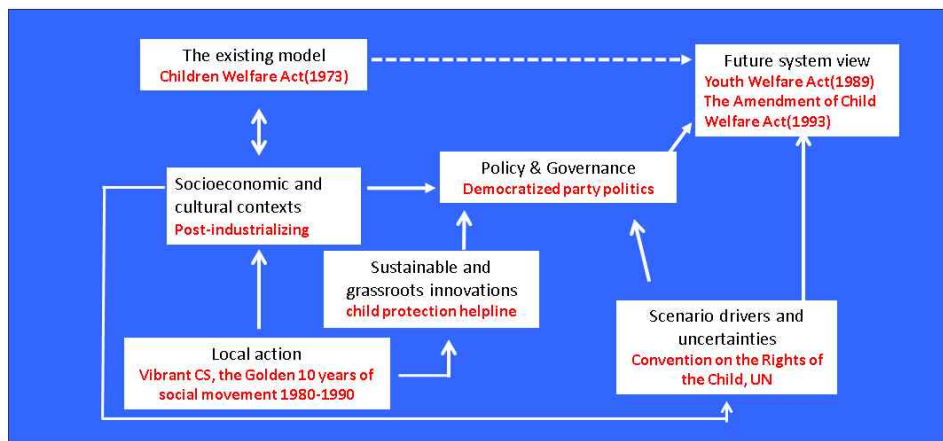


Modified from: Nilsson, M. et al. (2018). A bridging framework for studying transition pathways – From systems models to local action in the Swedish heating dom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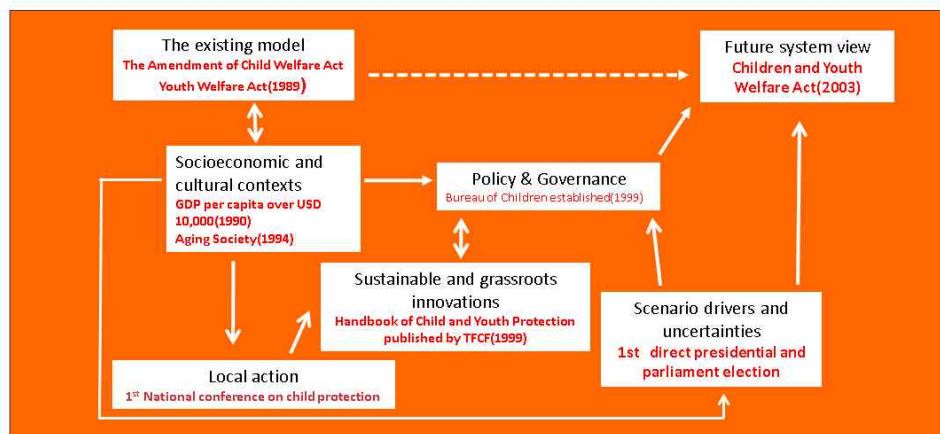
## Ecological Transition Model in Taiwan (1970-1989)



Modified from: Nilsson, M. et al. (2018). A bridging framework for studying transition pathways – From systems models to local action in the Swedish heating dom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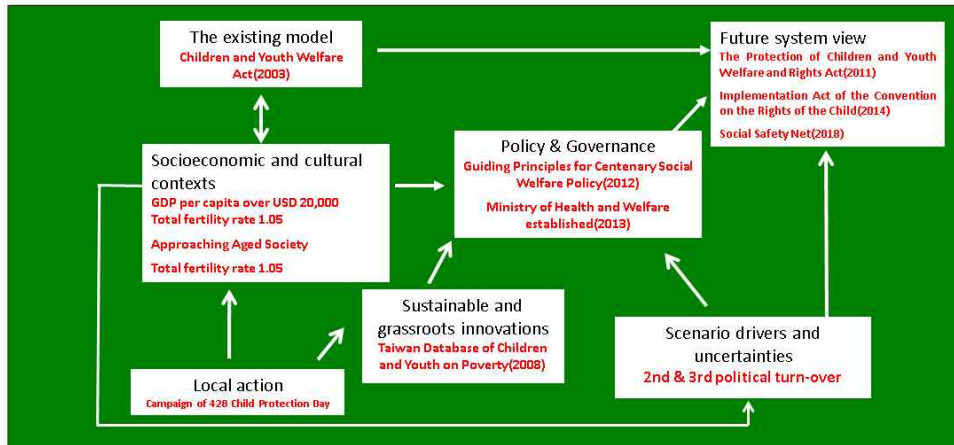
## Ecological Transition Model in Taiwan (1990-2000)



Modified from: Nilsson, M. et al. (2018). A bridging framework for studying transition pathways – From systems models to local action in the Swedish heating dom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2

## Ecological Transition Model in Taiwan (2000~)



Modified from: Nilsson, M et al. (2018). A bridging framework for studying transition pathways – From systems models to local action in the Swedish heating dom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3

## Development Characteristics



24



## Building the Future

Care for children today, make a better world tomorrow.

25



## 4 overarching areas of well-being for every child/youth

1. Every child/youth survives and thrives
2. Every child/youth learns
3. Every child/youth is protected from violence and exploitation
4. Every child/youth has a fair chance in participatory right.

(Taiwan White Paper on Children's Rights advocated by TFCF, 2017)

26

## Some concepts of future system

###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basic protection, guiding children to participate actively in society and learning the concept and actions of essential human care. Moreover, cultivating them to become problem-solving adults.

###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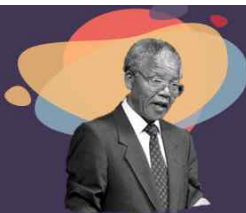
1. Expand the service target from individual to the whole child and youth group.
2. Improve the family function and social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 live.

### A CULTURE POLICY

Child protection policy is not just a welfare policy, but also a policy contain economy, health, social network, education, and more.



27



**The true character of society is revealed in how it treats its children**

*Nelson Mandela at the launch of the Blue Train, Worcester Station, South Africa, 27 September 199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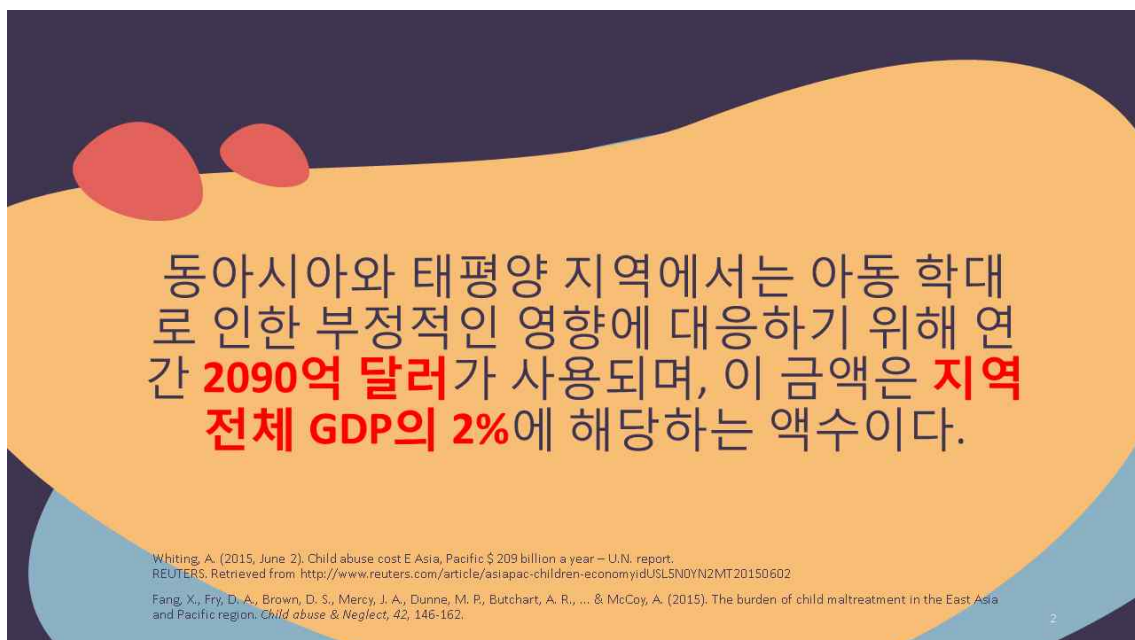
불타는 금요일  
(bul ta neun geum yo il)  
감사합니다

29

주제 2 번역문 (번역자 : 이은교)

## 대만 아동 보호의 생태학적 전환 모델(E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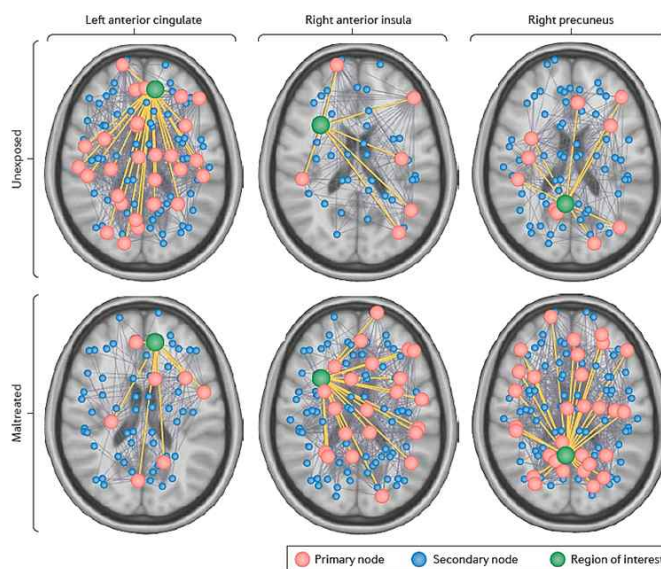
맥스 린 박사<sup>2)</sup>



2) 대만 아동 및 가족 펀드(기금)(T.F.C.F.) 국제 개발국(부서) 국장

고소득 국가에서도 아동학대는 아동 사망률과 유병률에 크게 일조하며 정신건강과 약물 및 알코올 남용(특히 여아의), 위험한 성적 행동, 비만도, 범죄 행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성인기까지도 지속된다. 아동학대가 주는 큰 부담과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 때문에 아동기 초기부터 예방 및 치료 전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Gilbert, R., Widom, C. S., Browne, K., Fergusson, D., Webb, E., & Janson, S. (2009). Burden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igh-income countries. *The Lancet*, 373(9657), 68-81.



1. **좌전 대상 (피질):** 감정 및 충동 제어
2. **전두엽 우측 섬엽:** 갈망 등의 내적 느낌과 충동을 통합 및 조정.
3. **우측 쇄기 전 소엽:** 자기 중심적 사고와 연관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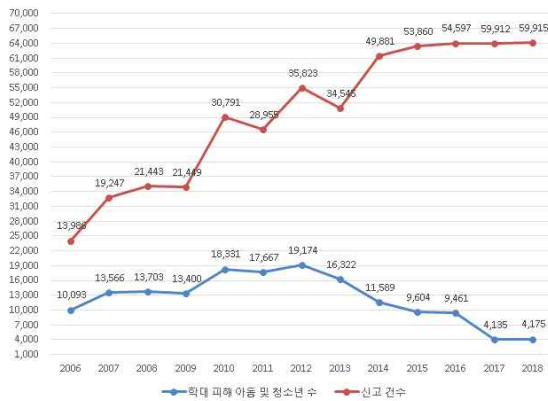
Teicher, M. H., Samson, J. A., Anderson, C. M., & Ohashi, K. (2016). The effects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brain structure, function and connectivity.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7(10), 652-66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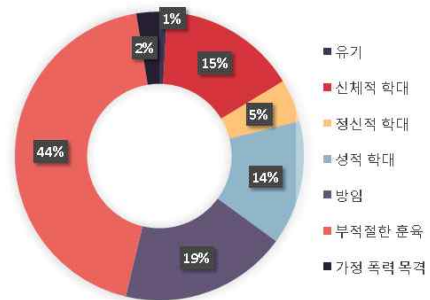


## 2006-2018 학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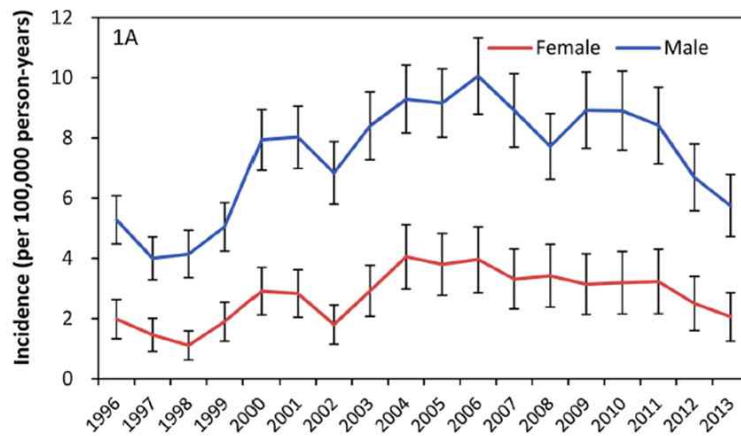
2018년 일반 보건 복지 통계-위생복지부 제공



## 가족 내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사례 - 학대 유형



5



2003년 아동보호법 제정 2년 후부터 신체적 학대 관련 부상으로 아동이 입원하는 사건의 발생 경향이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Chou, I.-Jun, et al. (2019).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he child protection act on serious child physical abuse in Taiwan, *Child Abuse & Neglect*, 95, 104066.

6





## 2011 처음으로 한국에서 아동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전국실태 조사 실시

...한국 내 아동 학대가 만연함을.... 전체 샘플에서, **19.4%**의 아동이 지난 1년 간 “심각한 수준”의 (성적 학대와 방임을 제외한)아동 학대를 경험하였다... 아동 학대는 초등 저학년 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가장 빈번하였고(23.7%)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15.3%). **모든 연령 집단에서, 신체적 학대보다 심리적 학대가 더 자주 발견되었다.**

Ahn, J. and Yoo, J. P. (2019).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An investigation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3(3), 282-294.

7



##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2014 KCYPs)

아동의 **11.5%**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28.7%**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고 **35%**는 방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모두 통제 한 결과, 신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겪은 아동은 우울증, 공격성,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과 사이버 상의 비행과 같은 내면화, 또는 외현화 행동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았다.

Cho, Y. J., Atteraya, M. S., & Joo, H. C. (2018).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childhood behaviour problems in South Korea: findings from the fifth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the 2014 KCYP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8(1), 39-55.

Your Date Here

Your Footer Here

8



## 사랑의 채찍 (the whip of love)

salang-ui chaejjig

...연령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양육자의 교육 수준이 아동학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고학력 양육자가 저학력 양육자보다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분석 결과와 일관되지 않는 발견으로, 타국에서는 교육 수준과 아동 학대 사이의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Ahn, J. and Yoo, J. P. (2019).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An investigation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3(3), 282-294.

Your Date Here

Your Footer Here

9

##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들이 아니다

1. 블랙미러 대만판, 2018년 개봉.
2. 칼릴 지브란의 유명한 시 '아이들에 대하여'에 영감을 받음



你的孩子  
不是你的孩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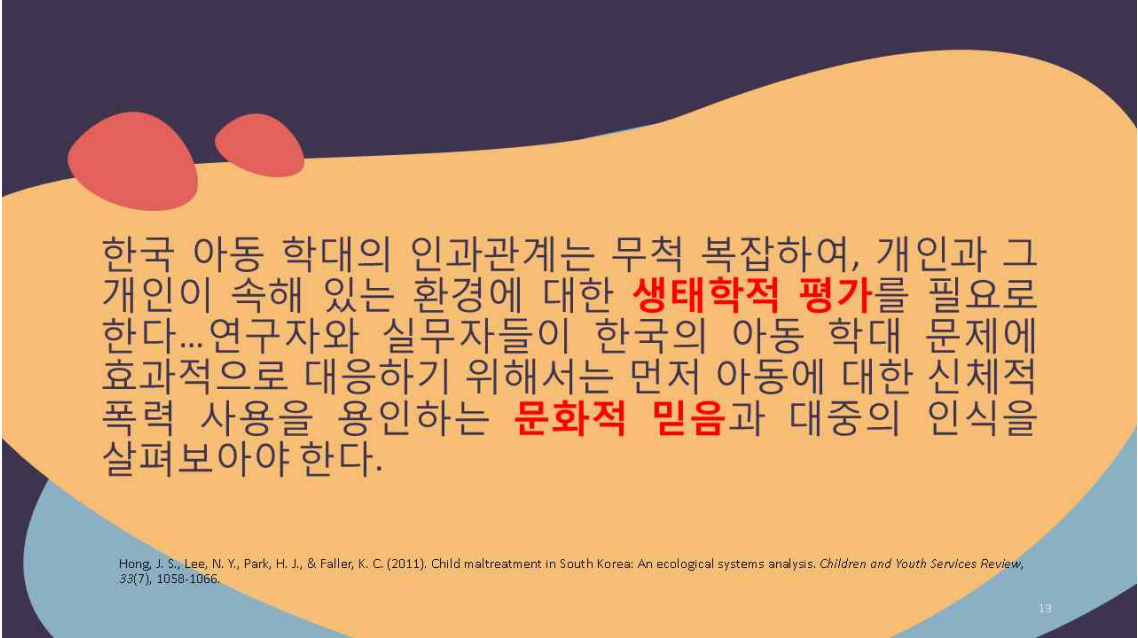
10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딸이니  
 그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자기만의 사고가 있으므로.  
 그대의 아이들에게 욕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까지 가두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1923)



한국 아동 학대의 인과관계는 무척 복잡하여,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연구자와 실무자들이 한국의 아동 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사용을 용인하는 **문화적 믿음**과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Hong, J. S., Lee, N. Y., Park, H. J., & Faller, K. C. (2011).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7), 1058-1066.

13



**예방적 개입은 문화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Cho, M. (2019). A prospective, longitudinal cohort study: The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on delinquency among South Korean youth in middle and high school. *Child Abuse & Neglect*, 88, 235-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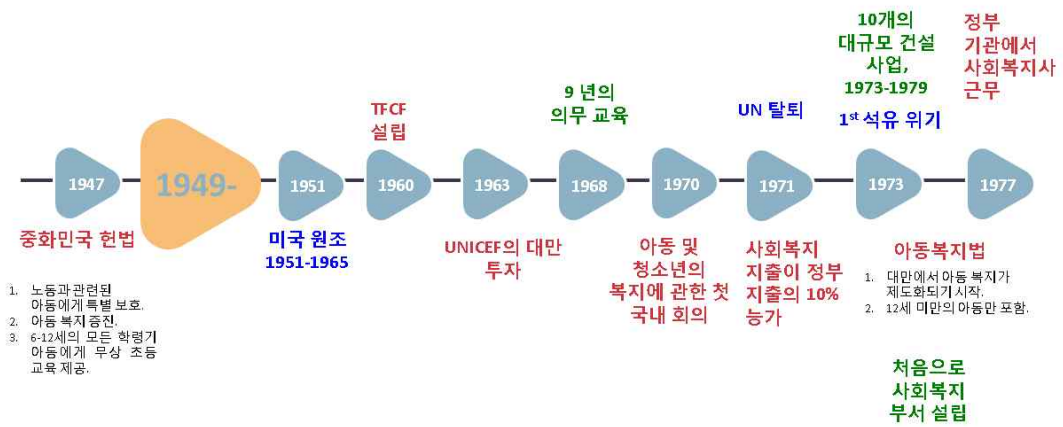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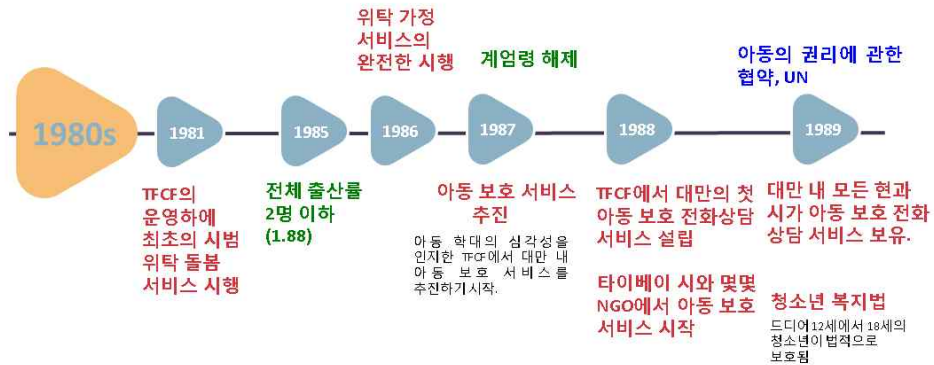
# 궤적

대만 내 아동 보호의 생태학적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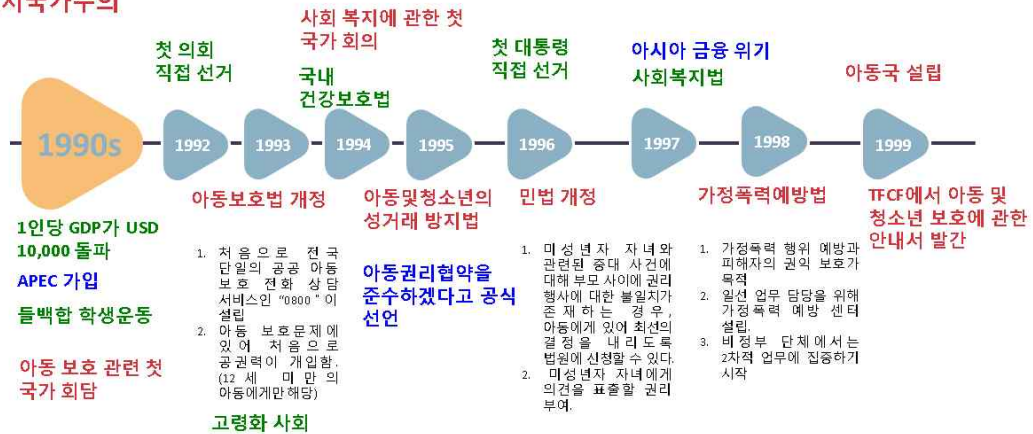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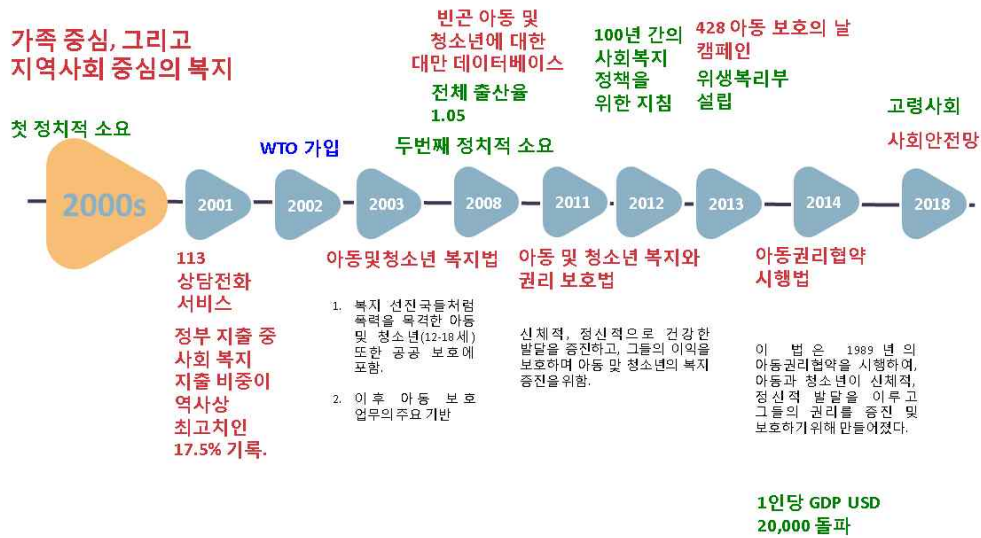


## 자유화와 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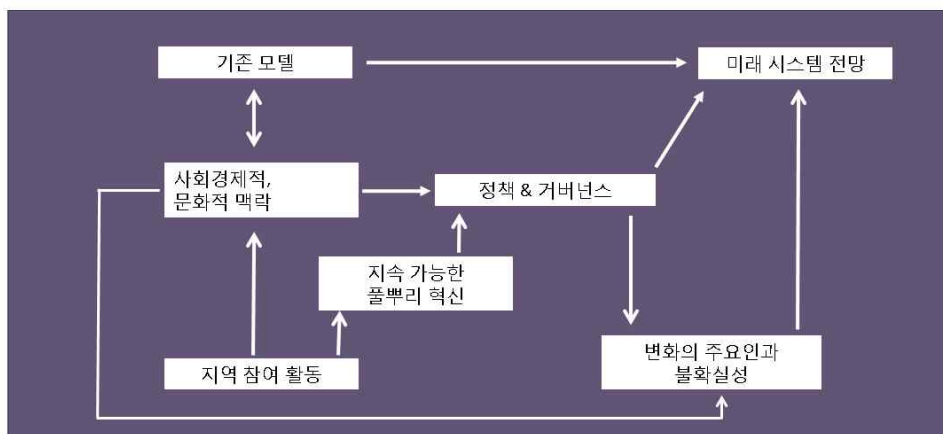
## 보호주의와 복지국가주의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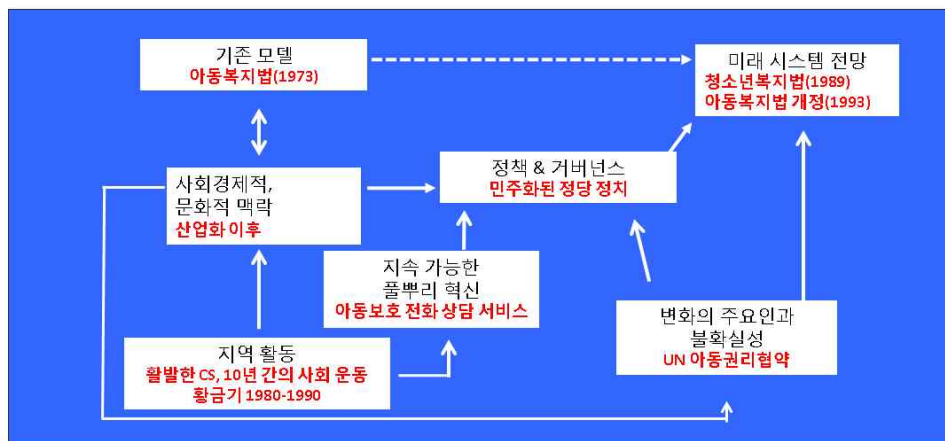
## 생태학적 전환 모델(ETM)



Modified from: Nilsson, M. et al. (2018). A bridging framework for studying transition pathways – From systems models to local action in the Swedish heating dom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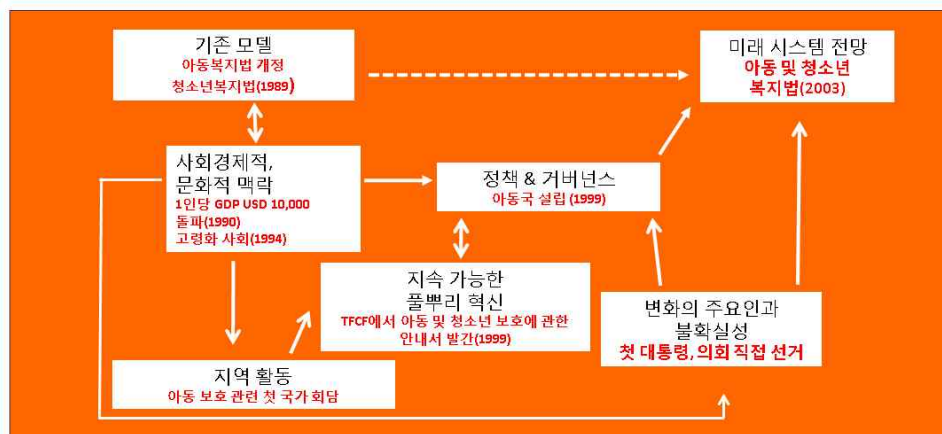
## 대만의 생태학적 전환 모델 (1970-1989)



Modified from: Nilsson, M. et al. (2018). A bridging framework for studying transition pathways – From systems models to local action in the Swedish heating dom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1

## 대만의 생태학적 전환 모델 (199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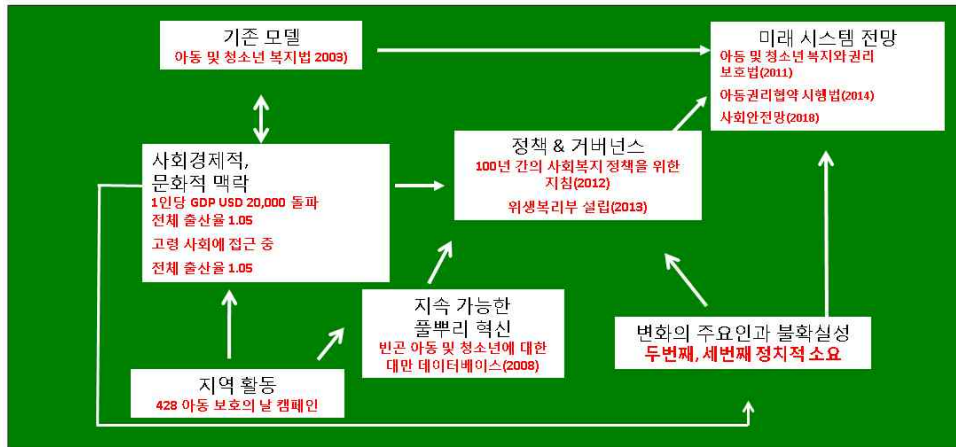


Modified from: Nilsson, M. et al. (2018). A bridging framework for studying transition pathways – From systems models to local action in the Swedish heating dom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2



## 대만의 생태학적 전환 모델(2000~)



Modified from: Nilsson, M et al. (2018). A bridging framework for studying transition pathways – From systems models to local action in the Swedish heating domai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23



24

## 미래를 만들다

오늘 아이들을 돌보면, 더 나은 내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5

## 4 개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안녕과 관련된 주요 부문

1. 모든 아동/청소년이 살아남고 잘 자라야 한다.
2.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3. 모든 아동/청소년이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4. 모든 아동/청소년이 참여권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

(TFCF가 지지하는 대만의 아동 권리 백서, 2017)

26

## 미래 시스템을 위한 개념

### 지속가능성

기본적 보호에 더해, 아동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간 돌봄에 있어 필수적인 개념과 행동을 배울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어른이 되도록 육성해야 한다.

###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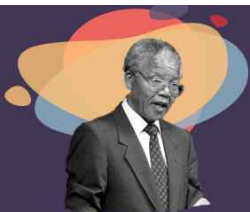
1. 서비스 제공 대상을 늘려 개인이 아닌 전체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을 목표로 한다.
2.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고 아동이 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한다.

### 문화적 정책

아동 보호 정책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보건, 사회 연결망, 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다.



27



##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블루 트레인의 우스터 역 개통식, 27 September 1997.*

28



불타는 금요일  
(bul ta neun geum yo il)

감사합니다

29

## 제 3 주제

#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현황 및 역할과 기능

문 영 희 (한국아동보호학회장)



#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현황 및 역할과 기능

문 영 희

(한국아동보호학회장)

## <목 차>

- I. 머리말
- II.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현황과 역할
- III.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외국 사례
- IV. 맺음말 - 민간단체의 나아갈 방향

## I.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비해서는 인식 및 대처방안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동안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들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조기발견’이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고, 민간부문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실제 발견율은 2001년 대비 2018년에는 1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자녀에 대한 체벌과 훈육이 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여겼오던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동학대관련 법과 제도들의 발빠른 변화에 의해 이제는 아동학대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되는 시점에 와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 중에서도 많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받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굿네이버스의 역할은 참으로 대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에는 민간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굿네이버스가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은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및 치료, 양육기술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체제가 강화되며,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적인 상담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공적 영역에서 아동학대관련 업무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는 민간단체로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해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틀 속으로 편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학대피해아동과 함께

한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우리나라의 최초 일시보호시설인 그룹홈 설립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치료에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참여했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학술적 의미로 재구성해보는 것은 아동학대예방의 역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민간의 입장에서 피해아동을 옹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역사적 입장에서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을 해가고 있는 5단체의 현주소와 주요 활동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민간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전문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기대해 보며 더불어 학대피해아동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외의 민간단체도 있음을 밝히고 그들의 활동에도 지지를 하면서 다음 민간단체 5곳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현황과 주요 사업을 알아보고 향후 민간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민간단체로써 이 땅의 어린이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옹호역할을 30년간이나 한결 같이 이어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대해서는 앞서 주제발표를 해주신 이배근 회장의 발표로 대신하여 이 지면에서는 개략적인 소개만 하기로 한다.

## II.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현황과 역할

### 1. 민간단체의 의의

민간단체는 그 형식상 영리단체(PO)와 비영리단체(NPO)로 나눌 수 있다. 영리단체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영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비영리단체는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써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재산까지 기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의 사명은 이 사회의 수많은 약자, 소외계층을 도와 그들을 변화된 한 사람으로, 한 시민으로 이우고 더불어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 중에서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가능한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도 스스로 마련해 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단체로서, NGO, NPO,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 1)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및 활성화 부분

2018년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1,636개 시도 12,397개로 합계가 14,033개이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은 191개이다.<sup>3)</sup>이 중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대표: 이일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대표: 신승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대표: 김보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3) 관련된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양호승), 그리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는 공적기관으로 편입되는 관계로 마지막에 그 현황만 설명을 할 것이며 구체적인 활동은 지역보호전문기관 중 많은 부분 위탁하고 있는 굿네이버스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올해 서울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총 20억원을 지원하였고, 지원사업으로는 주로 관광, 문화, 복지, 인권 등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토록 실시하였다. 그동안의 지원방식은 서울시가 직접 지정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던 방식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익사업을 시와 단체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사업을 시에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여 기존의 관 주도 활성화 방안에서 민간단체의 관점이 주축이 되는 활성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2.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현주소와 역할

### 1) 월드비전<sup>4)</sup>

#### (1) 설립 목적

국제 월드비전의 설립 목적은 한 어린이를 향한 한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의 현장에서 밥 피어스(Bob Pierce) 목사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보면서,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전문구호기관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겨 1950년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무실을 열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금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와 함께 한국의 전쟁고아들과 남편 잃은 부인들을 돕기 시작하였다. 전쟁고아의 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실천이 월드비전의 첫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라는 밥 피어스 목사의 기도는 그대로 월드비전의 정신이 된 것이다. 이후 월드비전은 60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구호개발활동 지역을 넓혀갔다. 현재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책임감 있게 최대 규모의 개발 구호활동을 펼치는 기독교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고 지금도 그 행보는 지속되고 있다.

1950년부터 60년대 말까지 월드비전은 후원을 받는 어린이들마다 식량, 교육, 건강관리, 직업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개인을 직접 돕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여년의 구호활동을 통해 어린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사는 지역사회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서는 이 결론을 토대로 1970년대에 이르러 지역개발사업(Community Project Development Program)<sup>5)</sup>을 통해 어린이를 돕도록 지원형태를 바꾸게 되었다.

21세기를 맞아 월드비전은 특별히 어린이의 생존권과 빈곤의 완화를 위한 옹호활동을 강

4) 월드비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월드비전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http://www.worldvision.or.kr))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5) 지역개발사업은 식수, 위생·보건, 교육, 소득증대, 주민역량강화 등의 통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며 이는 어린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급박한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국제구호사업 부서를 개설하고 월드비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빠르고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화 하였다. 이러한 월드비전의 노력으로 아동노동, 소년병,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등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 더욱 활발하게 연대하여 활동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UN과 그 산하기구들인 UNHCR, WFP, unicef 등과 공동파트너로 구호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제구호개발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역사

한국월드비전은 1991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었다.

1950년~1959년 사이에는 주로 시설지원<sup>6)</sup>에 집중하였으나 70년대까지 150개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지원 초기에는 의식주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나 점차 시설 아동들의 교육, 신앙, 의료분야에 대한 도움을 주었다.

1960년~1969년 사이에는 무료로 의료지원에 집중하였다. 1954년부터 아동병원을 설립하여 1980년까지 54만 명의 시설아동과 영세가정을 위한 무료 의료사업을 실시하였다. 1959년 서울 남대문 5가에 선명회 특수피부 진료소를 세워 1980년까지 42만 명의 나병환자를 치료하며 이 땅에서 나병이 없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60년 선명회 합창단을 창단하여 시설아동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활발한 모금활동을 펼쳤다.

1970년~1979년 사이에는 복지관 설립에 중점을 두었다. 1971년 음성나환자정착촌 지원사업과 1972년 선명회 직업보도소를 개설하여 음성나환자와 시설아동들의 자립을 돕게 되고, 1974년에는 선명회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성남사회복지관이 개관되어 도시 영세민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1980년~1989년 사이에는 농어촌 개발에 관심을 가져 지원 운영을 하였다. 1981년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시작, 낙후된 농어촌을 대상으로 5년간의 장기적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2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총 3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다.

1990년~1999년 사이에는 해외사업을 시작하였다. 1991년 10월 월드비전은 1950년부터 국제본부를 통해 받아온 외국 원조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다. 모금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북한사업도 타 복지기관보다 빠른 1994년부터 시작하였다. 10개의 새로운 지역사회복지관을 설립하거나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총 13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0월부터 국제이사회의 결정으로 월드비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0년~현재에는 아동옹호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21세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옹호사업의 비중을 크게 두기 시작했다. 국내사업은 아동에게 현물지원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의 비중이 높아졌고 또한, 한국이 지원하는 사업장은 몽골, 미얀마,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에티오피아, 가나, 잠비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까지 48개국 191개 사업장 (2009년 3월 기준) 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사업은 씨감자 생산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이 자체적으로 식량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3) 주요 사업

---

6) 초기사업은 한국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원, 영아원, 모자원, 맹아원, 농아원 등의 시설지원 사업이었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긴급구호사업, 옹호사업의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

#### 가. 지역개발 사업

월드비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식수, 보건, 농업개발, 소득증대, 교육, 주민 역량강화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이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중심에는 지역주민과 그 지역이 아이들이 있다. 월드비전은 월드비전이 개발사업을 마치고 지역을 떠난 이후에도 주민들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가 주인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개발사업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에 두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은 1:1 아동결연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진행되며 월드비전은 후원을 받는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릴 염려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게 하며, 초등학교를 마치는 기본적인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나. 국제구호 사업

월드비전은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 또는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월드비전 회원국은 2008년,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식량과 식수, 피난처와 그 외 필수물품들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긴급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일 해오고 있다. 월드비전은 재난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위험 수위가 높은 지역에 미리 자원을 마련하고 전문 직원을 파견하여 지역사회가 긴급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재난이 끝난 후에도 재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고통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 다. 옹호 사업

빈곤의 근원에는 언제나 불공평한 정책과 사회적 통념, 악습과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있다. 어린 소녀들이 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조혼을 강요당하거나 어린이들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불공정한 무역법으로 수많은 농부들의 피땀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월드비전은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와 약자를 억압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범위에서 함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월드비전은 직접 부당한 정책과 악습을 바꾸도록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한다.

#### (4) 아동학대관련 사업

월드비전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및 취약계층들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를 동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아동은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로서 위기상황에서 특별한 보호와 지원 없이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월드비전은 i) 착취, ii) 재난에 대한 취약성, iii) 극심한 빈곤, IV) 심각한 인권 침해 4가지 영역에 따라 취약한 계층으로 분리되는 아동들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i) 거리 아동 및 노동 상태에 있는 아동, 고아 및 취약아동의 보호 및 착취예방
- ii) 분쟁지역 및 전후 사회의 아동 및 지역주민들 대상 평화구축 및 갈등해소
- iii) 아동 친화 공간 마련 및 위기아동 및 취약아동 대상 심리 사회적 지원
- iv) 취약아동 및 취약계층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등

국내 사업으로는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기아동들에게 긴급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등을 지원), 의료비지원((수술비,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간병비, 진단비, 심리치료비(아동에게만 해당) 등을 지원)), 그리고 주거비 지원(월임대료, 임시거주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가진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교 첫 등록금을 지원하며, 건강, 사회, 심리, 정서적 향상을 위해 음악, 문화, 스포츠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포기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를 지도를 비롯한 목표설정과 실천력 향상 도모와 재능기부 및 멘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직접 주체자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속적이며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 스스로의 자아존중감, 타인 존중감, 권리침해에 대한 대처방식 등 권리인식 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캠페인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권리인식 증진 및 지역사회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영향력 증대시키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시, 군, 구 아동들이 아동권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총회를 실시, 각 시, 군별 아동대표를 선출 하여 지역별로 아동권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기반으로 아동관련 정책제안을 실시. 이를 통해 아동정책제안활동을 통한 아동의 참여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 아동관련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며, 지역아동들의 권리인식 함양과 아동의 시민의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2) 굿네이버스<sup>7)</sup>

### (1) 설립 목적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과 유능한 기업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1980년대에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에 이제 더 이상 외국의 원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외 원조단체 대부분은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197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1년, 뜻 있는 동료 9명이 힘을

---

7) 본고에서 사용된 굿네이버스와 관련된 자료는 굿네이버스 홈페이지를 적극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합하여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순수한 시민 참여형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를 창립하였다. 굿네이버스의 설립목적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함이었다. 굿네이버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의 원칙을 준수해 오고 있다.

## (2) 역사

굿네이버스는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이자,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 NGO로 손꼽힌다. 1992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구호개발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지역개발사업에 매진해 온 결과, 1996년에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2007년에는 UN과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이 주관한 MDGs Award에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기여한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MDGs Award를 수상하였다. 2011년에 한국 NGO최초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공식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UN 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민간외교의 역할을 주도해나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로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8명의 창립멤버와 128명의 정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국내 52개 지부, 해외 38개국에서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3) 주요 사업

### 가. 국내·외 전문적 활동

굿네이버스는 인종, 종교, 사상, 지역을 초월해 빈곤과 재난,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99년, 굿네이버스는 방학 중 결식과 방임의 위험에 처한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을 운영하였다. 교육복지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희망나눔학교는 학교로 빈곤가정아동을 찾아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아동복지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지금도 희망나눔학교는 참여한 아동들이 결식과 방임 위험에서 벗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까지 해소하며 뜻 깊은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빈곤가정아동과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난민들을 위해 한국 최초로 구호팀을 현장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아이티 대지진, 2015년 네팔 대지진 등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5년 네팔 지진 긴급구호 현장에서는 진앙지 고르카 지역 보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을 펼친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장기재건 사업으로 연계하며 지속적인 구호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도 이름 그대로 ‘좋은 이웃’이 되고 있다.

### 나. 혁신적·지속적 사업 모형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목한 굿네이버스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토대로 지역개발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굿네이버스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자립적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1천 개 이상에 이르는 조합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 화두가 되기 전부터 굿네이버스는 혁신적 사업 모형을 제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일에 힘써오고 있다. 2009년에는 극심한 추위로 고통 받는 몽골의 빈민층을 위해 대한민국 적정기술 제1호 난방축열기 G-saver를 개발하여 보급했다. 또한 적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G-saver의 보급과 고용창출을 위해 몽골 현지에 사회적기업 Good Sharing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2013년 외교부 DAK(개발협력연대)로부터 지속가능개발모델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다. 나눔실천 활동

굿네이버스는 창립 직후의 DM(Direct Mail)을 시작으로 결연 후원, 가두 캠페인, 온라인 모금, 미디어 모금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모금 역사를 써오고 있다. 1993년 시작된 ‘사랑의 굶기 운동’ 캠페인부터 현재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이르기까지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굿네이버스 나눔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 특히 국내 NGO 최초로 온라인과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100원의 기적’ 캠페인, ‘소셜 기부 어플’, ‘VR 체험전’을 개발하는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나눔의 방법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나눔 문화를 선도해오고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굿네이버스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나눔인성교육 진행하며 나눔의 사회화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NGO 활동가’ 등 연령별 맞춤 나눔인성교육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2009년부터 시작된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했을 정도로 국내의 대표적인 나눔실천 활동으로 자리매김 했다.

#### (4) 아동학대관련 사업

굿네이버스는 UN 아동권리협약(CRC)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빈곤과 질병,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1996년 굿네이버스는 민간단체 최초로 국내 아동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신고체계를 통한 아동학대 상담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동학대 국가시스템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주도해 왔다. 가정 내 문제로 묵과되어 왔던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끄집어내고 실태조사와 전 국민 서명캠페인,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에 이르렀고 동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됨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굿네이버스는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연구와 제도 개선뿐 아니라 연령별 아동권리교육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

들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권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옹호(advocacy) 활동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자, 2012년 국내 NGO 최초로 좋은마음센터를 개소하여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와 지역사회 욕구에 맞춘 특화사업 진행하며 아동과 지역사회의 심리정서적 안 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 위탁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보장 및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 아동학대 신고접수, 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지원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sup>8)</sup>

#### (1) 설립 목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고아구제 사업을 위한 모금전문가 클라크 목사의 미국기독교아동복지회(CCF) 한국지부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클라크 목사는 중국 아동 돕기를 위해 중국에 머물러 있었는데, 중국에 머물러 있었는데 중국 못지않게 심각했던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1948년 10월 구세군후생학원, 혜천원, 절제소녀관 3개 시설에서 4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CCF 한국지부의 첫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1960년까지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준비가 없었던 한국에서 CCF의 아동구호는 당시 여러 외국 원조기관 중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가장 큰 몫을 담당하였다.

#### (2) 역사

우리나라는 미국 원조를 받던 의존의 시기를 지나고 1963년~1975년경에는 아동복지사업의 선두로 발돋움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구호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당시 CCF는 ‘아동은 가정에서’를 모토로 가정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을 실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아동 중 연고자가 있거나 입양, 위탁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아동은 가족의 품 안에서 키우도록 한 것이다.

이때 탄생한 ‘아펜셀라 어린이회’는 미국의 후원자와 한국 어린이를 1대 1로 결연하는 사업을 전개하며 지금의 사회복지관의 효시가 된 거택보호사업을 본격화하였다. 1976년 이후 10년간은 자립준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어린이재단은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돕자’는 물결에 힘입어 정부로부터 결연사업 수탁, 서신교류 서비스 시작, 전국후원회와 해외후원회 조직, 언론과의 활발한 협력 등 후원자 개발 및 기금 마련에 힘썼다. 이때 실종아동찾기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미아찾기운동을 추진한 재단이 1986년 정부로부터 어린이찾아주기 사업을 공식 위탁받아 운영했다. CCF는 1986년에 이르러 약 1억 달러, 10만 명 지원의 빛나는 역사를 뒤로 하고 외원 지원을 종결하면서 재단은 ‘한국어린이

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http://www.childfund.or.kr))를 참조하였다.

재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1987년~1996년간에는 국내 복지사업 확장의 시기로 들 수 있다. 재단은 자립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결손가정 아동을 포함해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장하였다. 당시 재단은 정부 차원에서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도, 1993년부터 가정위탁양육을 수행하였다. 또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아동보호사업의 역사에 선명한 자취를 남겼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해외아동돕기 사업에도 뛰어들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아시아 3개국 지원을 시작으로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전문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도약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국내 복지사업의 확장시기를 도표를 통해 보면 1989년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표 2-1] 국내 복지사업 확장기

1987	12	제1회 전국소년소녀가장 생활수기 공모 실시
1988	05	중증장애아동 요양시설 한사랑마을 개원
1989	03	<b>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창립</b>
1990	03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 실시
1992	03	불우아동 결연사업을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하는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확대(재가 노인, 재가 장애인)
1994	07	법인 명칭 '한국복지재단'으로 변경
1995	01	해외지원사업(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시작
1996	12	구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3) 아동학대관련 사업

1997년~2009년 사이에는 해외 아동을 돕는 것을 본격화하였다. 사회복지관 내에 아동가족 상담센터를 통합해 운영했고, 구로노인복지관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한사랑장애영아원·중증장애인 자활을 위한 한사랑학교 등을 개소해 복지사업의 대상을 확대해나갔다. 2003년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가정위탁사업을 10개소로 확장 운영했으며, 200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위탁 받아 실종아동전문기관을 개소하였다. 한편 해외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02년에는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캄보디아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대북지원사업을 시작, 영양 및 보건 의료지원사업 등을 전개했다. 2008년 60주년에 맞추어 재단 이름을 한국복지재단에서 어린이재단으로 바꾸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이 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아동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예방센터와 폭력 예방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 운영하게 되었다.

[표 2-2] 예방센터와 폭력예방관련 프로그램

1997	03	중증장애아동 대상 한사랑학교 개교, 한사랑장애영아원 개원
	10	KBS '사랑의 리퀘스트' 공동진행
1998	10	창립 50주년 기념 및 새 상징 선포
2000	05	'2000년도 대한민국 장한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 수상



	10	5개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
2001	02	5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
	03	대북민간단체협의회 가입 및 대북지원사업 시작
2002	05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
	06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 가입
2003	04	10개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2004	05	산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06	경남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07	스리랑카아동지원사업 시작
	09	북한 평양에 빵 공장 준공
2005	12	실종아동전문기관 수탁(보건복지부)
2006	12	희망나눔센터(1588-1940) 개소
2008	01	'어린이재단'으로 명칭 변경
2009	02	아동폭력 예방 프로그램 CAP 국내최초 도입
	04	시에라리온 세네갈 지원사업 시작
	07	아동대상 사회복귀시설 아이존 사업 시행
	09	아동폭력예방프로그램(CAP) 시작
	11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공동진행

2010년~현재까지는 글로벌 아동복지 대표기관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다. 2010년 어린이재단의 BI '초록우산'을 채택, 어린이재단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불리도록 하면서 구로노인복지관을 비롯, 노인돌봄 서비스를 과감히 줄이고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체제를 강화하였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나영이 사건)에 앞장서고 아동 환경개선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Advocacy(아동 옹호)사업을 재단의 주력사업으로 삼는 한편, 해외 아동 돕기 직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국내·외 아동을 돕는 글로벌 아동복지 대표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발생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나영이의 부탁> 캠페인 통해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학대를 받은 아동은 신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정서불안, 감정조절 기능 저하 등 심리적인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며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아 어린이재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6개소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에게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학대와 폭력문제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과 함께 진행한 'Free' 캠페인 및 다양한 옹호활동을 통해 SDGs 16.2에 아동보호 의제를 포함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 보건, 식수위생, 자립지원 사업에서 아동보호 요소를 강화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sup>9)</sup>

9) 본고에 사용되어진 세이브더칠드런에 관한 모든 자료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www.sc.or.kr](http://www.sc.or.kr))를 전적으로 참조하였다.

## (1) 설립 목적

전쟁과 전쟁영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던 창시자인 어린 에글렌타인은 1914년, 그녀의 나이 38세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을 목격하고 전쟁의 참상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다. 특히 어른들이 벌이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전쟁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러진다는 생각을 굳히면서 전쟁으로 인한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초월해 각국이 협력하는 '국제 협력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1920년 1월 제네바에서 '국제 세이브더칠드런 펀드 연합'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킴과 동시에 1920년 1월에 현재 '국제연합'(UN)의 전신인 '국제연맹'도 설립되었다. 이처럼 당시 그녀의 행보는 세계 지도자들과 맥을 함께 할 정도로 매우 선진적이었다. 이렇게 세이브더칠드런이 국제기구가 되면서 곧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에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소가 꾸려지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아동'에 초점을 맞춘 NGO를 창립한 그녀는 종교, 인종, 국적,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거침없는 활동으로 전 세계에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적국' 이었다는 이유로 연합국이 펼친 봉쇄정책 속에서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오스트리아의 기아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기아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실제 아이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직접 제작하여 극심한 굶주림으로 제대로 된 발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1919년 5월 트라팔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의 행보가 '봉쇄정책 완화' 마저도 '적국을 돕는 배신자'로 여겨지던 시절에 '적국의 아이들을 돕자'는 그녀의 외침은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시작된 것이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인류 최초로 '아동권리'를 주창했으며, 지난 100년간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일해 오고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설립 목표는 첫째,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꾸는 vision(비전), 둘째,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Mission(사명), 셋째, 책무(Accountability), 포부(Ambi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Creativity), 그리고 정직(Integrity)을 행동가치(Values)로 두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윤리행동(Code of Conduct)도 두고 있다.

## (2) 역사

세계적인 지부 사무소를 가지고 아동구호사업을 시작한 세이브더칠드런은 1953년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전쟁고아 등 한국전쟁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시작한 것을 필두로 구호사업에서 농촌지역개발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갔다.

핵심적인 역사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표 2-3] 구호사업의 역사

1953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전쟁고아 등 한국전쟁 피해자 대상 구호 활동 시작
1954		양친결연사업 전개
1950		구호사업에서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영역 확대
1972		지역사회 개발사업 <씨버드(CBIRD : Community Based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시작
1980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미국, 캐나다의 한국지부 통합,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복지회 설립
1981		한국지역사회복지회, 국제 세이브더칠드런연맹에 회원국으로 가입
1991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역사회복지회로 법인명 변경
1996		내몽골 농촌지역 기초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외 교육사업 시작
1997		영양의료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북한아동지원사업 시작
2002		사회복지법인 한국세이브더칠드런으로 법인명 변경
2004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합병,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로 법인명 변경 * 한국어린이보호재단 : 국내 선천성 심장병 환자 의료지원을 위해 1979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005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교육 재건사업으로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 시작
2007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캠페인> 시작
2008		국제 세이브더칠드런연맹 총회, 서울에서 개최
2009		네팔 분쟁영향지역 교육사업 <미래를 다시 쓰자(Rewrite the Future)> 시작
2010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 국내 빈곤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체인지더퓨처(Change the Future)> 시작, <염소캠페인> 시작
2011		한국 최초로 아동의 목소리를 담아 작성한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 제출, 차별방지 캠페인 <다양한국 만들기> 시작
2013		3'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아프리카 여아 학교 보내기 <스쿨미(school me )캠페인> 시작

2014	에볼라 피해지역 지원 및 서명운동 진행, '가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시선 : 국제개발협력과 미디어의 역할 토론회' 개최
2015	단원고-시리아 청소년 공동 사진전 '서울, 자타리를 만나다' 개최,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 시작, <다양한국 만들기 캠페인>, 제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단체분야 수상
2016	글로벌 캠페인 <에브리 라스트 차일드(Every Last Child)> 시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2017	국내 아동보호 <한 아이 캠페인> 시작, 동아프리카 가뭄 인도적 지원 전개
2018	<국내 난민아동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 인도적 지원
2019	세이브더칠드런 창립 100주년, 100주년 글로벌캠페인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 (Stop the War on Children) 시작

### (3) 주요 사업

해외 세이브더칠드런 사업으로 첫째, 교육을 들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취약한 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이 남녀 구분 없이 발달 단계에 따른 양질의 교육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보건영양부분에 있어서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5세 미만 아동이 없도록 산모와 신생아 및 영유아를 위한 보건영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생계지원이 있다. 부모와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보호받고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넷째, 해외결연을 통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 9개 국가에서 아동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의 생애 주기에 맞춰 5개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지진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무력분쟁, 내전 등 인도적위기 상황에서 위협에 처한 아동을 돕고 위기상황에서의 구호물자 전달, 교육과 심리·정서치료를 지원하고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도록 인도적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섯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놀이터환경개선, 도시놀이터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가정위탁아동지원, 난민아동지원, 위기가정지원, 농어촌아동지원, 지역내 아동보호 시설운영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전문가가정위탁보호 활성화, 가정위탁 청소년 자립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 3) 아동학대관련 사업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폭력과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에브리 라스트 차일드(Every Last Child)>를 시작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도 발표하였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업을 국외와 국내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도표화 하였다.

[표 2-4] 국외 아동학대관련 사업

아동보호·생계·교육 통합 지원	아동을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 부모교육, 대안교육 등 생계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아동의 자립 지원 ◆ 지원국가: 네팔
홍등가 아동 통합지원	인신매매 위험 아동 구조 등 홍등가 지역 내 아동을 보호하는 한편, 방과 후 교육 등 아동의 보호와 발달을 위한 통합 지원. 부모, 지역주민,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활동 지원 ◆ 지원국가: 방글라데시
아동보호·보건·영양 통합지원	지역아동보호위원회 운영, 임신부 대상 산모교육, 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아동보호 및 보건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 지원 국가: 인도네시아
도로안전	교통사고가 아동 사망 원인 2위에 오를 정도로 도로 위에서 아동의 안전이 위협 받는 태국에서 오토바이 이용 시 아동 헬멧 착용 교육, 도로안전 인식개선 활동 진행 ◆ 지원국가: 태국

국내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학대관련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즉각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고 있다.

아래 표는 아동학대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절차이다.

[표 2-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상황 조사	경찰과의 동행출동을 통한 현장 조사
---------------------	---------------------

학대 피해아동 보호	피해아동 분리 및 병원 응급처치, 위탁가정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보호
심리정서치료 지원	피해아동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지원. 가정의 근본적인 변화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학대행위자 심리검사와 치료 지원
추가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연계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가정회복 지원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교사, 의료인, 경찰,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시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체벌과 학대가 없고 비폭력적인 양육과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 훈육’을 도입하고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 2-6] 긍정적 훈육

글로벌 콘텐츠 국내 도입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과 캐나다 마니토바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긍정적 훈육 국내 도입 및 정착
긍정적 훈육 기본과정	아동권리교육과 긍정적 훈육의 기본 내용을 함께 구성하여 비폭력적인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대중강연 실시
긍정적 훈육 심화과정	양육자가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을 권리적으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심화 과정 교육 실시
전문강사 양성	긍정적인 훈육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양성과 보수교육을 담당할 슈퍼바이저 양성

더불어 캠페인과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책무를 다하도록 두 차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그 여부를 정부에 촉구하며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에 민감할 수 있도록 체벌근절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사업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2-7] 국내 아동학대관련 주요 캠페인 사업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체벌 사망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li> <li>‘동반자살’ 표현 사용 중지 요청 의견서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자의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끌어냄</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근절 Q&amp;A 소책자 발간</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학대예방 토론회 진행</li> <li>▪ 체벌을 미화한 방송, 광고물 등을 제보 받고 주의를 요구한 &lt;매의 눈을 빌립니다&gt; 캠페인</li> <li>▪ &lt;인문학으로 바라본 ‘체벌’ 이야기&gt; 강연 진행</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진행된 ‘인문학으로 바라본 체벌 이야기’ 강연 내용을 엮어 책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발간</li> </ul>

## 5)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sup>10)</sup>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1989년 보건복지부와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전국적으로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보호하며 제도적 개입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과,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기까지의 원조,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폭력과 학대 없는 가정만들기 및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위한 노란 리본달기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30년이라는 시간동안 1년에 2차례씩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의 대주제를 가지고 제1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60회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학술세미나의 주된 내용의 키워드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그리고 ‘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접근으로써의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입 등 아동학대방지와 예방을 위한 보호방안과 관련된 일련의 많은 학술적 활동들이 한국의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초석을 제공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명실공이 긴 역사를 가진 기관임은 추호의 의심이 없는 바이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30년간의 긴 연혁의 구체적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이배근 회장의 발표로 대신한다.

## 6) 소결

앞서 서술한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에 대해 비교해보면 제일 먼저 설립된 기관은 1919년에 설립된 세이브더칠드런이고, 1948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설립되었으며, 1950년에 월드비전이, 1988년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1991년에 굿네이버스가 설립되었다.

순수하게 내국민에 의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로서 활발한 활동과 역량을 미치고 있는 단체는 굿네이버스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립목적에 있어서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는 역사

10)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홈페이지([www.kapcan.or.kr](http://www.kapcan.or.kr))와 이배근 회장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30년 회고와 전망’ 원고 참조

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구호활동으로 출발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과 시급한 현실을 직시하여 설립이 되었다.

[표 3-1]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비교도표

기관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설립연도 / 설립자	1950년 / 밥 피어스 목사, 한경직 목사	1948년 / 클라크 목사	1919년 / 에글렌타인 쥘	1991년 / 이일하	1988년/한국어린이재단(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유니세프의 지원
설립배경	한국전쟁으로 고통 받는 고아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전쟁고아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	전쟁으로 인한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협력하는 '국제 협력 질서'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갖고 설립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과 시급함으로 1989년 3월 24일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유니세프와 한국 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됨.
종교	기독교 기반	기독교 기반	없음	기독교 기반	없음
주요내용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으며, 전 세계 약 91개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개발기구	전 세계 1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 Fund Alliance)의 회원기관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 어린이들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 옹호사업,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비영리기구로서 120여 개국 이상에서 '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의 빈곤아동을 돕는 국제 기구	1996년, 국내 최초로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하고, 전세계 33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 사업과 국제구호개발	학술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 지부 및 지회, 후원회 설치 운영 아동권리전문지도사 교육 홍보출판 사업 등



	중 하나	긴급구호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아동복지전문 기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주 요 활 동	지역개발 사업 국제긴급구호 사업 옹호 사업	생존지원 사업 보호지원 사업 발달지원 사업 권리옹호 사업	어린이 보건의료 사업 빈곤아동 지원 사업 교육 사업	학대·위기가 정, 시설아 동지원 국제구호개발 사업 사회개발교육 사업 대북지원 사업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학술 활동 및 캠페인 사업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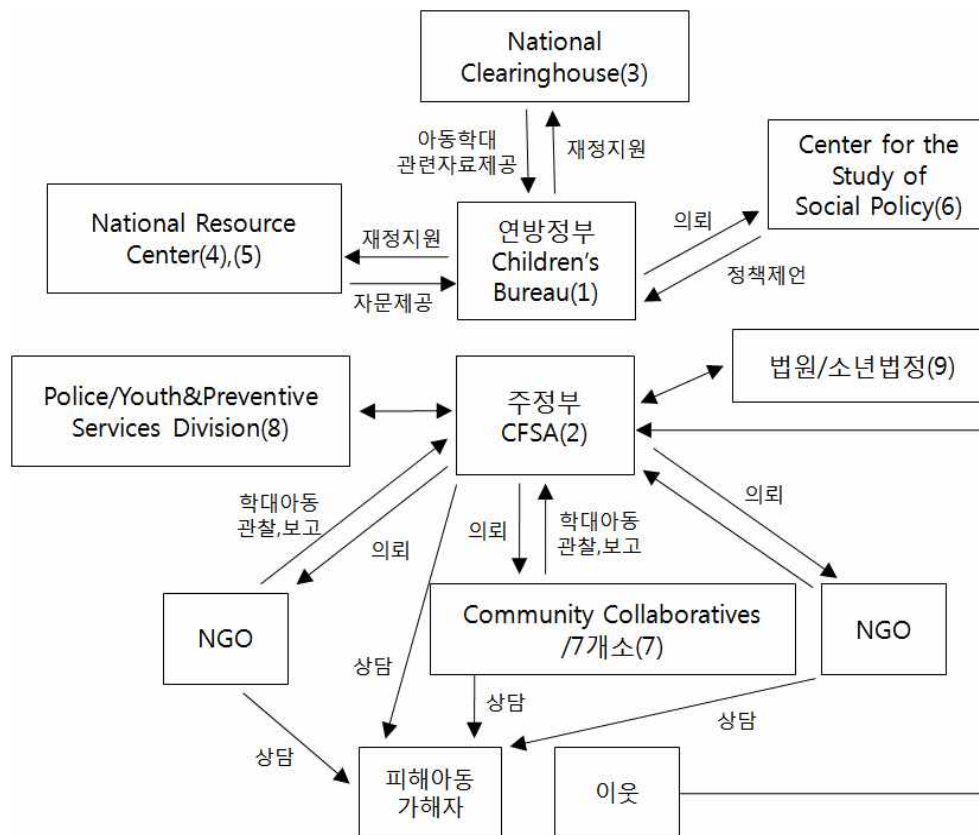
### Ⅲ.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의 외국 사례

#### 1. 외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민간역할 현주소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 1) 미국

미국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동을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조직 및 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대중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조직,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조직, 자금지원 조직, 관련 정보의 제공조직 등 그 기능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sup>11)</sup>

11) 한미현, 앞의 논문(연구), 344면 ; 문영희, 2011: 117면 재인용



<그림 3-1> 미국(워싱턴DC)의 아동보호체계

## 2) 영국

영국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는 긴급조치와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보호조치로 분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아동이 중대한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임의의 재택원조로 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사례회의(case conference)를 통해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면 지방당국회의(Local Authority)나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 NSPCC)가 보호소송절차(care proceeding)를 제기한다. 또 사례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응급한 경우에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인 보호소송절차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호명령(Care Order)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의 아동법에서는 학대를 하는 친생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구축하려는 강제적인 지도 및 보호명령(Supervision and Care Orders)제도를 도입하여 아동학대보호가 아동복지법의 최전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sup>12)</sup> 보호명령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서 자녀를 분리시켜 학대피해자녀를 보호하는 것(제31조 제1항)<sup>13)</sup>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Parental

12) 김경호, 앞의 논문, 84면; 문영희, 2011: 112면 참조

13) 지방당국은 보호명령을 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을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된다.(Jonathan Herring, *Family Law*, Pearson Longman 3rd ed., 2007, p.575; 문영희, 2011: 112면 재인용)

Responsibility)을 지방당국에 부여하되, 부모의 친권은 박탈하지 않는 단계의 명령이다.<sup>14)</sup> 구체적으로는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등이 행해지게 된다.<sup>15)</sup> 이 명령은 제17세에 달한 자, 혼인 중인 경우에는 16세에 달한 자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동조 제3항). 이처럼 영국에서는 학대피해자녀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을 갖는 자 등의 동의를 요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부모의 책임을 제한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호명령(Care Order)으로 학대피해자녀를 보호하고 있다.<sup>16)</sup>

한편, 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른 관계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관여하고 있다.<sup>17)</sup>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며,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국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관련부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부서협의체가 아동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회를 개최하며,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시키고, 관련부서 간 협의 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sup>18)</sup>

이와 같이 영국의 아동법 체계는 아동보호에 관한 법원의 명령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sup>19)</sup>, 이러한 명령은 지방정부와 부모에 대해 행해진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이며, 지방정부의 계획과 책임을 중심으로 민간시설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체계이다.<sup>20)</sup>

### 3) 캐나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주인 온타리오 주에는 53개의 아동보호기관(The Children's Aid Society of Ottawa : CAS)이 있으며, 각 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

14) 이화숙, “가정폭력에 대한 영국가족관련법의 보호조치”, 법학논총 제3호,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3, 78면 참조; 문영희, 2011: 113면 재인용.

15)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정위탁이 실시되고, 가정위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설입소가 행해지고 있다.

16)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되고 있으며, 공적 법인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벌, 음식의 박탈, 부적절한 의복을 입히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문영희, 2011: 113면 재인용 참조).

17) 영국보건후생성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 사회사업가들을 위한 아동학대의 평가와 전국의 의사 및 수간호원으로부터 보고된 성적 학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또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임의 동행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확대하였으며, 교육성은 모든 지방교육 당국에 지침서를 배부하였다고 한다(이배근, 앞의 논문, 80-81면; 문영희, 113면 재인용 참조).

18) 문영희,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0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09.8, 560-561면; 이배근, 아동복지, (사)유엔미래포럼 (<http://unfuture.org/?p=3167>)/세계의 아동복지 참조.

19) 1975년 아동법에서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부모와 가족이 개입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 원칙을 내세우고 있었다. 즉 아동법의 기본정신은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적 개입이었던 것이다(김경호, 앞의 논문, 84면; 문영희, 2011: 114면 재인용 참조).

20) 오정수·이혜원·정익중,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나눔의 집, 2006, 66면; 문영희, 2011: 113면 재인용) 한편, 1991년 10월에는 아동보호법이 입법화되었으며, 2000년도 전후에는 정부부처 간에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고 한다(문영희: 2011:114면 참조).

다. 아동보호기관의 역할은 보호가 필요한 16세 미만의 아동<sup>21)</sup>에 대한 조사, 필요한 경우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호, 아동보호와 아동보호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도.상담.기타 서비스의 제공, 법률에 의해 보호하도록 지정된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법률에 의해 보호하도록 지정된 아동에 대한 지도 및 입양을 위한 아동배치 등을 주 업무로 한다.<sup>22)</sup>.

#### 4) 일본

일본에서는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원조제도를 市町村과 아동상담소라고 하는 이원체제로 크게 변경하고, 그 제후를 통해 원조를 행한다고 하는 새로운 대응.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市町村이 아동학대의 통고처로 새로이 부가되어 아동학대의 예방계발이나 예방교육 및 아동양육에의 상담이나 지원을 담당하고, 아동상담소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원조 및 일시보호, 현장조사, 시설입소조치 등의 검토하거나 긴급사태에의 대응 또는 개입.보호.법적 대응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다만, 市町村도 인력부족으로 원조체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네트워크를 조직화하여 그 사무국이 코디네이트 역할을 하고, 실제원조는 네트워크의 구성원들, 결국 보건소나 보육소 혹은 의료기관이나 학교, 민생.아동위원 등의 인재를 활용한 팀지원이 의도되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요보호아동대책지역 협의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또 市町村수준에서는 아동학대의 지식이나 원조 노하우가 없으므로 아동상담소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보완하였다.

한편, 국가기관 간에도 역할을 분담하여 市町村은 아동복지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행함과 동시에 그것을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sup>23)</sup>하는 반면<sup>24)</sup>, 都道

21) 16세 이상인 자에 대한 경우는 경찰에서 취급한다고 한다(문영희, 2011: 119면 재인용).

22) CAS의 주된 서비스로는 아동보호서비스, 입양서비스, 가정위탁보호, 자원봉사 등이 있으며, 이 기관의 2005년-2006년의 아동복지예산은 약 1억 2,000만\$이다(서태욱, 앞의 자료; 문영희, 2011: 119면 재인용 참조).

23) 아동복지법 제10조 ① 市町村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실정의 파악에 노력할 것

(2)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행할 것

(3)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가정 그 외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이들에 부수하는 업무를 행할 것

② 市町村長은 전항 제3호에 열거하는 업무 중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동상담소의 기술적 원조 및 조언을 구하여야만 한다.

③ 市町村長은 제1항 3호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및 정신보건상의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의 판정을 요구하여야만 한다.

24) 한편, 厚生労働省 雇用均等.児童家庭局의 市町村児童家庭相談援助指針(2007)에서는 市町村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i) 주민으로부터 통고나 상담을 받고, 일반 자녀양육의 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 등의 비근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대응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케이스에 대하여는 市町村 중심으로 대응한다.

(ii) 사례의 긴급도나 곤란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행하고, 현장조사나 일시보호, 전문적 판정, 혹은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 등의 행정권한의 발동을 수반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곤란한 사례에 대하여는 아동상담소에 곧바로 연락한다.

(iii) 시설을 퇴소한 아동이 안정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정기적인 방문 등을 행하여 아동을 돌봄과 동시에 가족이 품고 있는 문제의 경감화를 꾀하는 등, 스스로 대응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의 대응이나 중대한 사례에 관한 창구, 스스로 대응해 온 사례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발동을 수반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된 경우의 아동상담소에의 연락을 맡는 것이 요구된다.(岡本正子/二井

府縣은 市町村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행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에 응하도록 하였다.<sup>25)</sup>

## 5) 소결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개입이 강화되어 있고, 국민의 신고체제가 의무화 되어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의 법적 조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즉, 선진 국가들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는 학대를 하는 친생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구속하려는 강제적인 지도 및 보호명령(Supervision and Care Orders)제도를 도입하여 아동학대보호가 아동복지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적 법인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학대에 대한 사회합의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민간단체에서는 전 국민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될 때까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간단체 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아동학대 발굴과 신고체제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는 국가가 아동이 건강하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가 주 업무를 이루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해 국가로 포섭이 되는 시점에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는 이러한 의무로부터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사안인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캐나다에서는 아동학대의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 및 구류형이 규정되어 있다.<sup>26)</sup> 또 아동학대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아동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관련 민간단체는 학대피해아동이 가족집단주의 문화에 의해 아동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문제에 대하여 민간기구에 의한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학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하여,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입소형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되어 민간형으로 아동과 가정에 관한 모든 상담에 24시간 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에 따

仁美/森實, 教員のための子ども虐待理解と對應, 生活書院, 2009, 17-19면)

25) 아동복지법 제11조 都道府縣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하여야만 한다.

(1)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市町村의 업무의 실시에 관해 市町村 상호간의 연락조정, 市町村에 대한 정보의 제공 그 외 필요한 원조를 행할 것 및 이것들에 부수하는 업무를 행할 것

(2) 아동 및 임신부의 복지에 관하여 주로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할 것

1. 각 市町村의 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견지로부터 실정의 파악에 노력할 것

2. 아동에 관한 가정 그 외로부터의 상담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에 응할 것

3.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해 필요한 조사 및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및 정신보건상의 판정을 행할 것

4.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해 3호의 조사 또는 판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도를 행할 것

5. 아동의 일시보호를 행할 것

26)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최고 구류 6개월, \$2,000이하의 벌금을 받는다.)하고,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 그 자격을 정지 혹은 상실시키기도 한다.

라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피해아동은 학대가 발생되어 피해를 입게 되면 아동이 살던 집에서 일단 거처를 옮기게 되어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또한 제2차 피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에서 떠나 제3의 장소에 가게 될 경우라도 지역사회내의 민간단체간의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이 느끼는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 나아가야 할 방향

아동학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물론 생명이 큰 위협을 당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뜻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이 세상에 발견이 될 때는 좀 더 빨리 학대피해의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지대에서 생활을 하고 치료적 개입에 의해 피해로부터 회복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통상 학대피해아동들을 가해하는 사람들은 학대피해아동의 옹호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피해아동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대상으로부터 학대피해를 입게 될 때에는 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자체가 생활근거지를 잃어버리는 일이고 당장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일이므로 자구력이 극히 미약한 아동들에게는 소리없는 공포요, 소리낼 수도 없는 이중의 고통스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의 아동학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아동의 인권이나 복지를 중시하는 입장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학대’의 개념을 미국의 ‘child abuse’같은 의미인 광의로 사용하면서 부모가 좋다고 생각해서 한 행위조차도 아동의 측면에서 유해한 것은 학대의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측면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한 인간의 출생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영향력은 한세대를 넘어 3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대한 일이다.

한 인간의 출생이 긍정적 성장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나라의 위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지금의 근시안적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부터 제도화된 복지로 가고 있고 특히 현 정부체제에서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커뮤니티 케어의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공공의 전달체계를 확대해 가는 현 정부의 아동정책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4대 영역을 두고 있다. 포용국가의 아동정책의 4대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4-1]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4대 영역

아동정책 영역	핵심과제
보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 종료 후 지역사회 내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 지원
인권 및 참여	누락 없는 출생 등록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	아동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놀이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참조>

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분야를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그리고 놀이 4대 영역으로 나누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고,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종래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며 가정 환경 조사를 통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호조치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 1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 할 예정(2019년 10월 예정)이며, 또한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법’으로 결정하게 하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게는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 지원할 수 있는 보호체제로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체벌금지 부분에 있어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행을 촉구함에 따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민법상의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변화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부족과 민간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한계에 대해 지역별, 위탁기관별로 아동보호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동학대예방 및 재학대 감소를 위해서 공적영역에서 간과되는 부분을 시민자원 개발을 통해 하부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민간단체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진 가족체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가 갈 수 있는 장(場)마련을 위해서 민간단체 간의 범네트워크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창기의 민간단체의 역할은 주로 단순구호 활동이 주를 이루다가 지금은

국가와 연대를 통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발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 정부의 아동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 포용되었다. 그러나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전히 민간의 위탁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그간 오랫동안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활동한 일선의 아동보호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살려 공적체계와 민간체계가 함께 학대피해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 4 주제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아동학대 연구동향 분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을 중심으로-

박 은 미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아동학대 연구동향 분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을 중심으로-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미

### I. 서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던 시기인 1988년 11월에 국제 아동학대예방협회의 부회장 Jaap E. Deuk박사를 초청하여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한 제1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88년 4월에 이미 ‘미아 발생의 예방 및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 협회는 설립 준비를 마치고 1989년 3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이미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할 정도로 학술활동에 대한 비중이 컸다.

창립 이래로 연2회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아동학대 분야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개념을 규정하며,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실천현장과 학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규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2001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개입의 공적 전달체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사업, 대국민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민간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특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지금까지 60회의 학술 세미나를 진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연구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의적절하게 우리사회에 필요한 주제에 관한 담론을 이어왔고, 아동학대 실천현장이 구축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신고 및 개입체계 및 치료·보호체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한국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연구와 실천의 주춧돌이자 구심점이 되어 온 본 협회에서 30년간 이어온 60호의 학술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된 연구들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

### 1. 아동학대 연구

1860년 파리의 법의학 교수인 Ambroise Tardieu가 32명의 아동이 체벌과 화상에 의해 사망한 것을 부검에 의해 밝히면서 최초로 ‘피학대 아동 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에서는 1961년 Henry Kempe가 이 개념을 미국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Kempe & Kempe, 1978).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1월 31자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국회 법제처가 번역한 자료가 있고(국회도서관 검색), 1975년 오창규 등이 피학대 아동 증후군 사례를 보고하면서 아동학대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술자료로는 1978년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권은주의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이라는 연구가 최초의 아동학대 관련 연구로 검색되었다.

그 이전에 비학술자료로써 가장 최초의 자료는 1930년대에서 검색되는데, RISS의 검색을 통해서 1930년 조선통신에 게재된 ‘아동학대방지법안’이라는 일본어 신문기사가 아동학대에 관한 최초의 자료로 검색되었다. 이 사설에서 몹시 때리거나 일을 시키는 것은 학대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아동학대방지법안에서 금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에서는 최초의 아동학대 관련 자료로써, 1935년에 고헥경과 최승만이 각각 신동아사의 신가정이라는 잡지의 11월호에 게재한 ‘보호는 당연하다: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여론,’이라는 글과 ‘아동을 우대하자’라는 글이다. 고헥경(1935)은 아동학대방지법을 언급하면서, 아동은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보호는 소유로써가 아니라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의 소유이므로 친부모라도 아동의 권리를 침범하면 상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정당한 보호와 감호를 등한히 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더 적당한 곳으로 갈 권리를 법률상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학대방지법의 취지임을 피력하였다. 최승만(1935)은 아동의 체벌이 만연한 당시 사회상황을 예로 들며, 20세기는 아동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는 엘렌 케이와 아동중심의 교육을 강조한 칸스베르크나 몬테소리를 언급하며 아이를 학대적으로 대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회도서관 자료를 연도별로 검색하면 흥미로운 동향이 파악되는데, 1978년 권은주의 연구 이후 1980년대에 다소 증가하여 학술기사와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37건, 1990년대 초반에 74건, 후반에 195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509건, 후반에 53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1,951건으로 급증하였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의 1/3에 가까운 연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것이다.

2019년 현재 RISS에서 아동학대를 검색키워드로 검색하면, 학위논문 1,421건, 국내학술지 논문 2,150건, 학술지 1건(한국아동학대예방대전직할시협회 발행,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1993), 단행본 2,831건, 연구보고서 등 242건, 공개강의 23건 등 총 6,668건이 검색된다(2019. 11. 2.). 물론 여기에는 검색의 정확성이 낮은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반면에 ‘아동학대’라는 검색어 이외의 연관 검색어로 검색될 수 있는 논문들도 훨씬 많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 보다는 많은 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계몽적으로 아동학대를 다루기는 했으나,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 전쟁이후 사회복구 등과 같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멈춰 있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학술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 7월 13일에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포함된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2001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서 진행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 2.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초기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로는 송은일(1991)의 연구가 있다. 1991년까지만 해도 연구동향을 파악할 만한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전까지 발표된 총 17편의 논문에 기초해서 아동학대의 개념, 원인, 유형, 발생률을 정리하고 연구동향을 간략히 정리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인용한 참고문헌 17편 중 7편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발간한 세미나자료집(1989년 2호)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이었다. 이후 1996년에 다시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는데, 이소희와 김민정(1996)은 아동학대에 관한 학술연구가 처음 발표된 1975년부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문헌목록집이 발간된 1993년까지의 연구기간을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당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관으로 서울시립아동상담소, 한국복지재단(구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들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초기 아동학대 연구에 대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이 확인되었다.

이소희와 김민정(1996)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1993년에 발간한 ‘아동학대 문헌 목록집’에 수록된 총 77편의 논문을 통하여 1993년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이후, 서우경(2001)은 2000년에 이르러서 1993년 이전의 연구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면서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표된 100편의 논문을 통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의 국외 연구 539편도 분석하여 국내 연구와 비교하였는데,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항목은 ①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②아동학대 연구방법, ③아동학대 발달영향, ④아동학대 원인, ⑤아동학대 실태, ⑥아동학대 대책 등 6개였다.

그 다음 황옥경(2004)의 연구가 이어졌는데, 황옥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출간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발표 자료집에서 총 110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황옥경은 세미나 주제, 논문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을 연도별, 주제별로 살펴보았는데, 연구 주제는 ①학대실태, ②학대개념, ③학대후유증/치료, ④성학대, ⑤관련법/보호서비스, ⑥아동권리, ⑦아동복지시설, ⑧학교폭력, ⑨자녀양육/가족기능, ⑩학대예방, ⑪예방센터, 등 11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김춘경, 이주옥, 송영주(2009)는 1985년부터 5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국내 신문기사 및 연구논문 585편을 연도별, 연구주제별로 분석하였는데,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①학대유형별, ②학대원인별, ③학대영향별, ④아동학대 치료방법별, ⑤아동학대 대책방안별, ⑥아동학대 평가 및 동향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표시하였다.

윤혜미(2010)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아동의 성학대와 관련 총 289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서비스가 시작된 후 10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단일 주제로는 연구물의 축적이 많지만 이중 아동 성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연구물의 양이나 내용상의 균형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연구의 포화도, 연구주제, 연구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 윤혜미의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의 분류를 ①아동(기)성학대 실태 연구, ②성학대관련(원인, 영향 등) 변인의 인과적 연구, ③치료 프로그램이나 모델의 효과 및 평가 연구, ④가해자 관련 연구, ⑤아동(기)성학대 관련 정책이나 제도 연구, ⑥척도 개발 연구, ⑦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송민경(2013)은 229편의 논문을 분석하며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는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코딩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주제의 분류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①정책·법·보호서비스, ②현황 및 실태, ③관련 변인의 인과관계, ④치료/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및 평가, ⑤척도 개발로 분류하였다.

최복천과 김유리(2014)는 국외논문 26편, 국내논문 3편 등 총 29편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①장애아동 학대현황, ②장애아동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학대 위험요인), ③학대가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학대후유증), ④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 4개 항목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대상논문의 수가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에는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관하여, 김영란과 도미향, 차미숙과 김광웅, 등의 연구가 있었는데, 김영란과 도미향(2017)은 보육·교육기관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연구주제를 ①학대실태, ②학대요인, ③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④학대 예방 및 교육, ⑤학대 정책과 법류, ⑥기타, 등 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차미숙과 김광웅(2017)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KCI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 중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논문 418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학문분야, 발행연도,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 등을 분석하였는데, 2000년, 2004년, 2013년에 급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주제는 ①실태 및 인식, ②제도·법·정책, ③학대의 원인, ④학대의 영향, ⑤개입 프로그램, ⑥연구와 도구개발,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학대의 영향, 실태 및 인식, 제도/법/정책 순의 빈도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관한 초기 연구부터 최근 연구까지를 기초로 하여, 둘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연구주제 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의 주제 분류

서우경 (2001)	황옥경 (2004)	김춘경 외 (2009)	윤혜미 (2010) *	송민경 (2013)	최복천, 김유리 (2014) **	김영란, 도미향. (2017)	차미숙, 김광웅 (2017)
개념, 유형	개념	개념, 인식					
실태, 대책	실태, 대책	실태	실태	현황, 실태	현황	실태	실태, 인식
	정책, 보호 서비스	대책 방안	정책, 제도	정책, 법, 보호 서비스		정책, 법률	제도, 법, 정책
원인		원인	원인 영향		위험 요인	요인	원인

			증상 인 과관계				
발달 영향	후유증· 치료	영향			후유증		영향
		치료 방법	치 료 프 로 그 램 효과	치 료 개 입 프 로 램 효 과 성 평가	지원 서비스		개입 프 로 그 램
연구 방법			척도 개발	척도 개발			연구, 도 구 개발
	예방					예방, 교육	
		기타	기타			기타	

\* 윤혜미(2010)의 연구는 아동학대 유형 중 성학대를 대상으로 함.

\*\* 최복천, 김유리(2014)의 연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함.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는 1988년 협회를 창립하면서 ‘미아발생의 예방 및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에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5편의 논문이 수록된 세미나 자료집 제1호를 발간하였다. 1989년 2호는 예외적으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이외의 논문도 포함시켜 16편의 논문이 수록된 저서의 형태로 발간되었고, 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3.6편의 논문이 실렸다.

본 연구대상은 1988년 사전 호부터 2019년 59호까지 모두 60호의 세미나 자료집 중 누락된 17호, 25호, 25를 제외하고 57호에 실린 206편의 논문이며, 연도별 세미나 주제와 세미나 자료집에 실린 논문편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세미나 주제 및 논문편수

연도	호 수	세미나 주제	논문 편수
1988	0	미아발생의 예방 및 대책-미아가정 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2
1988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보고서	5
1989	2	아동학대-한국의 현황과 치료 개입-	16
1990	3	교육상황에 있어서의 체벌	5
1990	4	아동 성폭행 실태와 과제	6
1991	5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6
1991	6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3
1992	7	아동학대와 전문적인 상담치료 기술개발	5
1992	8	현행법체계와 아동학대	5
1993	9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	3

1993	10	공포없는 아동훈육-자녀훈육의 어제와 오늘-	3
1994	11	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5
1994	12	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	4
1995	13	한국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	4
1995	14	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4
1996	15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3
1996	16	아동의 권리와 법	3
1997	17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와 사회사업 개입	-
1997	18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3
1998	19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3
1998	20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아동학대	2
1999	21	한국아동학대예방치료활동의 현황과 과제	5
1999	22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2
2000	23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6
2000	24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제공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3
2001	25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아동학대예방교육프로그램	-
2001	26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	-
2002	27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1년 사업평가 및 활성화방안	4
2002	28	청소년보호를 위한 또래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 -행복한가정,행복지침	4
2003	29	아동학대 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2
2003	30	아동성학대의 개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5
2004	31	한국의 아동보호 회고와 전망	4
2004	32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안	4
2005	33	지역사회 변화와 아동학대예방	3
2005	34	한국의 아동방임:부모의 방임인가? 사회의 방임인가?	3
2006	35	아동성학대 대응방안으로서의 법체계와 전문기관의 역할	3
2006	36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방안-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3
2007	37	유괴 및 실종아동과 아동보호대책	3
2007	38	동반자살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2
2008	39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	3
2008	40	한·일 아동학대 예방 관련법 및 제도 비교	2
2009	41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3
2009	42	아동학대의 이해와 제도적 개선	3
2010	43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CYS-Net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체제 구축	2
2011	44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입	2
2011	45	아동학대의 영향과 피해자 보호	2
2012	46	아동학대 대처방안-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중심으로	1
2013	47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3
2013	48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5
2014	49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3
2014	50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보호방안	4
2015	51	양육자와 신고의무자로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태도	2
2015	52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3
2016	53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발전방안	3
2016	54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현장중심으로	3
2017	55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3
2017	56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4



2018	57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3
2018	58	아동보호와 아동안전	3
2019	59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3
계		세미나 60회	206

##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검토한 후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범주화를 위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총 60권의 세미나 자료집에 게재된 206편의 분석지침에 맞게 논문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연구대상, 연도별로 분류하여 코딩북을 작성한 후, 1차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1차 코딩작업 이후, 재검토하는 작업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분류를 위한 항목 설정은 분석 범주가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위 범주 속에 하위범주를 포함시켜 선행연구의 분석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김춘경, 이주옥, 송영주, 2009).

주제별 분류는 분석항목을 ①개념, 이해, 사례, ②실태, 현황, ③법, 정책, 대처방안, 전달체계, ④원인, ⑤영향, 후유증, ⑥치료, 개입 서비스, ⑦예방, 예방교육, ⑧가족, 시설,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⑨특정 유형의 아동학대, ⑩기타, 등 모두 10개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의 분석항목은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아동학대의 개념이나 인식, 이해에 관한 연구, 또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연구들은 ①개념, 이해, 사례로 구분하였다. 아동학대의 실태, 현황 파악을 목적이나 내용으로 한 연구들은 ②실태, 현황으로 분류하였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들, 아동보호전달체계(Child Protective Service System) 등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아동학대에 관한 정책적 노력으로 구분하여 ③법, 정책, 대처방안, 전달체계로 분류하였다. 가족이나 아동 및 청소년 시설, 혹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폭력은 ⑧가족(가정폭력이나 가족의 역기능 등), 시설, 학교(체벌이나 학교폭력)에서의 아동학대로 구분하였고, 또한 성학대나 방임, 유기 등 특정 유형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⑨특정 유형의 아동학대로 구분하였으며, 대체로 이들 중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는 ④원인에, 아동학대의 영향이나 후유증에 관한 연구들은 ⑤영향, 후유증에, 치료 및 개입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은 ⑥치료, 개입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은 ⑦예방, 예방교육으로 구분하였고, 끝으로 이들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들은 ⑩기타로 분류하였다.

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①학계, ②실천현장, ③공무원, ④사법계, ⑤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5가지 항목으로 일차 분류한 이후, 다시 이들을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된 경우를 학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아동복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법학이나 교육학, 심리학 등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정신의학 등을 포함하여 의학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실천현장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현장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보육기관을 포함한 교육기관 등 4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공무원은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로 구분하였으며, 사법계는 법무부,

검사, 경찰, 변호사로 구분하였다. 법무부는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의 특성상 사법계로 달리 구분하였다. 그 외 부모연대, 언론 등에서 발표자가 있었으므로 기타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에서 특정 대상을 규정한 논문의 경우 모두 코딩한 후, 코딩 결과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였다.

연구주제가 연도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는 지도 살펴보았는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협회가 창립된 1988년부터 2019년까지를 크게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의 정착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성장기,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확장기, 등 3단계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를 다시 전후반기로 나눠서 ①1988년~1993년, ②1994년~1999년, ③2000년~2004년, ④2005년~2009년, ⑤2010년~2014년, ⑥2015년~2019년까지 모두 6단계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3차에 걸쳐 오류 검토 작업을 마친 코딩 자료는 SPSS 버전25로 빈도분석, 다중응답 빈도분석, 다중응답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주제별 분류

총 6권의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된 206편의 논문에 대해서 10개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하나의 논문이 여러 분류에 속하는 경우 다중응답이 가능하도록 코딩하였다. 예를 들면, ‘아동성학대 현황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라는 논문은 성학대를 특정 주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⑨특정 유형의 아동학대, 또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므로 ②실태,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므로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주제가 포함된 ③법, 정책, 대책방안, 전달체계, 등 3가지 분류에 속하도록 다중응답으로 코딩하였다.

206편의 논문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총 352건의 응답 건수로 집계되었다. 이 중 아동학대 법, 정책, 대책방안,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94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성폭력, 방임, 유기 등 특정 유형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74건(21.0%), 가족, 시설, 학교에서의 아동학대가 55건(15.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6건(1.7%)로 가장 적었다.

<표 3> 연구주제별 분류

주제	빈도	백분율
①개념, 이해, 사례	35	9.9%
②실태, 현황	31	8.8%
③법, 정책, 대책방안, 전달체계	94	26.7%
④원인	6	1.7%
⑤영향, 후유증	17	4.8%
⑥치료, 개입 서비스	23	6.5%
⑦예방, 예방교육	13	3.7%
⑧가족, 시설,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55	15.6%
⑨특정 유형의 아동학대	74	21.0%
⑩기타	4	1.1%
	352	100.0%

\* 다중응답

빈도가 높은 연구주제별로 하위 주제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법, 제도, 대책방안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아동학대 보호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전달체계(초기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기능, 성과와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23건, 아동학대법이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법 등에 관한 연구가 22건, 아동복지정책이나 아동학대에 관한 정책에 관한 연구가 5건이었다. 보호방안이나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학대 현황 및 대책, 방임 및 방임 아동에 대한 보호방안 등과 같이 대체로 다수의 연구에서 다른 변수와 함께 다뤄졌기 때문에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아동학대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모두 23건이었는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신고 및 개입 체계가 국내에 설치되기 이전부터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을 시작으로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후에는 이들의 역할과 기능,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아동보호전달체계의 설치 및 개선에 학술적인 기여를 지속해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동학대, 성학대, 가정폭력, 성학대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마다, 혹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법에 관한 제·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들도 계속되었다.

<표 4> 주제별 분류: 법, 정책, 대책방안, 전달체계

주제	빈도	백분율
보호 및 대책방안	44	46.8%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3	24.5%
아동학대 및 관련 법	22	23.5%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정책	5	5.3%
계	94	100.1%

다음으로 높은 빈도의 응답을 보인 연구주제는 특정 유형의 아동학대였다. ‘특정 유형의 아동학대’에는 아동학대 중에서 성학대나 방임과 같은 유형, 혹은 동반자살이나 실종, 아동권리 등 특정 이슈나, 영유아, 장애아동, 청소년, 근로아동 등 특정 대상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켰

다. 이 하위 주제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성학대(성폭력, 성폭행)로써, 21건이었고, 다음은 아동권리(17건), 방임(11건)순이었다. 다음 아동구타에 관한 연구가 4건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1988년과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초기이자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었다. 그 외 유괴 및 실종, 유기, 미아에 관한 연구가 7건이 있었는데, 미아에서 실종으로 개념이 정교화 되고 실천 현장 및 법 체계가 이루어지기 까지 단계별로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한,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도 3건 있었는데, 동반자살이나 성학대, 방임 등은 사회적으로 사건이 발생될 때 필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연구주제로 다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대상에 관한 연구는 모두 74건으로 21.0%의 비율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연구주제는 가족, 시설,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인데, 모두 55건(15.6%)의 연구가 있었다(표 5). 이 하위분류에는 가족, 시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나 가족, 시설, 학교 변수와 관련된 연구들을 포함시켰는데, 가족 관련해서는 가정에서의 체벌이나 훈육(6건), 가정폭력(4건)과 더불어, 결손가정(2건)이나 이혼가정(1건), 영세취업모(2건), 가족의 역기능(1건)이나 역동(1건), 부모역량(1건), 가족 역할(1건), 가정환경(1건), 부모의 정신건강 및 알코올문제(1건) 등 가족 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되었다. 가족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써, 아동학대의 발생과 원인, 영향, 개입 등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으며, 모두 23건이 가족과 관련된 연구였다. 그 외 학대가 발생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방안으로서의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등에 관한 연구가 10건 있었고,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등 보육시설과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8건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적 체벌(6건)이나 학교폭력(8건) 등 학교 관련 아동학대가 14건이 있었다.

<표 5> 연구주제별 분류: 가족, 시설,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주제		빈도	백분율
가족		23	41.8%
시설	아동양육시설	10	18.2%
	보육시설(어린이집)	8	14.5%
학교		14	25.5%
계		55	100%

그 다음은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이나 이해, 혹은 사례연구가 35건으로 전체의 9.9%에 해당되었다(표 6). 주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초기에 개념이나 정의, 체벌과 학대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아동학대 발견과 학대가정의 진단 평가, 위험도 평가 척도 개발 등 학대 판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13건이었고, 그 외 22건이 아동학대 사례보고였다. 그동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심각성 확인, 개입 방안이나 치료방안 등이 모색되어 왔다.

<표 6> 연구주제별 분류: 개념, 이해, 사례

주제	빈도	백분율
개념, 정의, 이해	5	14.3%
진단, 평가	8	22.9%
사례보고, 사례연구 등	22	62.9%
계	35	100.1%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도 31건(8.8%)이 있었는데, 실태에 관한 연구가 13건, 현황에 관한 연구가 18건이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아동학대 치료기술이나 기법, 개입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23건(6.5%)이 있었고, 영향 및 후유증에 관한 연구가 17건(4.8%), 예방 및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가 13건(3.7%), 원인에 관한 연구가 6건(1.7%)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연구가 4건(1.1%)있었는데, 다른 범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연구들로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활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하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15년 동안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분석을 통해서 본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변화와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 2. 연도별 연구주제

연구주제가 연도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는 지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정착기, 성장기, 확장기를 각각 전후반부로 나눠서 6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통해서 확인해보았다. 연도분류는 ①1988년~1993년, ②1994년~1999년, ③2000년~2004년, ④2005년~2009년, ⑤2010년~2014년, ⑥2015년~2019년까지, 6단계로 구분하였다.

정착기에 속하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와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단계는 6년씩 속하고, 나머지 4단계는 5년씩 속하는데, 1997년 17호, 2001년의 25호와 26호가 누락 되었으므로 2단계인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 6년이 포함되지만 1호가 누락되었고, 3단계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에서는 2001년의 25호와 26호, 두 권이 누락되어있다. 더욱이 1989년 2호는 특별히 16편의 논문이 게재된 특별호 형식이었는데, 누락된 1997년 17호, 2001년의 25호와 26호를 제외하면 모두 57호에 20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므로 평균 한 호에 3.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므로 1989년 2호는 이례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그러므로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연구주제를 교차분석하여 분석하였지만, 분석결과를 이해할 때, 대략 평균 3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구간 마다 양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살펴보더라도, 연도별 연구주제에는 흥미로운 경향이 발견되었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 정의나 이해, 사례 연구 등은 아동학대예방협회 창립 초기에는 특정 영역의 아동학대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이지만, 점차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 보다는 최근에는 특정 영역에서의 학대나 가족, 시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대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관한 법, 정책, 대처방안이나 전달체계와 관련된 주제는 첫 번째 단계와

비교해볼 때 2번째 단계에서 비중이 높아졌는데, 두 번째 단계인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이 주제가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된 주제였다. 아마도 시기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신고 및 개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다음 단계 이후부터 모든 단계에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협회가 아동학대의 법적·정책적·실천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도 협회 창립 초기 세미나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학계 및 사회의 인식 제고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한 측면이 있으나,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고 난 이후에는 실태 및 현황 보고 보다는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이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사회의 필요에 따라, 아동학대 및 관련 주제에 대해서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게 다뤄왔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도별 연구주제

주제		①1988 ~1993	②1994 ~1999	③2000 ~2004	④2005 ~2009	⑤2010 ~2014	⑥2015 ~2019	전체 빈도
①개념, 이해, 사례	빈도	22	7	1	3	2	0	35
	(가) %	62.9%	20.0%	2.9%	8.6%	5.7%	0.0%	
②실태, 현황	빈도	12	8	5	2	2	2	31
	%	38.7%	25.8%	16.1%	6.5%	6.5%	6.5%	
③법, 정책, 대 처 방 안, 전달체계	빈도	17	15	17	15	17	13	94
	%	18.1%	16.0%	18.1%	16.0%	18.1%	13.8%	
④원인	빈도	3	1	0	1	0	1	6
	%	50.0%	16.7%	0.0%	16.7%	0.0%	16.7%	
⑤영향, 후유증	빈도	0	2	8	0	1	6	17
	%	0.0%	11.8%	47.1%	0.0%	5.9%	35.3%	
⑥치료, 개입 서비스	빈도	7	2	7	2	0	5	23
	%	30.4%	8.7%	30.4%	8.7%	0.0%	21.7%	
⑦예방, 예방교육	빈도	3	1	0	4	2	3	13
	%	23.1%	7.7%	0.0%	30.8%	15.4%	23.1%	
⑧가족, 시설, 학교 아동학대	빈도	17	13	6	6	3	10	55
	%	30.9%	23.6%	10.9%	10.9%	5.5%	18.2%	
⑨특정 유형 의 아동학대	빈도	26	8	12	12	5	11	74
	%	35.1%	10.8%	16.2%	16.2%	6.8%	14.9%	
⑩기타	빈도	0	0	3	1	0	0	4
	%	0.0%	0.0%	75.0%	25.0%	0.0%	0.0%	
	빈도	59	37	32	28	22	27	

(가)=주제별분류 중 %

### 3. 연구대상 분류

앞서 기술한 특정 유형의 아동학대 77건 중 하위분류로 대상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추출해 보았다. 특정 아동 대상에 관한 연구로는 청소년이 10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영유아가 5건, 발달장애 아동을 포함해서 장애아동이 4건, 근로아동이 1건 등의 순이었고, 모두 20건이었다(표 8).

<표 8> 연구대상

	빈도	백분율
청소년	10	50.0%
영유아	5	25.0%
장애아동	4	20.0%
근로아동	1	5.0%
계	20	100.0%

### 4. 발표자 및 토론자 분류

30년 동안 60회의 세미나 동안에 219명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206편의 논문이지만, 8편의 경우 2명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모두 219명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19명의 발표자들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학계, 실천현장, 공무원, 사법계,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일차 구분 이후, 다시 이들을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표 9). 먼저, 학술 세미나이므로 발표자 소속은 학계가 128명(58.4%)으로 물론 가장 많았으나 실천현장에서도 71명(32.4%)나 참여하여 학계와 실천현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사법계와 공무원은 각각 13명(5.9%), 5명(2.3%)로 다소 아쉬운 참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사회(아동)복지와 의학이 각각 48명(37.5%)와 47명(36.7%)로 비슷한 빈도를 보였으며, 법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 분야 학자들도 33명(25.8%)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실천현장 중에서는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기관 등이 33건(46.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은 상담 22명(31.0%), 아동학대 현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3명(18.3%)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소수이지만 학교의 교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3명(4.2%) 참여하였다.

공무원의 발표는 많지 않았는데,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논문의 저술 보다는 정책 담당자로서 토론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은 모두 5명이었고(2.3%), 중앙정부 공무원이 4명(80.0%), 시도 공무원이 1명(20.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법계에서는 13명(5.9%)이 발표하였는데, 변호사가 6명(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찰 4명(30.8%), 법무부 3명(23.1%) 순이었다.

그 외 기타로 부모연대에서 1명, 언론에서 1명의 발표가 있었다.

&lt;표 9&gt; 발표자 분류

빈도(%)

주제					빈도	백분율
학계	사회(아동)복지	사회과학	의학	-	128	58.4%
	48(37.5%)	33(25.8%)	47(36.7%)	-		
실천 현장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	상담	교육 (보육)	71	32.4%
	13(18.3%)	33(46.5%)	22(31.0%)	3(4.2%)		
공무 원	중앙	시도	시군구	-	5	2.3%
	4(80.0%)	1(20.0)	-	-		
사법 계	법무부	검사	경찰	변호사	13	5.9%
	3(23.1%)	-	4(30.8%)	6(46.2%)		
기타	부모연대	언론	국회도서관		2	.9%
	1(50.0%)	1(50.0%)				
					219	100.0%

토론자도 발표자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토론자는 세미나의 전체 주제 및 취지에 따라서 토론 없이 논문 발표 만 진행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두 11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토론에서는 발표자와는 달리 의학 분야가 7명(10.8%)로 현격히 빈도가 낮았으며, 사회과학 분야가 32명(49.2%)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사회(아동)복지가 26명, 40.0%였다. 토론자 역시 학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지만 발표자와는 달리, 토론에서는 의학 분야의 빈도가 낮아지고 사회(아동)복지 보다 사회과학 분야의 토론자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학계에 이어 실천현장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여기서도 하위분류에서는 발표자와 차이를 보였다. 발표자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5명(46.9%)로 반수 정도가 되었으며, 사회복지기관은 절반 정도인 9명(28.1%)이었고, 상담과 교육(보육포함)이 각각 6명(18.8%), 2명(6.3%)이었다.

발표자 분류와는 다르게 토론자 분류에서는 사법계 보다 공무원이 빈도가 높았는데 사법계에서는 3명(2.6%)의 토론자가 있었으나 공무원은 15명(12.8%)의 토론자가 있었다. 그런데 공무원 15명은 모두 중앙 정부 공무원이었다. 사법계에서는 법무부, 검사, 변호사가 각각 1명씩 토론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부모연대와 국회도서관에서 각각 1명의 토론자가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lt;표 10&gt; 토론자 분류

빈도(%)

주제					빈도	백분율
학계	사회(아동) 복지	사회과학	의학	-	65	55.6%
	26(40.0%)	32(49.2%)	7(10.8%)	-		
실천 현장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	상담	교육 (보육)	32	27.4%
	15(46.9%)	9(28.1%)	6(18.8%)	2(6.3%)		
공무원	중앙	시도	시군구	-	15	12.8%
	15(100.0%)	-	-	-		
사법계	법무부	검사	경찰	변호사	3	2.6%
	1(33.3%)	1(33.3%)	-	1(33.3%)		
기타	부모연대	언론	국회도서관	-	2	1.7%
	1(50.0%)	-	1(50.0%)	-		
					117	100.0%

## V. 결론 및 제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60회에 걸친 학술 세미나 자료집의 206편에 달하는 연구를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천 현장의 발전 및 학계에 끼친 협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던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학계와 실무자, 또 공무원과 사법계가 정기적으로 아동학대를 주제로 함께 하는 장을 만들어 온 협회의 활동이 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체계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인 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30년 간 거르지 않고 60회의 학술 세미나를 해오면서,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주제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30년 동안의 세미나 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연구와 실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아동학대 연구동향의 초기 연구들(송은일(1992); 이소희, 김민정(1996))에서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연구들이 주된 참고자료였으며, 협회 자체가 아동학대 관련 주요 기관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1990년대까지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검색했을 때, 대략 300여 편의 연구가 검색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협회 세미나서 발표된 연구의 수가 100여 편에 이른다.

206편의 논문에 대한 주제별 분류를 통해 협회의 아동학대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거의 모든 분류항목에 연구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아동학대 법, 정책, 대처방안,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는데 협회 세미나를 통해 꾸준히 아동학대 체계 구축과 발전을 모색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높은 빈도의 주제는 특정 유형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였는데, 협회는 그동안 성학대나 방임, 동반 자살이나, 실종(미아), 아동권리 등 시의적절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를 다루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또 시설에서의 학대 등을 비롯해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탐색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은 연구주제에 대한 연도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확인되었는데, 연구들을 협회의 정착기, 성장기, 확장기를 각각 전후반부로 나눠서 6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흥미로운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 정의나 이해, 사례 연구 등은 창립 초기에 비중 있게 다뤄졌고, 아동학대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신고 및 개입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에는 이에 관한 주제의 연구가 많았다. 이는 협회가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정책적·실천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도 협회 창립 초기에는 학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어느 정도 제도가 갖춰지고 난 이후에는 이보다는 개입 방안이나 개선방안으로 비중이 변화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협회가 아동학대 및 관련 주제에 대해서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균형 있고 시의적절하게 다뤄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의 특징적인 기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관심을 모으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30년 동안 60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219명의 발표자와 117명의 토론자가 함께 하였다. 발표와 토론에서 모두 학계가 5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실천현장에서도 30% 내외의 참여를 보여 학계와 실천현장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며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해왔다는 점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사법계도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 하겠다. 또한, 특정 분야의 학회와는 달리, 사회(아동)복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와 의학 분야, 또 실천현장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 및 교육(보육)기관 등이 다학제간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하겠다.

다만, 연구 방법에서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점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중심이 되어 아동보호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 학술적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항경(1935), “보호는 당연하다: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여론”, 『신가정』, 11월호, 138-139, 신동아사.
- 권은주(1977)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도미향(2017), “보육·교육기관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2001~2016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5권, 105-128.
- 김춘경, 이주옥, 송영주(2009), “국내 신문기사 및 연구논문을 통해 본 아동학대 동향 연구”, 『놀이치료연구』, 제13권제3호, 83-97.
- 서우경(2001), “국내·외 아동학대 연구동향의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제1호, 41-77.
- 송민경(2013),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0권제5호, 213-234.
- 송은일(1992), “한국의 아동학대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생활문화연구』, 제6권, 141-150.
- 오미희(2016),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연구동향-법·제도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69권, 295-314.
- 오창규, 이병숙, 박태규 등(1975), “Battered child syndrome의 1례”, 『중앙의학』, 제28권, 185-188.
- 윤혜미(2010), “아동성학대 연구 경향-2000~2008에 발표된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2권, 129-160.
- 이소희, 김민정(1996),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연구경향의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1권, 106-117.
- 조선일보 사설(1930), “아동학대방지법안,” 조선통신, 1331, 조선통신사.
- 조영숙(2015),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장애아동인권연구』, 제6권제2호, 1-14.
- 차미숙, 김광웅(2017),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부모교육연구』, 제9권제1호, 41-64.
- 최복천, 김유리(2014),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5권제4호, 151-174.
- 최승만(1935), “아동을 우대하자”, 『신가정』, 11월호, 132-135, 신동아사.
- 황옥경(2004),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와 과제”, 『아동권리연구』, 제8권제3호, 389-412.
- Kempe, R. S. & Kempe, C. H.(1978), *Child Abus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제 5 주제

#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과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강 동 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과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강 동 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목 차>

- |                       |
|-----------------------|
| I. 머리말                |
| II. 아동학대의 현황          |
| III.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
| IV. 아동학대에 관한 법제의 제·개정 |
| 1. 아동복지법              |
| 2. 아동학대범죄특별법          |
| V. 맺음말                |

### I. 머리말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피해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사회적인 문제로서 접근이 요구되고,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마련된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의 실태조사 및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제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년 동안 열악한 사정하에서도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피해아동의 지원, 아동학대방지 캠페인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사업을 전개해 오으로써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국아동보호학회(회장: 문영희)를 비롯한 아동 관련 학술단체에서는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이론연구와 외국의 법제와 정책의 비교연구 등 학술적 뒷받침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법제와 정책의 수립·시행 및 실무활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오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노력과 실천이 행하여지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과 법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아동학대의 현황

2001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7)</sup>

###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매년 아동학대 신고 수는 늘고 있으며, 신고접수된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인정되는 경우도 2010년도에 이르러 80%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이후는 90%이상을 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해에 전년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2-1> 참조).

<표 2-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단위: 건, %)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계		작년대비 증가율	비고
2001	2,606	(63.1)	-		1,527	(36.9)	4,133	(100)	-	
2002	2,946	(71.7)	-		1,165	(28.3)	4,111	(100)	-0.5	
2003	3,536	(71)	-		1,447	(29)	4,983	(100)	21.2	
2004	4,880	(69.7)	-		2,118	(30.3)	6,998	(100)	40.4	아동보호전문기 관 18개소 확대
2005	5,761	(72)	-		2,239	(28)	8,000	(100)	14.3	
2006	6,452	(72.5)	-		2,451	(27.5)	8,903	(100)	11.3	
2007	7,083	(74.7)	-		2,395	(25.3)	9,478	(100)	6.5	
2008	7,219	(75.4)	77	(-)	2,351	(24.6)	9,570	(100)	1	
2009	7,354	(79)	101	(1.1)	1,854	(19.9)	9,309	(100)	-2.7	
2010	7,406	(80.5)	89	(1)	1,704	(18.5)	9,199	(100)	-1.2	
2011	8,352	(82.1)	84	(0.8)	1,737	(17.1)	10,146	(100)	10.3	
2012	8,979	(82.1)	34	(0.3)	1,930	(17.6)	10,943	(100)	7.9	
2013	10,857	(83)	43	(0.3)	2,176	(16.6)	13,076	(100)	16.5	
2014	15,025	(84.5)	93	(0.5)	2,664	(15)	17,782	(100)	36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5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	8	
2016	25,878	(87.2)	189	(0.6)	3,604	(12.1)	29,671	(100)	54.5	
2017	30,923	(90.5)	292	(0.9)	2,951	(8.6)	34,166	(100)	15.1	국정과제 지정
2018	33,532	(92.1)	420	(1.2)	2,464	(6.8)	36,416	(100)	6.6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중복신고 77건이 포함되지 않음. 또한 해외발생사례 건수는 제외함.

### 2.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현황을 보면, 최근 들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30%에 미치지 않고 있다. 신고의무자 중에는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의료기관,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 아동 본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등

27) 이하의 <표>의 자료는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 227-24면 및 동,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2019, 48-60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동 본인의 신고는 2015년 이후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초·중·고 교 직원	134 (5.1)	149 (5)	190 (5.4)	280 (5.7)	431 (7.5)	611 (9.5)	771 (10.9)	887 (12.3)	547 (7.4)	535 (7.2)	594 (7.1)	732 (8.2)	716 (6.6)	1,988 (13.2)	2,172 (13)	3,978 (15.4)	5,168 (16.7)	6,406 (19.1)
의료인	51 (2)	59 (2)	83 (2.3)	102 (2.1)	126 (2.2)	114 (1.8)	157 (2.2)	105 (1.5)	98 (1.3)	83 (1.1)	88 (1.1)	85 (0.9)	93 (0.9)	123 (0.8)	137 (0.8)	216 (0.8)	-	-
의료인·의 료기관	-	-	-	-	-	-	-	-	-	-	-	-	-	-	-	-	-	325 (1)
시설 종사 자	285 (10.9)	238 (8.1)	181 (5.1)	226 (4.7)	222 (3.8)	217 (3.3)	374 (5.3)	426 (5.9)	-	-	-	-	-	-	-	-	-	-
아동 복지 시설 종 사자	-	-	-	-	-	-	-	-	358 (4.9)	425 (5.7)	338 (4.1)	424 (4.7)	493 (3.7)	275 (1.8)	257 (1.8)	498 (1.9)	407 (1.3)	411 (1.2)
장애인 복 지 시 설 종사자	-	-	-	-	-	-	-	-	15 (0.2)	26 (0.4)	24 (0.3)	28 (0.3)	11 (0.1)	24 (0.2)	46 (0.3)	27 (0.1)	33 (0.1)	56 (0.2)
보육교직 원	-	-	-	-	-	-	-	-	76 (1)	152 (2.1)	178 (2.1)	166 (1.8)	223 (2.1)	273 (1.8)	309 (1.9)	286 (1.1)	313 (1)	213 (0.6)
유치원 교 직원	-	-	-	-	-	-	-	-	43 (0.6)	66 (0.9)	40 (0.5)	84 (0.9)	20 (0.2)	43 (0.3)	68 (0.4)	114 (0.4)	115 (0.4)	115 (0.3)
학원 및 교 습 소 종사자	-	-	1 (0)	15 (0.3)	23 (0.4)	32 (0.5)	26 (0.4)	24 (0.3)	18 (0.2)	16 (0.2)	6 (0.1)	13 (0.1)	7 (0.1)	26 (0.2)	31 (0.2)	24 (0.1)	9 (0)	18 (0.1)
소방구급 대원	-	-	-	-	-	-	3 (0)	6 (0.1)	11 (0.2)	6 (0.1)	10 (0.1)	16 (0.2)	11 (0.1)	28 (0.2)	22 (0.1)	39 (0.2)	33 (0.1)	24 (0.1)
응급구조 사	-	-	-	-	-	-	-	-	-	-	-	-	-	2 (0)	-	2 (0.0)	2 (0)	-
의료기사	-	-	-	-	-	-	-	-	-	-	-	4 (0)	6 (0.1)	-	-	2 (0)	-	-
성매매피 해상담소 및 지원 시설 종사 자	-	-	-	-	-	-	-	-	41 (0.6)	47 (0.6)	45 (0.5)	39 (0.4)	8 (0.1)	2 (0)	12 (0.1)	12 (0.1)	9 (0)	8 (0.1)
성폭력피 해상담소 및 보호 시설 종사 자	-	-	-	-	-	-	-	-	-	-	-	51 (0.6)	75 (0.7)	20 (0.1)	72 (0.4)	122 (0.5)	-	-
성폭력피 해상담소 및 성폭 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성 폭력피해 자 통합 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274 (0.9)	168 (0.5)
한부모가 족복지시 설종사자	-	-	-	-	-	-	-	-	15 (0.2)	7 (0.1)	13 (0.2)	13 (0.1)	13 (0.1)	10 (0.1)	5 (0)	11 (0)	16 (0.1)	14 (0.0)
가정 폭력 피해자보 호 시 설 및 상담 소종사자	-	-	-	-	-	-	-	-	142 (1.9)	141 (1.9)	199 (2.4)	233 (2.6)	191 (1.8)	174 (1.2)	285 (1.7)	301 (1.2)	169 (0.5)	283 (0.8)
사회복지 전담공무 원	216 (8.3)	392 (13.3)	575 (16.3)	738 (15.1)	805 (14)	1,038 (16.1)	953 (13.4)	941 (13)	975 (13.3)	786 (10.6)	1,169 (14)	904 (10.1)	1,055 (9.7)	700 (4.7)	602 (3.6)	815 (3.1)	819 (2.6)	-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695 (2.7)	-	-
아동복지 전담공무 원	-	-	-	-	-	-	-	-	-	-	-	102 (1.1)	234 (2.2)	104 (0.7)	58 (0.3)	98 (0.4)	27 (0.1)	72 (0.2)
사회복지 시설 종사 자	-	-	-	-	-	-	-	-	-	-	-	157 (1.7)	336 (3.1)	151 (1)	210 (1.3)	312 (1.2)	271 (0.9)	211 (0.6)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15 (0.2)	17 (0.2)	27 (0.2)	30 (0.2)	11 (0)	20 (0.1)	25 (0.1)

비 신 고 의 무 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21 (0.2)	17 (0.2)	18 (0.1)	19 (0.1)	44 (0.2)	48 (0.2)	31 (0.1)	
	다문화가 족지원센 터종사자	-	-	-	-	-	-	-	-	-	-	27 (0.3)	27 (0.2)	20 (0.1)	41 (0.2)	35 (0.1)	33 (0.1)	52 (0.2)	
	정신건강 복지센터 종사자	-	-	-	-	-	-	-	-	-	-	34 (0.4)	46 (0.4)	78 (0.5)	49 (0.3)	51 (0.2)	38 (0.1)	48 (0.1)	
	청소년시 설 및 단 체종사자	-	-	-	-	-	-	-	-	-	-	123 (1.4)	160 (1.5)	185 (1.2)	140 (0.8)	223 (0.9)	357 (1.2)	276 (0.8)	
	청소년보 호 센터 및 재활 센터종사 자	-	-	-	-	-	-	-	-	-	-	45 (0.5)	37 (0.3)	14 (0.1)	28 (0.2)	75 (0.3)	43 (0.1)	121 (0.4)	
	아이돌보 미	-	-	-	-	-	-	-	-	-	-	-	-	-	9 (0.1)	1 (0)	8 (0)	11 (0.0)	
	취약계층 아동 통 합서비스 지원인력	-	-	-	-	-	-	-	-	-	-	-	-	-	73 (0.5)	298 (1.8)	296 (1.1)	317 (1)	255 (0.8)
	성폭력피 해자통합 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	-
	육아종합 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4 (0)	4 (0.0)
	입양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1 (0)	4 (0.0)
	소계	686 (26.3)	838 (28.4)	1,030 (29.1)	1,361 (27.9)	1,607 (27.9)	2,012 (31.2)	2,284 (32.2)	2,389 (33.1)	2,339 (31.8)	2,290 (30.9)	2,704 (32.5)	3,316 (36.9)	3,706 (34.1)	4,358 (29)	4,900 (29.4)	8,288 (32)	8,830 (28.6)	9,151 (27.3)
	아동본인	40 (1.5)	56 (1.9)	52 (1.5)	65 (1.3)	80 (1.4)	71 (1.1)	50 (0.7)	73 (1)	88 (1.2)	115 (1.6)	135 (1.8)	158 (1.8)	171 (1.6)	628 (4.2)	1,500 (9)	2,322 (9)	3,883 (12.6)	4,512 (13.5)
	부모	772 (29.6)	591 (20.1)	673 (19)	990 (20.3)	1,073 (18.6)	1,165 (18.1)	1,294 (18.3)	1,311 (18.2)	1,356 (18.4)	1,374 (18.6)	1,411 (16.9)	1,433 (16)	1,426 (13.1)	1,991 (13.3)	3,048 (18.3)	4,619 (17.8)	5,328 (17.2)	6,089 (18.2)
	형제자매	-	-	-	-	-	-	-	-	34 (0.5)	44 (0.6)	47 (0.6)	53 (0.7)	45 (0.4)	110 (0.7)	231 (1.4)	341 (1.3)	359 (1.2)	403 (1.2)
	친인척	241 (9.3)	242 (8.2)	367 (10.4)	373 (7.6)	481 (8.3)	500 (7.7)	471 (6.7)	502 (6.9)	468 (6.4)	488 (6.4)	461 (5.5)	452 (5)	397 (3.7)	536 (3.6)	452 (2.7)	657 (2.5)	738 (2.4)	607 (1.8)
	이웃·친구	685 (26.3)	757 (25.7)	843 (23.8)	921 (18.9)	933 (16.2)	886 (13.7)	856 (12.1)	845 (11.7)	805 (10.9)	861 (11.6)	991 (11.9)	970 (10.8)	1,065 (9.8)	1,202 (8)	1,040 (6.2)	1,858 (7.2)	1,963 (6.3)	1,859 (5.5)
	경찰	104 (4)	164 (5.6)	221 (6.3)	338 (6.9)	357 (6.2)	340 (5.3)	275 (3.9)	322 (4.5)	416 (5.7)	302 (4.1)	314 (3.8)	425 (4.7)	724 (6.7)	2,204 (14.7)	846 (5.1)	1,426 (5.5)	645 (2.1)	406 (1.2)
	종교인	-	36 (1.2)	49 (1.4)	47 (1)	74 (1.3)	99 (1.5)	77 (1.1)	54 (0.7)	54 (0.7)	54 (0.7)	53 (0.6)	45 (0.5)	28 (0.3)	20 (0.1)	27 (0.2)	40 (0.2)	24 (0.1)	18 (0.1)
	사회복지 관련종사 자	-	90 (3)	114 (3.2)	506 (10.4)	823 (14.3)	980 (15.2)	1,165 (16.5)	1,176 (16.3)	1,356 (18.4)	1,562 (21.1)	1,856 (22.3)	1,689 (18.8)	2,632 (24.2)	3,486 (23.2)	3,590 (21.6)	4,088 (15.8)	323 (1)	933 (2.8)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과 종 사자	-	-	-	-	-	-	-	-	-	-	-	-	-	-	-	619 (2.4)	6,881 (22.3)	7,755 (23.1)
의료사회 복지사	-	-	-	-	-	-	-	-	-	-	-	-	-	-	-	-	79 (0.3)	66 (0.2)	
낯선사람	-	-	4 (0.1)	114 (2.3)	80 (1.4)	148 (2.3)	88 (1.2)	70 (1)	71 (1)	69 (0.9)	55 (0.7)	92 (1)	103 (0.9)	193 (1.3)	305 (1.8)	649 (2.5)	685 (2.2)	443 (1.3)	
익명	-	11 (0.4)	13 (0.4)	13 (0.3)	41 (0.7)	26 (0.4)	11 (0.1)	61 (0.8)	8 (0.1)	6 (0.1)	40 (0.5)	12 (0.1)	14 (0.1)	98 (0.7)	134 (0.8)	244 (0.9)	271 (0.9)	228 (0.7)	
기타	78 (3)	161 (5.5)	170 (4.8)	152 (3.1)	212 (3.7)	225 (3.5)	512 (7.2)	416 (5.8)	359 (4.9)	241 (3.2)	258 (3.1)	324 (3.6)	546 (5)	199 (1.3)	578 (3.5)	727 (2.8)	914 (3)	1,027 (3.1)	
법원	-	-	-	-	-	-	-	-	-	-	-	-	-	-	-	-	-	34 (0.1)	
소계	1,920 (73.7)	2,108 (71.6)	2,506 (70.9)	3,519 (72.1)	4,154 (72.1)	4,440 (68.8)	4,799 (67.8)	4,830 (66.9)	5,015 (68.2)	5,116 (69.1)	5,621 (67.5)	5,663 (63.1)	7,151 (65.9)	10,667 (71)	11,751 (70.6)	17,590 (68)	22,088 (71.4)	24,381 (72.7)	
계	2,606 (100)	2,946 (100)	3,536 (100)	4,880 (100)	5,761 (100)	6,452 (100)	7,083 (100)	7,219 (100)	7,354 (100)	7,406 (100)	8,325 (100)	8,979 (100)	10,857 (100)	15,025 (100)	16,651 (100)	25,878 (100)	30,923 (100)	33,532 (100)	

-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25조).

-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0조).
- \*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추가됨.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가 통합되었음(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0조).
- \*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이후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됨.

### 3. 아동학대사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아동학대사건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수는 2014년 10,000건을 초과한 이후 2016년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20,000건을 훨씬 넘고 있다(표 2-3> 참조).

<표 2-3> 연도별 아동학대사건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아동학대사건		아동보호전문기관	
	건수	증감율	기관수	증가 기관수
2001	2,105	-	17	
2002	2,478	17.7	17	-
2003	2,921	17.9	19	2
2004	3,891	33.2	37	18
2005	4,633	19.1	38	1
2006	5,202	12.3	42	4
2007	5,581	7.3	43	1
2008	5,578	-0.1	43	-
2009	5,685	1.9	44	1
2010	5,657	-0.5	44	-
2011	6,058	7.1	44	-
2012	6,403	5.7	46	2
2013	6,796	6.1	50	4
2014	10,027	47.5	51	1
2015	11,715	16.8	56	5
2016	18,700	59.6	59	4
2017	22,367	19.6	60	1
2018	24,604	10	62	2

### 4.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은 2001년 대비 2018년에는 1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도 2001년 0.18%에서 2018년에는 2.98%로 16.6배나 증가하였다(<표 2-4 참조>).

<표 2-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건, %)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2001	11,872,394	2,105	0.18
2002	11,665,981	2,478	0.21
2003	11,478,537	2,921	0.25
2004	11,297,516	3,891	0.34
2005	11,105,069	4,633	0.42
2006	10,903,869	5,202	0.48
2007	10,704,846	5,581	0.52
2008	10,490,534	5,578	0.53
2009	10,247,497	5,685	0.55
2010	9,976,186	5,657	0.57
2011	9,688,376	6,058	0.63
2012	9,578,186	6,403	0.67
2013	9,331,894	6,796	0.73
2014	9,099,339	10,027	1.10
2015	8,885,533	11,715	1.32
2016	8,694,953	18,700	2.15
2017	8,467,386	22,367	2.64
2018	8,255,490	24,604	2.98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2016년 추계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2017년 발견율의 경우 통계청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를 활용하였음.

## 5.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약 48%에 이르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2001년부터 점점 줄어들다가 2010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하여 14%를 상회하고 있으며, 반면에 방임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10.6%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표 2-5>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2001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105	(100)
2002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478	(100)
2003	347	(11.9)	207	(7.1)	134	(4.6)	965	(33)	113	(3.9)	1,155	(39.5)	2,921	(100)
2004	364	(9.4)	350	(9)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3,891	(100)
2005	423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4,633	(100)
2006	439	(8.4)	604	(11.6)	249	(4.8)	2,035	(39.1)	76	(1.5)	1,799	(34.6)	5,202	(100)
2007	473	(8.5)	589	(10.6)	266	(4.8)	2,107	(37.7)	59	(1)	2,087	(37.4)	5,581	(100)
2008	422	(7.6)	683	(12.2)	284	(5.1)	2,237	(40.1)	57	(1)	1,895	(34)	5,578	(100)
2009	338	(5.9)	778	(13.7)	274	(4.8)	2,025	(35.6)	32	(0.6)	2,238	(39.4)	5,685	(100)
2010	348	(6.1)	773	(13.7)	258	(4.6)	1,870	(33.1)	14	(0.2)	2,394	(42.3)	5,657	(100)
2011	466	(7.7)	909	(15)	226	(3.7)	1,783	(29.4)	53	(0.9)	2,621	(43.3)	6,058	(100)
2012	461	(7.2)	936	(14.6)	278	(4.3)	1,713	(26.8)	-		3,015	(47.1)	6,403	(100)

2013	753	(11.1)	1,101	(16.2)	242	(3.6)	1,778	(26.2)	-	2,922	(43)	6,796	(100)
2014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	4,814	(48)	10,027	(100)
2015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	5,347	(45.6)	11,715	(100)
2016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	8,980	(48)	18,700	(100)
2017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	10,875	(48.6)	22,367	(100)
2018	3,436	(14)	5,862	(23.8)	910	(3.7)	2,604	(10.6)	-	11,792	(47.9)	24,604	(100)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 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다소 줄고 있지만 80%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2018년 친부모에 의한 경우가 73.5%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15.9%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에서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2018년의 경우 8.4%), 그 다음으로 보육교직원((2018년의 경우 3.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2-6> 참조).

<표 2-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부 모	친부	1,174 (55.8)	1,432 (57.8)	1,607 (55)	2,111 (54.3)	5,554 (55.1)	2,739 (52.7)	2,788 (50)	2,855 (51.2)	2,867 (50.4)	2,797 (49.4)	2,855 (47.1)	3,013 (47.1)	2,790 (41.1)	4,531 (45.2)	5,368 (45.8)	8,295 (44.4)	9,562 (42.8)	10,747 (43.7)
	친모	502 (23.8)	551 (22.3)	651 (22.3)	856 (22)	1,098 (23.8)	1,321 (25.4)	1,520 (27.2)	1,648 (29.5)	1,605 (28.3)	1,708 (30.2)	1,963 (32.4)	2,090 (32.6)	2,383 (35.1)	3,211 (32)	3,475 (29.7)	5,923 (31.7)	6,824 (30.5)	7,337 (29.8)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	74 (1.2)	108 (1.6)	189 (1.9)	236 (2)	394 (2.1)	401 (1.8)	480 (2)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151 (2.4)	144 (2.1)	242 (2.4)	237 (2)	362 (1.9)	341 (1.5)	297 (1.2)
	양부	8 (0.4)	5 (0.2)	6 (0.2)	9 (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23 (0.4)	14 (0.2)	17 (0.2)	17 (0.1)	37 (0.2)	28 (0.1)	36 (0.1)
	양모	7 (0.3)	0 (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19 (0.3)	15 (0.2)	17 (0.2)	15 (0.1)	37 (0.2)	21 (0.1)	22 (0.1)
	소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5)	4,734 (83.3)	4,709 (83.2)	5,039 (83.1)	5,370 (83.9)	5,454 (80.3)	6,207 (81.8)	9,348 (79.8)	15,048 (80.5)	17,177 (76.8)	18,919 (76.9)
친 인 척	친조부		24 (1)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	74 (1.2)	58 (0.9)	69 (0.7)	96 (0.8)	111 (0.6)	128 (0.6)	147 (0.6)
	친조모	48 (2.3)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104 (1.6)	79 (1.2)	135 (1.3)	112 (1)	177 (0.9)	237 (1.1)	229 (0.9)
	외조부		0 (0)	7 (0.2)	7 (0.2)	7 (0.1)	2 (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14 (0.2)	8 (0.1)	17 (0.2)	28 (0.2)	39 (0.2)	64 (0.3)	74 (0.3)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48 (0.7)	30 (0.4)	54 (0.5)	52 (0.4)	95 (0.5)	127 (0.6)	118 (0.5)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175 (2.7)	150 (2.2)	229 (2.3)	201 (1.7)	266 (1.4)	328 (1.5)	352 (1.4)
	형제·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20 (0.3)	26 (0.4)	55 (0.5)	73 (0.6)	107 (0.6)	186 (0.8)	194 (0.8)
	소계	105 (5)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3)	354 (6.3)	361 (6.5)	387 (6.8)	337 (6)	349 (5.8)	435 (6.8)	351 (5.2)	559 (5.6)	562 (4.8)	795 (4.3)	1,067 (4.3)	1,114 (4.5)
대 리 양 육 자	부·모의 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75 (1.2)	86 (1.3)	146 (1.5)	158 (1.3)	311 (1.7)	247 (1.1)	270 (1.1)
	유치원 교직원	-	-	-	-	-	-	-	-	-	-	-	31 (0.5)	35 (0.5)	99 (1)	203 (1.7)	240 (1.3)	284 (1.2)	189 (0.8)
	초·중·고교 교직원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16 (0.2)	31 (0.5)	145 (1.4)	234 (2)	576 (3.1)	1,345 (6)	2,060 (8.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37 (0.6)	11 (0.2)	80 (0.8)	64 (0.5)	167 (0.9)	217 (1)	176 (0.7)

	보육 교직원	-	-	-	-	-	-	-	-	-	-	-	110 (1.7)	217 (3.2)	295 (2.9)	427 (3.6)	587 (3.1)	840 (3.7)	818 (3.3)
	시설 종사자	-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	265 (4.4)	-	-	-	-	-	-	-
	아동복 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99 (1.5)	362 (5.3)	177 (1.8)	296 (2.5)	253 (1.4)	285 (1.2)	313 (1.3)
	기타 시설 종사자	-	-	-	-	-	-	-	-	-	-	-	20 (0.3)	27 (0.4)	29 (0.3)	22 (0.2)	28 (0.1)	60 (0.3)	27 (0.1)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7 (0.1)	2 (0.1)	33 (0.1)	33 (0.1)
	위탁부	-	-	-	-	-	-	-	-	2 (0.1)	3 (0.1)	5 (0.1)	0 (0)	2 (0)	5 (0.1)	8 (0.1)	-	4 (0.1)	7 (0.1)
	위탁모	-	-	-	-	-	-	-	-	7 (0.1)	5 (0.1)	8 (0.1)	3 (0)	11 (0.2)	7 (0.1)	5 (0.1)	5 (0.1)	17 (0.1)	2 (0.1)
	베이비 시터	-	-	-	-	-	-	-	-	-	-	-	6 (0.1)	4 (0.1)	7 (0.1)	7 (0.1)	4 (0.1)	15 (0.1)	11 (0.1)
	소계	64 (3)	67 (2.7)	113 (3.9)	234 (6)	225 (4.9)	275 (5.3)	386 (6.9)	225 (4)	331 (5.8)	419 (7.4)	482 (8)	397 (6.2)	786 (11.6)	990 (9.9)	1,431 (12.2)	2,173 (11.6)	3,343 (14.9)	3,906 (15.9)
	타 인	이웃 (1.8)	34 (1.4)	64 (2.2)	77 (2)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	60 (0.9)	51 (0.8)	73 (0.7)	85 (0.7)	91 (0.4)	86 (0.4)	146 (0.6)
	낮선 사람	-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	53 (0.9)	32 (0.5)	48 (0.7)	34 (0.5)	51 (0.5)	102 (1)	110 (0.6)	208 (0.8)	214 (0.8)
	소계	39 (1.9)	54 (2.2)	104 (3.6)	134 (3.4)	147 (3.2)	148 (2.8)	143 (2.6)	169 (3)	134 (2.4)	115 (2)	92 (1.5)	108 (1.7)	85 (1.3)	124 (1.2)	187 (1.6)	201 (1.1)	294 (1.3)	360 (1.5)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70 (1.1)	85 (1.3)	129 (1.2)	166 (1.5)	454 (2.3)	440 (2)	305 (1.1)
파악불가		-	80 (3.2)	32 (1.1)	65 (1.7)	47 (1)	51 (1)	84 (1.5)	37 (0.6)	5 (0.1)	7 (0.2)	1 (0)	20 (0.3)	32 (0.5)	18 (0.2)	21 (0.2)	29 (0.1)	46 (0.2)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3 (0)	3 (0)	-	-	-	-	-
계		2,105 (100)	2,478 (100)	2,921 (100)	3,891 (100)	4,633 (100)	5,202 (100)	5,581 (100)	5,578 (100)	5,685 (100)	5,657 (100)	6,058 (100)	6,403 (100)	6,796 (100)	10,027 (100)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24,604 (100)

## 7.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5%를 상회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35.3%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2-7> 참조).

<표 2-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부모 가족		536 (25.5)	619 (25)	696 (23.8)	950 (24.4)	1,173 (25.3)	1,380 (26.5)	1,432 (25.7)	1,515 (27.2)	1,599 (28.1)	1,654 (29.2)	1,988 (32.8)	2,415 (37.7)	2,581 (38)	4,458 (44.5)	5,779 (49.3)	9,931 (53.1)	12,489 (55.8)	13,546 (55.1)
친부 모 가족 외 형태	부자 가정	662 (31.4)	885 (35.7)	1,054 (36.1)	1,285 (33)	1,559 (33.7)	1,656 (31.8)	1,710 (30.6)	1,687 (30.2)	1,615 (28.4)	1,684 (29.8)	1,559 (25.7)	1,480 (23.1)	1,360 (20)	1,887 (18.8)	1,855 (15.8)	2,623 (14)	2,732 (12.2)	2,997 (12.2)
	모자 가정	217 (10.3)	299 (12.1)	380 (13)	502 (12.9)	659 (14.2)	799 (15.4)	907 (16.3)	999 (17.9)	919 (16.2)	881 (15.6)	927 (15.3)	935 (14.6)	981 (14.4)	1,414 (14.1)	1,483 (12.7)	2,203 (11.8)	2,632 (11.8)	2,865 (11.6)
	미혼 부·모 가정	10 (0.5)	30 (1.2)	35 (1.2)	70 (1.8)	85 (1.8)	109 (2.1)	78 (1.4)	97 (1.7)	132 (2.3)	150 (2.6)	180 (3)	131 (2)	154 (2.3)	208 (2.1)	240 (2)	347 (1.9)	361 (1.6)	404 (1.6)
	재혼 가정	238 (11.3)	228 (9.2)	246 (8.4)	322 (8.3)	317 (6.8)	389 (7.5)	390 (7)	395 (7.1)	429 (7.6)	380 (6.7)	441 (7.3)	475 (7.4)	473 (7)	750 (7.5)	869 (7.4)	1,366 (7.3)	1,318 (5.9)	1,435 (5.8)
	친인 척보 호	187 (8.9)	142 (5.7)	217 (7.4)	235 (6)	283 (6.1)	284 (5.5)	353 (6.3)	358 (6.4)	347 (6.1)	303 (5.3)	266 (4.4)	303 (4.7)	238 (3.5)	297 (3)	320 (2.7)	444 (2.4)	487 (2.2)	483 (2)

	동거(사실혼 포함)	60 (2.9)	94 (3.8)	122 (4.2)	200 (5.2)	227 (4.9)	242 (4.6)	215 (3.8)	198 (3.6)	263 (4.6)	252 (4.5)	294 (4.9)	220 (3.4)	201 (3)	353 (3.5)	403 (3.4)	688 (3.7)	532 (2.4)	490 (2)
	소년소녀가정	15 (0.7)	14 (0.6)	21 (0.7)	9 (0.2)	26 (0.6)	49 (0.9)	28 (0.5)	35 (0.6)	31 (0.5)	28 (0.5)	21 (0.3)	22 (0.3)	20 (0.3)	10 (0.1)	7 (0.1)	10 (0.1)	16 (0.2)	8 (0)
	소계	1,389 (66)	1,692 (68.3)	2,078 (71)	2,623 (67.4)	3,156 (68.1)	3,528 (67.8)	3,681 (65.9)	3,769 (67.5)	3,736 (65.7)	3,678 (65)	3,688 (60.9)	3,566 (55.7)	3,427 (50.4)	4,919 (49.1)	5,177 (44.2)	7,681 (41.1)	8,078 (36.1)	8,682 (35.3)
대리양육 형태	가정 위탁	3 (0.1)	5 (0.2)	8 (0.3)	20 (0.5)	29 (0.6)	14 (0.3)	26 (0.5)	26 (0.5)	20 (0.4)	15 (0.3)	28 (0.4)	13 (0.2)	21 (0.3)	24 (0.2)	31 (0.3)	28 (0.1)	38 (0.2)	27 (0.1)
	입양 가정	13 (0.6)	5 (0.2)	13 (0.4)	13 (0.3)	17 (0.4)	26 (0.5)	19 (0.3)	25 (0.4)	26 (0.5)	25 (0.4)	30 (0.5)	37 (0.6)	27 (0.4)	39 (0.4)	34 (0.3)	79 (0.4)	56 (0.3)	44 (0.2)
	시설 보호	-	10 (0.4)	57 (2)	90 (2.3)	88 (1.9)	102 (2)	254 (4.6)	104 (1.9)	204 (3.6)	196 (3.5)	155 (2.6)	127 (2)	356 (5.2)	208 (2.1)	155 (1.3)	227 (1.2)	218 (1)	187 (0.8)
	소계	16 (0.7)	20 (0.8)	78 (2.7)	123 (3.1)	134 (2.9)	142 (2.8)	299 (5.4)	155 (2.8)	250 (4.5)	236 (4.2)	213 (3.5)	177 (2.8)	404 (5.9)	271 (2.7)	220 (1.9)	334 (1.8)	311 (1.4)	258 (1)
	기타	25 (1.2)	40 (1.6)	29 (1)	76 (2)	92 (2)	60 (1.1)	77 (1.4)	102 (1.8)	75 (1.3)	68 (1.2)	67 (101)	70 (1.1)	46 (0.7)	43 (0.4)	58 (0.5)	86 (0.5)	137 (0.6)	2,118 (8.6)
파악안됨		139 (6.6)	107 (4.3)	43 (1.5)	119 (3.1)	78 (1.7)	92 (1.8)	37 (1.6)	25 (0.7)	21 (0.4)	102 (4.4)	175 (1.7)	338 (2.7)	336 (5)	34 (3.4)	481 (4.1)	668 (3.6)	1,352 (6)	-
계		2,105 (100)	2,478 (100)	2,921 (100)	3,891 (100)	4,633 (100)	5,202 (100)	5,581 (100)	5,578 (100)	5,685 (100)	5,657 (100)	6,058 (100)	6,403 (100)	6,796 (100)	10,027 (100)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24,604 (100)

## 8. 소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대폭 늘어나 2001년 2,606건에서, 2014년 15,857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2018년에는 33,5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14년 10,027건으로,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피해아동 발견율도 2001년 0.18%에서, 2014년에는 1.10%로, 2018년에는 2.98%로 매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도 중복학대가 거의 50%에 이르고,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도 친부모의 경우가 비율에서는 다소 줄기는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면 2014년 4,531건에서 2018년 10,747건으로 2배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2001년 536건(25.5%)에서 2014년 4,458건(44.5%), 2018년에는 13,546건(55.1%)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건수 증가하고, 아동학대 사례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국가적·사회적인 노력에 수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신고의무자의 확대 및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의 강화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들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 특히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통해 보호자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유형은 여전히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80%에 이르는 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55%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 및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법제의 보완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 Ⅲ.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 1. 종래의 아동정책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수립되기 전에는 요보호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중점으로 하여 행하여졌으며, 정부처별로, 또는 지원대상별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선별주의적 정책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없음으로써 전 연령의 아동을 포괄하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정부 각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아동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에서 상호 연계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동의 연령과 분야에 따라 불균형현상이 심화되었다(<표 3-1> 참조). 이에 정부는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청소년과 아동정책을 통합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년)이 설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관됨으로써 범부처 간 아동·청소년의 통합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업무부터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각각 분리·운영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sup>28)29)</sup>

<표 3-1> 아동정책 추진의 변천과정

년 도	아동관련 법제정 및 주요내용	아동정책관련 중장기 계획
1946년~1960년	1946년 군정법령 112호 아동노동법규 제정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부랑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 -해외원조에 의존한 아동복지서비스	1957년 어린이 헌장 제정
1961년~1980년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 -해외원조 감소와 국가지원의 증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차원의 공적 지원	1967년 탁아시설 설치 5개년 계획
1981년~1999년	1981년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 개정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복지관련 법규제정 - 선별적 성격의 복지가 일반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보장으로 확대	1994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2000년~현재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2000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5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권리 강조, UN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정책 조정 - 학대아동보호 및 안전에 대한 지원확대	2002년 어린이보호육성종합대책 2003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2004년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2008년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 서비스의 기능과 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적으로 분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포괄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별도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고 한다(예, 제1차 부산 아동·청소년 육성 마스터플랜(2010-2014)),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등).

29) 이상의 내용은 류정희,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33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3., 7-9면.



(i) 1960년 이전까지는 구호주의 단계로서 외국 선교사나 외국의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부분 의지하였다. (ii) 1960년대와 1970년대는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된 시기이다. (iii) 1980년대는 보편주의의 도입단계로서 1980년도 초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되면서 국가의 보호대상이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아동으로 확대되었다. (iv) 2000년대는 보편주의의 확대시기로, 2000년 1월 전면개정을 계기로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예방체계의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서비스를 명시하였고, 근래에는 주요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하여 아동정책의 수립·시행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sup>30)</sup>

## 2.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정부는 201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 전면개정(법률 제11002호, 시행 2012.8.5. 시행)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제7조<sup>31)</sup>),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제8조). 이때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제11조)<sup>32)</sup>. 따라서 정부가 동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었던 아동관련 사업 및 정책들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sup>33)</sup>

이에 정부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sup>34)</sup>,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가입)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30) 최성은, “한국의 아동보호정책의 형성과 변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2018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2018.10.30.) 자료집, 450면 참조.

31) 동조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2)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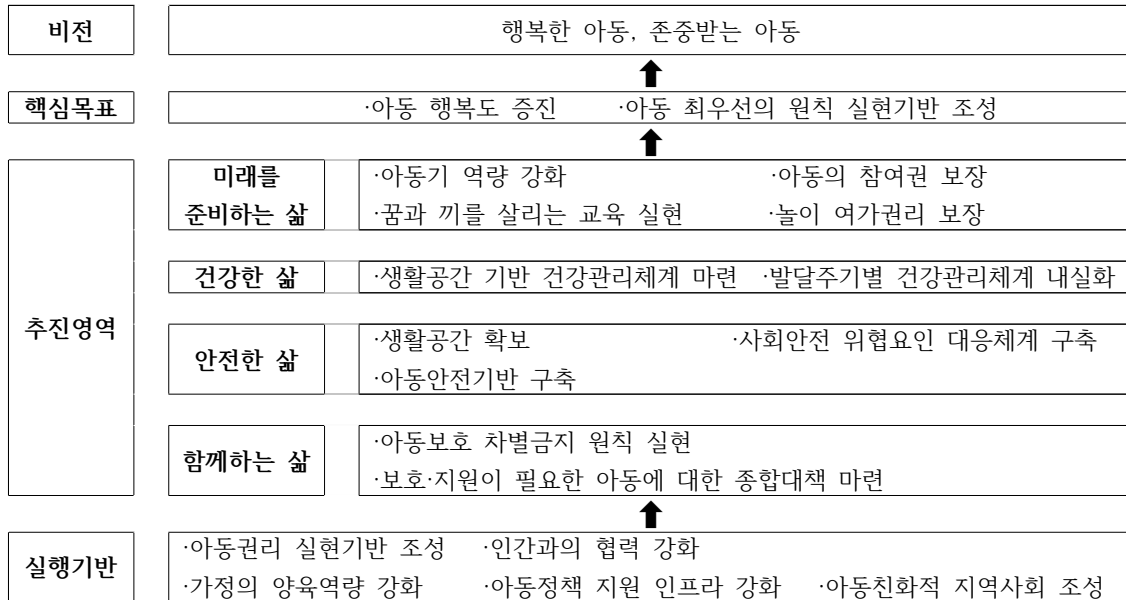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3) 류정희, 앞의 논문, 9-10면. 하지만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범부처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총괄하고 이들이 분야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대응력을 포괄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기능은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인구특성, 정책욕구 등에 따라 다른 아동정책사업 간 불균형문제나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전달체계가 혼재됨으로써 나타나는 통합·연계·조정 기능 제약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다(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의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박세경,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추진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58권, 보건사회연구원 2018.4., 74-79면 참조).

34) 당시 아동학대는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6.1%,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11.9%로 나타났으며, 1년에 1회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 31.1%, 부모가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경험은 23.3%로 나타났다(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9면 참조).

(2015-2019)'(이하 '제1차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서, 그 비전과 목표 및 정책과제는 <그림 3-1>과 같다.<sup>35)</sup>

<그림 3-1>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정책과제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3-2-1-1)는 사회안전분야(3-2) 중 범죄안전분야(3-2-1)에서 취급하고, 그 추진과제로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이행관리 및 인프라 확충 추진(3-2-1-1-①), 안전한 유아 교육·보육 환경조성(3-2-1-1-①-1), 체벌을 훈육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홍보(3-2-1-1-②)<sup>36)</sup>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관련 주요대책으로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 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아동복지법)'을 설정하였으며(16면), 재학대 판정률을 14.4%에서 1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0면).

또한 주요 계획에서는 검토과제로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을 설정하였다(21면). 그리고 '2.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sup>37)</sup>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즉, (i)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대책('14년)을 이행관리하고, 매년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쉼터 등) 확충 지속 추진한다. (ii)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보호사건' 전담 단독재판부 운영(서울가정법원 5개소)한다. (iii) 특히, 아동학대 발생 유치

35) 박세경, 앞의 논문, 73면; 류정희, 앞의 논문, 10-11면.

36) 관리지표(6))에서 체벌 경험률을 부모25.7%→15.0%, 교사23.7%→15.0%로 각각 낮추는 것으로 하였다.

37)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9조, 학대와 유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더 많은 아동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피해아동을 위해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 가정, 학교 및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것.

원·어린이집 폐쇄와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 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보육 환경 조성한다. (iv) 매년 교사(학원교사 포함)에 의해 훈계·훈육의 허용이 체벌 존속으로 오인<sup>38)</sup>되지 않도록 홍보한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은 이처럼 총 5개 부문에서 걸쳐 16개의 중점과제와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추진의 우선순위가 두어지지 않음에 따라 위기아동보호나 빈곤아동지원 등이 사업이나 특히 당시 공론화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문제, 피해와 사고로 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들은 아동 행복뿐만 아니라 아동생존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up>39)</sup> 따라서 정부는 2013년 울주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sup>40)</sup>,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에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예산확보방안, 추진일정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sup>41)</sup>

### 3. 포용국가 아동정책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 선포와 함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적인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아동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영역에 걸쳐 10대 핵심과제, 40대 소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아동보호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즉 아동보호체계의 전면개편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2> 참조).<sup>42)</sup> 이처럼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강화는 아동보호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서만 존재했던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실제로 실천하도록 하는 체계와 기반의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sup>43)</sup>

38) 2013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부모나 보호자 체벌 30%, 교사 30%, 학원교사 13%로 나타났으며, 도구, 신체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체벌은 전면금지(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개정)되었고, 체벌 외 훈계·훈육방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39) 류정희, 앞의 논문, 18면.

40)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2014.

41)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구체적 이행 성과에 대해서는 박세경, 앞의 논문, 87면 <그림 2> 참조.

42) 류정희,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월간 복지동향」 제249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9.7., 5-6면.

43) 류정희, 앞의 논문(동향), 12면.

<그림 2> 포용국가 아동정책 비전과 핵심과제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 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
보호권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인권·참여권	④ 누락 없는 출생 등록
	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
놀이권	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⑩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제시한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핵심은 시·군·구 아동보호팀의 신설과 아동복지과의 아동보호 기능강화, 즉 지역을 기초로 하는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있으며, 부모로부터 보호·양육되기 어려운 학대피해아동, 요보호아동 등 ‘모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아동복지과가 게이트웨이( doorway )가 되어,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모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과로 하여금 아동의 사례를 직접 상담하고 조사·사정(assessment)하여 아동의 사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sup>44)</sup> 즉, 종래 민간이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며(2020~2022년까지), 따라서 학대사례에 대한 검토와 최종판단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게 된다.<sup>45)</sup>

한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중 하나로 「민법」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sup>46)</sup> 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보고서에 대한 분심의<sup>47)</sup>에서 한국 정부에 대하

44)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 흡수될 예정이다.

45) 류정희, 앞의 논문(동향), 8-9면.

4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9.

여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및 훈육의 위한 체벌의 금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sup>48)</sup>을 고려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여 자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부장제하의 가장의 권한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에도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 평등관계에서 보호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부모에게 자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49)</sup> 뿐만 아니라 자에 대한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설령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에서 체벌금지를 직접 표현하는 것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체벌과 훈육을 구별하는 것<sup>50)</sup>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벌의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부모에 의한 체벌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미 ‘신체적 학대’로 간주되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은 별개로, ‘체벌금지’를 법문에 명시하여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51)</sup>

#### 4. 아동학대정책

정부의 아동학대에 관한 정책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52)</sup> 먼저 (i) 2000년 이전: 아동학대의 ‘개인문제화’ 시기로, 아동학대를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하며 학대가해자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동학대를 훈육의 선상에서 보고 가정 내에서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감독할 책임을 두지 않았다. (ii)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의 ‘사회문제’화 시기로,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기본이념과 책임 등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아동권리 수호의 선상에서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게 되었다.<sup>53)</sup> (iii)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의 ‘범죄’화 시기<sup>54)</sup>로서, 아동학대가 범죄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과거에는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에서 고려했던 것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형법의 영역, 즉 범죄 처벌의 영역으로

47)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대한민국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본심의가 2019. 9. 18. ~ 2019. 9. 19. 이틀간 진행되었다.

48) 참여연대 편집부, “보도자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2019. 9. 20.)”, 「월간 복지동향」 제252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9.10., 61-67면 참조.

49)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동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가 돌보는 대상으로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된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세원,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576면).

50) 체벌과 훈육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세원, 앞의 논문(제39권 제3호), 581면 참조.

51) 강동욱, “부모의 징계로부터 아동은 안전한가. 19년 제1차 아동학대예방 포럼 -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2019.6.5.) 참조. 이세원, 앞의 논문, 593-594면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법」에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되,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므로 처벌규정은 두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52) 이세원,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3호, 보건사회연구원, 2017, 222면.

53) 개정법의 가장 괄목한 만한 변화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아동학대 인프라구축,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이라고 한다(이세원, 앞의 논문(제38권 제3호), 223면).

54) 아동학대처벌법 입법을 통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명백히 범죄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사법의 판단 또한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라고도 한다.

다루고자 했다<sup>55)</sup>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한다.<sup>56)</sup>

## 5. 결어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종래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던 것에서 나아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아동보호를 민간단체 중심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정책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미약하고,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책의 수립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부가 아동학대예방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시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예방적 접근보다는 사후 대처에 대한 접근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7)</sup> 이점에서 이번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보호를 비롯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것은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sup>58)</sup>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충분한 인력의 확보의 어려움, 아동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의 증가, 피해아동이 중심이 아닌 관료중심의 행정의 위험, 중앙정부의 의무회피 우려,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아동관련 민간단체의 역량의 활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의 수립·시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sup>59)</sup>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긴밀한 협력과 통합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sup>60)</sup> 특히 낮은 환경에의 적응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상 사회복지공무원보다는 지역사회의 일원인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아동학대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되는 아동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sup>61)</sup> 다만, 아동학

55)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판례분석에 대해서는 장화정, “아동학대 판례분석 개관”, 국민일보/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주최 아동학대 판례분석을 통한 현황과 개선방안 모세 간담회 자료집(2018.5.28.), 참조.

56) 그러나 법원에서는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판결(W지법 2013고합3\*\*)에서 비로소 아동학대가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회문제로 보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즉 그동안 우리사회가 가정 내 폭력에 대해 관대하거나 무관심해 왔던 것을 인정하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미흡등을 지적하였다고 한다(이세원, 앞의 논문(제38권 제3호), 237면).

57) 박언하, “한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개선방안 : 외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복지교육상담학회, 2018, 346면.

58)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원은 주로 공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다(박언하, 앞의 논문, 339면).

59) 류정희, 앞의 논문(동향), 12면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히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물적 인프라의 확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60) 박혜진,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75-277면.

61) 미국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인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은 아동보호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재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실질적인 아동보호 지원은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지만, 지원 서비스의 책임과 기준은 연방법으

대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보호에 집중하되,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에 의한 개선·교화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하여 ‘원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법정형을 높이거나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 IV. 아동학대에 관한 법제의 제·개정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b>[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b>	
	└ <b>[시행령]</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b>[시행규칙]</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b>[행정규칙]</b>
	└ (예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 <b>[시행령]</b> 아동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
	└ <b>[행정규칙]</b>
	└ (고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법무부)

이들 법률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복지법

###### 가. 아동복지법의 제정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최초로 제정된 법률은「아동복지법」(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시행 1962.1.1.)이다. 동법은 1945년의 해방과 1950년대 6·25 전쟁의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시설수용 중심으로 아동복지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동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

---

로 규정하여 연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박언하, 앞의 논문, 336-337면). 한편, 영국에서도 아동을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적 개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개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즉, 영국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공권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민간기관 간의 협력을 중요시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들로 하여금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마다 아동보호를 위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박언하, 앞의 논문, 341-342면).

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sup>62)</sup>으로 총 29개조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사정이 반영되어 대부분 요보호아동에 대한 생존권보장을 위한 시설보호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친권상실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내용 등, 행정적인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었다.<sup>63)</sup>

## 나.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개정<sup>64)</sup>

### (1) 아동복지법의 제정

「아동복지법」은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법률 제3438호, 1981.4.13. 시행)되면서 그 명칭도 바뀌고, 그 내용도 대폭 수정·보완되었다. 즉, 동법은 “종전의 아동복지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당시의 새로운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 특성, 그리고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sup>65)</sup>이었다.<sup>66)</sup>

동법은 총 39개조로 확대되었는데, 동법에서도 아동학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금지행위(제18조)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제34조)을 두는 한편(<표 3-1> 참조)과 아동에 대한 조사권 부여, 즉 “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수탁자와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제19조)고 한 규정 및 이 조사를 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5조 제1호<sup>67)</sup>)에 지나지 않았다. 이외에 도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그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62)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63)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 제21권 제3호, 한양법학회, 2010, 405면.

64) 자세한 것은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 - 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69-76면; 문영희, “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정책적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03-136면; 문영희,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법학」 제23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2, 215-236면 등 참조.

65)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66) 동법에서는 아동에 대해 ‘복리’의 개념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개념정립이 되었고, 아동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2조에 별도로 둬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에 그친데 반해서,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서의 아동복지법은 여기에서 진일보하여 심신의 발육과정에 있는 일반아동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그 인격적 완성을 기대하는 적극적 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문영희, 앞의 논문(2010), 406면).

67)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표 3-1> 금지행위의 유형과 처벌형량

유 형	처 벌
1.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2.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3. 공중의 오악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4.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5.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6.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7.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8.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9.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 (2) 아동복지법의 개정

### (가) 2000년 개정

2000년 1월 12일 전면개정(법률 제6151호, 2000.7.13. 시행)을 통해 당시의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sup>68)</sup>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sup>69)</sup>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제2조 제4호)라고 정의하였다. (ii)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의 설치(제23조)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68) 1990년대 사회문제로 제기된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매매, 성적 착취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씨랜드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2000년에 제2차로 전문 개정되게 되었다고 한다(문영희, 앞의 논문(2010), 407면 각주 12).

69) 법제처 홈페이지 자료.

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sup>70)71)</sup> (iv)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신고의무자<sup>72)</sup>를 정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의사에 반한 신원노출을 금지시켰다(제26조). (v) 응급조치로서 학대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및 학대행위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해 소정의 보호조치<sup>73)</sup>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7조). (vi) 아동학대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규정을 수사기관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하였다(제28조). (vii) 금지행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제29조), 그 처벌형량을 대폭 높였다(제40조)(<표 3-2> 참조). 이외에 (viii)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제30조), 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2호).<sup>74)</sup> 이외에 (ix)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강제하였다(제12조).

<표 3-2> 금지행위와 처벌형량

유 형	처 벌(제40조)
-----	-----------

- 7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제25조).
- 71)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제38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5호).
- 72)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제26조 제2항).
- 73) 1.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2.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74)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처벌)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나) 2004년 개정

2004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7143호, 2004.7.30 시행)에서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제4조의2), 상습적으로 급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였다(제40조의2).

#### (다) 2005년 개정

2005년 7월 13일 개정(법률 제7591호, 2006.1.14. 시행)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두는 한편(제28조의2, 제28조의3),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였다(제26조의2).

#### (라) 2006년 개정

2006년 9월 27일 개정(법률 제8006호, 2007.3.28. 시행)에서는 (i)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사·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하는 한편(제26조의2), (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

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제2항).

#### (마) 2008년 개정

2008년 6월 13일 개정(법률 제9122호, 2008.12.14. 시행)은 당시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sup>75)</sup>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하여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sup>76)</sup>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의무를 부과하였다(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의 설치<sup>77)</sup>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도록 하였다. (ii)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sup>78)</sup>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sup>79)</sup>을 구분·설치하게 하고, 전자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후자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것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다(제25조).<sup>80)</sup>

75) 2006년 2월 18일 심부름을 하러 갔던 어린이(당시 11세, 여성)가 53세의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어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터에서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인 ‘용산 초등학교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인해 그 당시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성폭력은 잔인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말 공포돼 2008년 10월부터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행적을 추적·감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해 2008년 아동복지법도 개정되었다고 한다(문영형, 앞의 논문(2010), 408면 각주 14) 참조).

76)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77) 당시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1577-1391이 개설되었으나, 현재에는 112로 변경되었다..

7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5조 제1항).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7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동조 제2항).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80) 동 개정에 대하여는 아동의 범위, 아동학대 가해자의 범위,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 (바) 2011년 개정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법률 제11002호, 2012.8.5. 시행)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에서는 법에서는 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법에서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제3조 8호)고 명시하여 피해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편장을 정비하여 제3장(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서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22조-제29조)’를 따로 편성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갖추었다.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제11조). (ii)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외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함으로써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였다(제17조 제10호). (iii)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외에 ‘아동학대’의 경우를 추가하고(제18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였다(제19조). (iv)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제23조). (v)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vi)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제25조 제1항)(〈표 3-3〉 참조), 이들의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제75조 제2항),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제2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71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vii)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하하는 한편,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

범위와 신고기간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내 아동학대 방지와 신고의 미흡, 가해자에 대한 치료 등 개입의 한계, 아동학대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청구제도 미흡,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권한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다(문영희, 앞의 논문(2010), 410-422면).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다(제27조).<sup>81)</sup> (vi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8조). (vi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원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제29조).<sup>82)</sup>

### <표 3-3> 신고의무자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81)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아동학대행위자는 제25조에 따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학대아동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2) 동 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문영희, 앞의 논문(2012), 217-232면 참조.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검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사) 2012년 개정

2012년 10월 22일 개정(법률 제11520호, 2013.1.23. 시행)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75조 제1항 제1호)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아) 2014년 개정

2014년 1월 28일 개정(법률 제12361호, 2014.9.29. 시행)은 같은 날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아동학대관련범죄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제7조의2). (ii)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제15조 제1항 제5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5호의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단서). (iii) 금지행위를 일부 수정하여 정리하였으며(제17조), 일부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제71조 제1항 제1호)(<표 3-4> 참조). (iv)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사무주체를 명확히 하였다(제22조 제2항). (v)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삭제하였다.<sup>83)</sup> (v) 사법경찰관리

83) 따라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제75조 제1항 제3호) 및 신고인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또는 현

로 하여금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상 임시조치의 청구(제14조 제1항)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제27조의2<sup>84</sup>). (vi)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27조의3).<sup>85</sup> (vii)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제28조의2). (v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였다(제29조 제5항). (ix)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조의2). (x)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에 형 확정 후 10년간 소정 기관(<표 3-5> 참조)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sup>86</sup> (xi)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하는 한편(제46조 제1항 제6의2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을 수정추가하였다(동조 제2항 제2호).

#### <표 3-4> 금지행위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sup>87</sup></li> <li>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li> <li>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li> <li>4. 삭제 &lt;2014. 1. 28.&gt;</li> <li>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li> <li>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li> <li>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li> <li>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li> <li>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li> <li>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li> <li>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li> </ol> |
|---|

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7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은 삭제하였다.

- 84)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5) 이를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5조 제1항 제1호).
- 86)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5조 제2항). 다만,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2조).



### <표 3-5> 취업제한 대상기관

<p>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제29조의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li> <li>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li> <li>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li> <li>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li> <li>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li> <li>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li> <li>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li> <li>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li> <li>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li> <li>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li> <li>1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li> <li>1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li> <li>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li> <li>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li> <li>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li> <li>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li> <li>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li> <li>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li> <li>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li> <li>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li> </ol>
--

#### (아) 2015년 개정

2015년 3월 27일 개정(법률 제13259호, 2015.9.28. 시행)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의 가족 구성원 파악을 통한 사후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의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고, 아동학대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며, 아동에 대한 체벌 등의 금지를 명시하려는 것”<sup>88)</sup>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고 명시하였다. (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sup>89)</sup>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87)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1호).

88)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제22조의2). (iii)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소정의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제26조 제2항, 제3항). 만일 이를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75조 제3항 제1의2호).

#### (자) 2016년 개정

2016년 3월 22일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9.23.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sup>90)</sup>으로서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1)</sup>

(i)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8조 제3항). (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제29조의2). (iii)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의 대상기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을 추가하였다(제29조의3<sup>92)</sup> 제21호). (iv)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을 추가하였다(제46조 제2항 제2호). (v)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

89)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90)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이외에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91) 2016년 개정의 입법경위 및 개정내용의 평가에 대해서는 문영희, 앞의 논문(2016), 108-131면 참조.

92)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부칙 제2조).

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53조의2).

### (차) 2017년 1차 개정

2017년 9월 19일 개정(법률 제14887호, 2017.12.20. 시행)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sup>93)</sup>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기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하였다(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제22호), (ii)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였다(제29조의4 제1항)(<표 3-6> 참조).

<표 3-6>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 의한 취업점검 대상기관

1. 교육부장관 : 제29조의3 제1항 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 제29조의3제1항 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 제29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 제29조의3 제1항 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 제29조의3 제1항 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신설)

### (카) 2017년 2차 개정

2017년 10월 24일 개정(법률 제14925호, 2018.4.25. 시행<sup>94)</sup>)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sup>95)</sup>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sup>96)</sup>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아동

93)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94) 제26조의2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96)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였다(제22조의2). (ii)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위의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의2).<sup>97)</sup> (iii)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소정의 관련기관의 장<sup>98)</sup>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8조의2 제3항)<sup>99)</sup>,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sup>100)</sup> (iv)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제29조의6). (v)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가족·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제29조의7).<sup>101)</sup> (vi)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상담원 직무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으로 확대하고(제46조 제5호), (vii)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동조 제3항).

97)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의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98)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99)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동항 단서).

100) 이때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동조 제5항), 이를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71조 제2항 제2의2호).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동조 제6항).

101)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조 제3항)

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되,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6조의2 제1항).<sup>102)</sup> (viii)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제65조의2).<sup>103)</sup> (ix) 금지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징역형에 비례(1년에 1천만원으로)하여 상향조정하였다(제71조 제1항).

#### (타) 2018년 개정

2018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15889호, 2018. 12.11. 시행)은 당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후 등부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2018년 6월 28일 위헌결정(2017헌마130<sup>104)</sup>)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102)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동조 제2항). 한편,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동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71조 제2항 제2의3호).

103)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동조 제2항).

104)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가운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즉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은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8.06.28. 선고 2017헌마130, 405, 989(병합))고 하였다.

때 최장 10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험성을 해소하고,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대상에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도 법률에 포함하려는 것<sup>105)</sup>이고,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sup>106)</sup>을 추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sup>105)</sup>이었다.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였다(제22조의3). (ii)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추가하였다(제29조의3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iii)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즉,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이때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이외에도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sup>106)</sup> (iv)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속하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였다(제29조의4 제1항).

105)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106) 취업제한 대상기관(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또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5항). 이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 (파) 2019년 제1차 개정

2019년 1월 15일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7.16. 시행)에서는 당시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07)</sup>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아동권리보장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제10조의2)를 마련하는 한편, 그 업무 중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시키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sup>108)</sup>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제22조 제3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 (ii) 아동권리보장원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한편(제29조의3 제1항 제1호),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의 조치의 주체(제22조의3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등의 통보대상(제27조의2), 피해아동이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제27조의3), 사후관리(제28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요청 주체(제28조의2 제2항),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주체(제2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주체(제29조의2),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등의 요청 주체(제29조의6 제2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요청 주체(제29조의7 제2항) 등에 있어서 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시켰다. (iii)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에 흡수됨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제45조 제1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였다(동조 제2항).

## (하) 소결

우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동복지법은 거의 매년 개정을 해오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시마다 사실상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은 많이 보완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을 개정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복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107)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108)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의 대상으로 하고, 아동학대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 사회복지적 접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통일하고, 아동 복지법상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으로 이관하는 것도 실효적인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 2. 아동학대범죄특별법

### 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과정<sup>109)</sup>

2012년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언론보도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아동복지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조치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서 피해아동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2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사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소관의 특례법 제정을 제의하였다. 이에 2012년 5월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사건처리는 법무부 소관으로 하는 가칭 ‘아동학대사건처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2012년 6월 20일 새누리당에서는 ‘아동 학대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 안홍준 의원)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반적 법률 제·개정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와 연계하여 동년 7월-8월 사이에 새누리당 특위와 당정간담회 및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관련법(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등)의 개정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동년 9월 4일 안홍준의원 대표발의로 하여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제1542호)과 더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안번호 제1560호)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 4장 6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유형과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한 것이었다.

이후 2013년 2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시 제출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종합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들 법률이 동년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고, 동월 23일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의 의결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법률안이 수정 의결되고, 동년 12월 3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을 공포하고, 2014년 9월 29일부터

109)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아동보호연구」 창간호, 한국아동보호학회, 2016, 110-112면 참조.



시행하였다.

## 나. 법의 구성과 성격

### (1) 법의 구성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제정당시 총 6장 전문 6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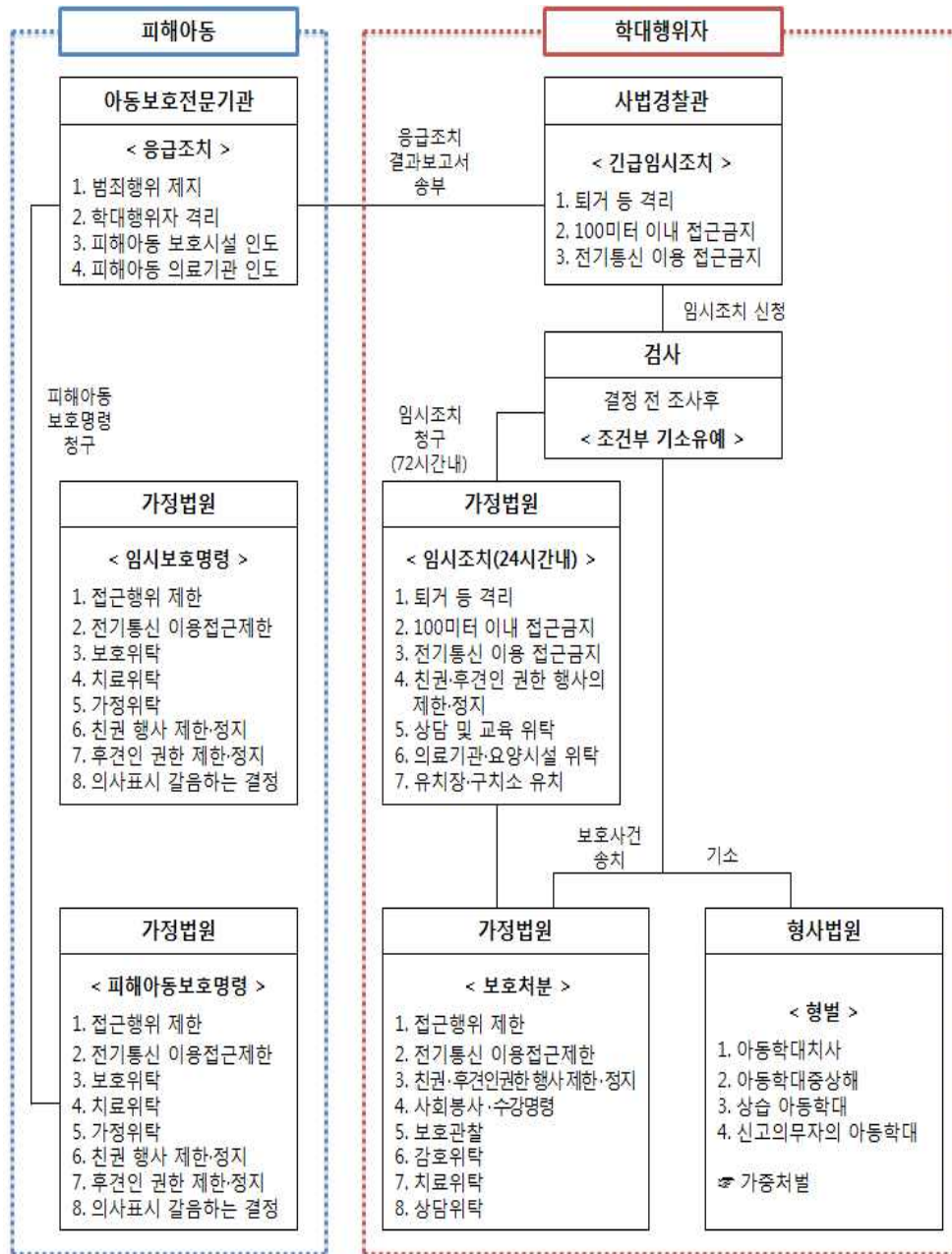
구 성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제9조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7조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18조-제45조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제58조
제6장 벌칙	제59조-제64조
부 칙	

동법은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sup>110)</sup>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및 주체와 대상의 제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아동학대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 상습범과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중처벌)과 보호처분(수강명령, 이수명령, 친권상실청구 등)의 도입,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마련,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처리절차 마련,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종전에 아동복지법에 두었던 신고의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동법에서 규정하였다.

한편,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 다만, 아동학대범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3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0) 법제처 제정이유 참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 (2) 법의 형식과 성격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

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제4조-제8조)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해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그 조사·심리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제4장, 제5장)에 있어서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을 사실상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을 융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명칭도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은 아동학대범죄와 그 사법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법은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의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률로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래에는 동법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하고 학대행위자의 형사사법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특별법으로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sup>111)</sup>

## 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개정

### (1) 1차 개정

동법은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법률 제14172호)되어 동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개정에서는 4개조가 추가되었다. 즉,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제66조의2)하는 한편, 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제10조의3)하여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고소특례제도(제10조의4)를 마련하여 부모 등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

111)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59면;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65-166면 등.

한 특례를 규정(제27조 제2항)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2차 개정

동법은 2017년 12월 19일 일부 개정(법률 제15255호)되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이 없음을 고려하여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규정(제47조 제1항 제5호의2)을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동조 제6항)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되었다(시행 2018. 6. 20.).

한편,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9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제59조 제3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시행 2017. 12. 19.).

## 라. 소결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사건에의 조기개입과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으로의 회복과 가족구성원 간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현장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피해아동의 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아동학대사건의 형사사법절차에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비하여 피해아동의 구제와 지원 및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이 미흡한 점도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보완이 이루어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취지가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sup>112)</sup>

112) 동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5-50면;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장출동 및 조사·질문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2017, 77-118면;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 경찰대학, 2017, 9-34면;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3-127면;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법학연구』 제22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62-268면; 정익중 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법무부/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현소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399-417면 등 참조.

## V. 맺음말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사회에 충격을 준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법제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오늘날 가정내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인 개입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되었으며,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동반자적 입장과 감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고,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에서 나아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sup>1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고통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며, 아동학대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아동학대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나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당시에 발생한 심각한 일부 아동학대사건에 따른 여론을 반영하여 대증요법처럼 만들어진 것에 따른 것이어서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의 실효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호자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를 깨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여 ‘아동학대범죄’로 하고, 이에 대해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밀접한 관계성, 피해아동의 독자적인 생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복지관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종합적인 연계와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법제를 마련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정책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민간단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민간단체가 행하여져 오던 것을 축소하고 국가주도로 진행하려는 것과 여전히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13) 이세원, 앞의 논문(제38권 제3호), 221면.

## <참고문헌>

-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 - 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
- 강동욱, “부모의 징계로부터 아동은 안전한가. 19년 제1차 아동학대예방 포럼 -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2019.6.5.).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장출동 및 조사·질문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2017.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 경찰대학, 2017.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해설”, 「아동보호연구」 창간호, 한국아동보호학회, 2016
- ,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법학연구」 제22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류정희,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월간 복지동향」 제249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9.7.
- ,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33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3.
- 문영희, “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정책적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법학」 제37호, 한양법학회, 2012
- ,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 제21권 제3호, 한양법학회, 2010.
- 박세경,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추진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58권, 보건사회연구원 2018.4.
- 박언하, “한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개선방안 : 외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복지교육상담학회, 2018.
- 박혜진,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이세원,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세원,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3호, 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화정, “아동학대 판례분석 개관”, 국민일보/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주최 아동학대 판례분석을 통한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자료집(2018.5.28.)

정익중 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법무부/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참여연대 편집부, “보도자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2019. 9. 20.)”, 「월간 복지동향」 제252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9.10.

최성은, “한국의 아동보호정책의 형성과 변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2018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2018.10.30.) 자료집.

현소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201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9.